

희망이 사는 농촌, 미래를 여는 농업인

2007. 3.



 농림부  해양수산부  재정경제부  교육인적자원부  행정자치부
 문화관광부  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여성가족부

보 고 순 서

I 참여정부 농정의 성과 1

- 1. UR이후 농정의 대응과 평가 3
- 2. 참여정부 농정 4년의 노력과 성과 7
- 3. 농정의 현좌표 21

II 수요자별 정책 성과 31

- 1. 농업인 33
 - ① 농업인도 이제 전문경영인으로 거듭납니다.
 - ② 소득불안에 대한 걱정이 줄었습니다.
 - ③ 자연재해에도 점차 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④ 부채부담이 한결 가벼워지고 있습니다.
 - ⑤ 고품질 농산물 브랜드 마케팅에 눈떴습니다.
 - ⑥ 농업정책이 현장에서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 ⑦ 여성도 당당한 경영 주체입니다.



2. 품목별 농업인 67

2-1. 쌀 농업인 68

- ① 개방에 대비할 새로운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 ② 우리 쌀 품질이 향상되고 있습니다.
- ③ 쌀값은 떨어져도 쌀 농업인의 소득은 안정되었습니다.

2-2. 원예 농업인 76

- ① 품질좋은 농산물로 세계시장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 ② 수급·재해에 따른 소득불안이 크게 줄었습니다.

2-3. 축산 농업인 83

- ① 세계수준의 품질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 ② 경영위험 및 수급변동에 관한 걱정이 줄었습니다.

3. 농촌 주민 92

- ① 질병과 노후에 대한 걱정을 한층 덜게 되었습니다.
- ② 출생에서 대학까지 자녀 교육 걱정이 줄었습니다.
- ③ 농촌생활이 더욱 편리해지고 있습니다.
- ④ 찾아오는 도시민으로 마을에 활기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 ⑤ 향토자원으로 농촌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4. 소비자 120

- ① 선진 농식품 안전제도로 안심하게 되었습니다.
- ② 다양한 먹거리를 손쉽게 구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희망이 사는 농촌, 미래를 여는 농업인

Ⅲ 2007년 업무추진 계획 131

1. 2007년 농정여건 전망.....	133
2. 2007년 농정추진체계 및 중점 추진과제	134
과제 1 : 농업협상 대응 및 국내대책 보완	135
과제 2 : 맞춤형 농정 추진체계 정립	140
과제 3 : 식품산업 육성 및 농식품 수출확대	142
과제 4 : 고품질 농산물 생산·유통·판매 지원	145
과제 5 : 농식품 안전관리 시스템 및 가축방역	149
과제 6 : 자연순환형 친환경농업 육성	154
과제 7 : 농업인의 소득 향상 및 경영안정 제도 강화.....	156
과제 8 : 농촌지역개발 추진 및 의료·교육·복지여건 개선	160
과제 9 : 도농교류 촉진 및 농촌자원의 산업화	162

Ⅳ 2030년 우리 농업·농촌의 모습 167

1. 비전 2030 추진체계	169
2. 미래 우리 농업·농촌의 모습	170

참여정부 농정의 성과

I

1. UR이후 농정의 대응과 평가

2. 참여정부 농정 4년의 노력과 성과

3. 농정의 현좌표

역대 농정 개관

구 분	여 건	정책 방향	성 과	한 계
● 문민 정부 (‘93~‘97)	UR타결	◦농어촌 구조개선대책 -생산기반 구축 -전업농 육성	◦주곡의 안정적 자금 달성 ◦농업구조개선 진전	◦경영안정장치 미흡 ◦도·농간 생활 환경격차 확대
● 국민의정부 (‘98~‘02)	외환위기	◦농업·농촌발전계획 -농가경영안정 -유통H/W 확충	◦유통구조 선진화	◦농업인 자생력 미비



● 참여정부 4년 (‘03~‘06)	쌀협상 FTA/DDA 등 개방확대	◦농업·농촌 종합대책 -양정제도 개편 -유통S/W 개선 -직불제 확충 -농촌 의료·복지· 지역개발 ◦중장기 투융자계획 수립·추진 ◦농식품육성 및 안전성 정책 본격 추진	◦농업구조개선 가속화 ◦소득 정책 본격화 ◦1사1촌 운동 등 도농교류 및 지역균형 발전 여건 조성 ◦농업인·지자체의 농정 참여 확대	◦농업종사자 인구 감소 추세 지속 ◦계층간 농업소득 양극화 심화 ◦개방 확대에 의한 불안감 확산
------------------------	--------------------------	--	--	--

(1) 문민정부

■ '93년 UR타결 이후 본격적인 개방화로 접어들면서 우리 농업의 경쟁력 확보가 농정의 시급한 과제로 인식되었습니다.

- 이미 기반정비가 완료된 선진국에 비해 농업생산기반, 유통시설 등 농업경쟁력의 바탕이 되는 인프라가 크게 부족하여 농업 SOC 구축 등 경쟁력 제고사업에 집중 투자

* '93년 : 경지정리율 43%, 배수개선율 34%, 도매시장 8개소

■ '94년 농어촌 발전대책, 농특세 신설을 바탕으로 전업농 중심의 규모화 정책 등 선진국형 농업인프라 구축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 전업농 및 법인경영체 육성, 농지법 제정('94)으로 농업법인의 농지소유 허용 및 진흥지역내 소유상한 폐지 등 경영 규모화 촉진
- 대구획 경지정리, 수리시설 확충,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등 효율적인 영농 기반을 구축하고 시설온실, 축사 등 생산시설 현대화 및 기계화도 추진
- 농특세를 재원으로 농어민연금제 도입('95), 농어촌의료시설 지원, 농공단지 등 농어촌 소득원개발 사업을 추진
- 양정제도에서는 수확기 매입 물량·가격을 미리 예시하는 추곡 약정수매제가 도입('97)되었고 민간유통기능 활성화를 위해 쌀값의 계절진폭을 15%까지 허용

[2] 국민의 정부

■ '97년말에 발생한 외환위기는 농산물 생산비 급증과 소비위축 및 가격하락을 유발하여 농가 경영불안이 고조되었습니다.

- 특히, 금리의 급상승은 규모화 추진에 따른 농가들의 차입금 부담 증가로 이어져 농가부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어 농가 경영회생 및 부채대책 등 농가경영안정이 최우선 과제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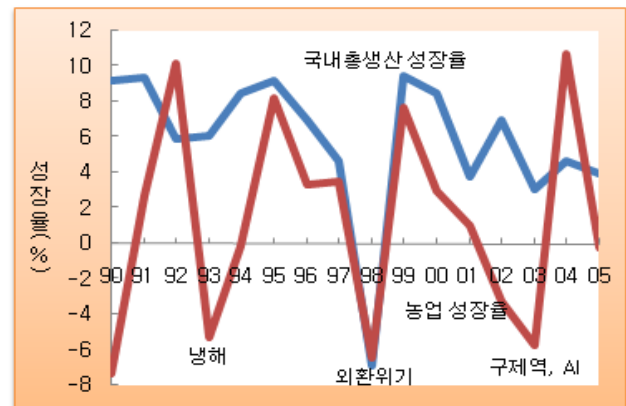
■ 농업·농촌 발전계획('98), 농업·농촌기본법 제정('99)을 기반으로 농가 경영안정과 유통구조 혁신, 농업관련 조직 정비를 중점 추진하였습니다.

- 부채경감특별법 제정('01) 등 '98~'01년간 6차례의 부채대책을 실시하고, 영농자재 부가세 환급 등 조세감면을 확대
 - '94년 이후 동결기조를 유지해왔던 추곡수매가를 다시 인상('98~'01)
 - 논농업 직불제, 농작물 재해보험('01) 등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한 새로운 제도 도입 시작
- 유통 H/W 건설, 친환경농업 확산 등 추진
 - 도매시장·유통센터 건설과 함께 작목반, 산지유통전문조직('00) 등 생산자 조직화 및 전문화된 산지유통주체 육성
 - 친환경농산물 인증제 도입,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계획 수립('01) 등 친환경 안전농산물 공급체계 구축
- 농진공·농조·농조연을 통합한 농업기반공사 출범('00.1), 농·축·인삼협중앙회 통합('00.7) 등 농정 관련기관을 대대적으로 정비

■ UR 타결 당시 팽배했던 불안감에도 불구하고 관세에 의한 국경 보호와 생산성 향상으로 시장개방 영향을 최소화하였습니다.

○ UR 이후('94~'02) 농축산물 수입 증가율(41%)은 이전('86~'94) 증가율(392%)보다 크게 낮은 수준

○ 농업성장율은 UR 등 개방화 요인보다는 자연재해, 가축 질병 등에 따라 크게 변화



■ 생산기반 정비, 시설 현대화 및 기계화의 진전 등으로 노동 생산성('94~'02)은 연평균 5.1%, 토지생산성은 1.7% 증가하였습니다.

○ 품질인증·포장규격화 및 브랜드화 촉진 등 유통구조도 개선

* 진흥지역 논 경지정리율/수리답률 : ('94) 71.1% / 74.0% → ('02) 81.8 / 77.3

* 품질인증 농산물 : ('94) 640건(20천 호) → ('02) 1,154건(56천 호)

■ 기반정비가 완료된 선진국과 달리 생산기반 정비와 소득안정 병행 추진에 따른 한계로 소득·경영안정 장치가 다소 미흡하였습니다.

○ 직불제, 재해보험 등이 도입되었으나 초기 단계로 재해 등 경영 위기사 회생수단이 부족

■ 농업 경쟁력 강화에 치중하여 농촌복지 분야에 대한 투자가 상대적으로 부족했습니다.

○ 교육·의료·주거환경 등에 있어서의 도농간 격차가 확대되었고 농촌 인구가 급격히 감소되는 등 농촌활력도 저하

가 참여정부 출범시 당면 여건

■ 한·칠레 FTA, 쌀협상 등 개방 확대 움직임 속에서 농가소득은 정체되고 농업인들의 불안감은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 '02년 호당 농가소득은 24,475천원으로 IMF 외환위기 이전 소득 수준('97 : 23,488천원)으로 겨우 회복한 상태로 도농간 소득격차는 '94년 99.5%에서 '02년 73.0%로 지속적인 하락 추세

■ WTO 협정에 따른 국내보조금 감축과 과잉생산 기조에 따라 공급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의 농정으로 전환이 요구되었습니다.

- WTO보조금 감축(매년 750억원)으로 '95년 생산량의 29%를 차지 하던 추곡수매 물량이 '04년에는 14%로 감소하는 등 가격지지 정책이 더 이상 효과를 나타내기 어려운 상황
- 농업생산성 향상, 수입물량 증가, 국내 소비량 감소로 인한 과잉 생산구조 속에서 생산중심의 기존 정책들의 전환이 필요

■ 농촌에서는 고령화가 진전되는 가운데 농촌 인구도 급속히 감소 하는 등 농촌사회의 활력이 저하되었습니다.

- 농촌의 열악한 생활여건은 농촌인구 감소를 유발하고 인구 감소는 농촌에 대한 투자효율성 저하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

* 인구 3천명 이하 面(전체 1,224개) : ('90) 152개 → ('00) 447

나 참여정부 농정의 패러다임 전환



□□ 정책대상 : 농업 ⇒ 식품 · 농업 · 농촌

- 농업부문에 편중된 정책의 관심을 농업 · 식품 · 농촌으로 확대하여 개방화시대 농업 · 농촌 문제에 전방위적으로 대응

□□ 정책추진 : 정부주도 ⇒ 생산자 · 소비자 · 정부 상호협력

- 개방화시대 정부가 모든 농업 · 농촌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 정부 · 농업인 · 생산자단체 · 소비자 · 지자체 등 주체간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적극적인 역할 수행을 유도

□□ 투융자 : SOC 중심 ⇒ 소득 · 복지 · 지역개발

- 그간 성과를 바탕으로 직불제 등 소득안정 및 복지지원, 농촌지역개발, 전문농업경영체를 중심으로 고부가가치 기술농업 육성을 중점 지원
- 상당 수준 마무리된 생산기반정비 등에 대한 투융자는 축소하되, 노후시설 개보수 · 배수개선 등 재해예방 위주로 내실화

□□ 경영안정 : 가격지지, 부채경감 ⇒ 직불제, 재해보험, 경영회생지원

- 개방확대로 인한 농가소득 감소는 가격지지 정책 대신 다양한 직접지불제 도입 등 직접적인 소득보전정책으로 대응
 - 소비자 부담방식에서 재정(납세자) 부담방식의 정책으로 전환됨에 따라 농정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중요한 과제로 부각
- 농가부채 문제는 상환기간 연장, 금리 인하 등 임기응변식 대응 방식에서 벗어나 재해에 대해서는 보험방식으로 사전 예방하고 사후적인 부채문제는 경영회생지원으로 대응

□□ 농업정책 : 생산 중심 ⇒ 소비자 안전 · 품질 중심

- 국내생산성 증대, 수입물량 증가 등에 따라 농업정책의 중심을 量의 문제에서 質의 문제로 전환
- 「농장에서 식탁까지」 농식품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소비자가 신뢰하는 안전한 먹거리 공급에 역점

□□ 농촌성격 : 농업생산 공간 ⇒ 농업인 · 도시민의 복합생활공간

- 농촌을 농업생산, 정주, 휴양공간 등 농업인과 도시민의 복합생활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농촌개발 추진

	참여정부 이전	참여정부 이후	대표지표 성과
농업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기관주도 생산기술 중심의 농업인 교육 ▪ 직접지불제 도입 - 논 농업 직불제, 경영이양직불제 등 ▪ 금리인하·상환연기 등 단기부채대책 ▪ 친환경농업기반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차원의 다양한 기술경영마케팅교육 ▪ 직접지불제 본격화 - 조건불리, 쌀소득 보전직불제 도입 ▪ 경영회생지원 등 근본적 부채대책 ▪ 친환경농업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농 소득 격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2년 73% ↓ ▶ 2005년 78% ◆농식품 수출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2년 1,639백만불 ↓ ▶ 2006년 2,307백만불 ◆친환경농산물 비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2년 1.1% ↓ ▶ 2006년 6.2%
쌀 농업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곡수매가 인상 등 가격지지 방식의 소득정책 추진 ▪ 증산을 위한 화학비료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쌀소득보전직불제 등 소득지원 강화 ▪ 화학비료 지원을 중단, 유기질 비료 지원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쌀 직불금 수령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2년 467천원/ha ↓ ▶ 2006년 1,160천원/ha ◆질소질비료 시용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2년 15.4kg/10a ↓ ▶ 2006년 9.5kg/10a
농협 농업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규모의 생산·유통조직 육성 ▪ 농작물 재해보험 시범사업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유통조직의 광역화·전문화 추진 ▪ 거대재해에 대응, 국가재보험 제도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동마케팅 조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2년 - ↓ ▶ 2006년 15개 ◆농작물재해보험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2년 2개 품목 ↓ ▶ 2006년 7개 품목

축산 농업인

- 축사시설·장비 등 H/W 중심의 개선
- 가축계열화 사업을 통한 조직화, 규모화



- 우수 축산물 브랜드 인증 등 품질 경쟁력 제고
- 환경과 조화된 축산을 위한 자연 순환 농업 추진

◆한우 1등급 출현율

- ▶ 2002년 35.2%
- ↓
- ▶ 2006년 44.5%

◆축산농가 소득

- ▶ 2002년 31,512천원
- ↓
- ▶ 2005년 44,061천원

농촌 주민

- 개별부처 차원의 농촌정책
- 개별사업 단위로 마을 환경을 개선하는 하향식 개발
- 일시적 지원을 위한 기업, 단체의 농촌 마을 방문



- 삶의질특별법 제정, 범정부 차원의 농촌 복지·교육·지역개발
- 생활관영농권이 같은 소권역 단위의 상향식 개발
- 1사1촌 운동 등 도농교류 활성화

◆건강보험료 경감율

- ▶ 2002년 22%
- ↓
- ▶ 2006년 50%

◆농어촌대학특별전형

- ▶ 2002년 10,149명
- ↓
- ▶ 2006년 13,460명

◆1사1촌 자매결연

- ▶ 2002년 -
- ↓
- ▶ 2006년 15천건

소비자

- 농산물 가격안정 중시 정책
- 일부 도축장·가공장에만 HACCP 적용
- 가공·판매단계의 원산지표시제 정착



- GAP, 이력추적제 등 식품안전성 제도 신규 도입
- 농장에서 판매까지 HACCP 전단계 적용
- 음식점 단계에서의 원산지 표시제 도입

◆HACCP 적용 작업장

- ▶ 2002년 107개
- ↓
- ▶ 2006년 572개

◆이력추적 등록농가

- ▶ 2002년 -
- ↓
- ▶ 2006년 8,808호

◆원산지 명예감시원

- ▶ 2002년 2,600명
- ↓
- ▶ 2006년 25,353명

농정일반

연도	주요 법·제도 개선	효 과
2003	▪ 농어촌특별세법 개정	▪ '14년까지 농특세 시한 연장 - 농촌복지 및 지역개발 재원 확보
	▪ 농어업인부채경감에 관한 특별 조치법 개정('03, '04, '05)	▪ 정책자금 금리인하 및 상환기간 연장
2004	▪ 농업·농촌 종합대책 수립	▪ 중장기 농정방향 및 로드맵 제시 - '04~'13년, 119조원 투융자
	▪ 농업협동조합법 개정	▪ 협동조합 경제사업 활성화
	▪ 제1차 농업경영체 활성화 방안	▪ 농업소득세 한시 면제, 농업법인에 대한 비농업인 출자비율 완화 등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 친환경농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2005	▪ 농지법 개정	▪ 농지은행 제도 도입 ▪ 농지임대 허용범위 확대
	▪ 여성농어업인육성법 개정	▪ 지역실정에 맞는 여성농업인정책 수립
	▪ 야생동·식물보호법 제정	▪ 야생동물에 의한 농어민 피해 예방 및 보상 규정 신설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개정	▪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 하향조정
2006	▪ 농어업인부채경감에 관한 특별 조치법 개정	▪ '01년 상호금융 저리대체 자금 상환기간 연장
	▪ 농신보법 시행규칙 개정	▪ 출연요율 인상 및 출연기관 확대로 농어업인 보증지원 재원 확충
	▪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 농지매입 경영회생 지원사업 도입
	▪ 농업교육체계 개편	▪ 민간중심의 기술·경영교육으로 전환
	▪ 제2차 농업경영체 활성화 방안	▪ Inno-biz인증체계에 농업분야 신설 ▪ 농업법인 법인세 감면시한 연장
	▪ 친환경농업육성법 개정	▪ 친환경농산물 인증 단계를 간소화하고 무항생제 축산물 신설
	▪ 농지법 개정	▪ 농지에 축산시설 설치 규제 완화
	▪ 풍수해보험법 제정	▪ 농업용시설에 대한 보험제도 도입

■ **개방화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농업·농촌 종합대책('04~'13년간 119조원 투융자를 수립·추진하였습니다.**

- 농업중심의 농정방향을 전업농 육성 등 산업정책, 경영안정 등 소득정책, 복지인프라 확충 등 농촌정책으로 세분화
- 재원마련을 위해 농특세법을 개정, '14년까지 농특세 시한 연장

■ **종합적인 농지관리 기구로서 농지은행 제도를 도입하는 등 변화된 환경에 맞게 농지제도를 개편하였습니다.**

- 농지임대 허용 범위 확대, 농업회사법인의 농지소유 요건 등 규제 완화
- 농지은행을 통해 부채로 생산수단 상실위기에 처한 농가를 대상으로 농지매입 경영회생지원사업 실시
 - * 부채농가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재임대, 영농지속 및 환매권 보장

■ **협동조합의 효율성·전문성이 높아지고, 경제사업 활성화 여건이 마련되었습니다.**

- 농협의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해 중앙회의 부서별 책임경영체제 구축 및 일선조합 경제사업 활성화 추진

■ **개방화 시대에 경쟁력있는 농업인 육성을 위해 '06년부터 농업인 교육이 현장 중심의 맞춤형교육으로 전면 혁신하였습니다.**

- 품목단체·기술센터·대학 등을 통해 농업인 수준에 맞는 다양한 기술·경영·마케팅 교육 추진('02 : 28억원 → '06 : 122)

■ **농촌 현장에서도 농정에 보다 적극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농업정책 제안 및 성공사례 공모 등 '우리농업 희망찾기운동' 본격 추진
- 농림공직자의 현장체험학습 및 농가자매결연 등을 통해 현장감 있는 농정시책 수립·집행 노력 강화

쌀 농업

시기	주요 법·제도 개선	효 과
2003	▪ 추곡 수매가격 동결(∼'04)	▪ '01년까지 인상하던 수매가 동결로 국내외 가격차 확대 최소화
	▪ 생산조정제 도입·운영(∼'05)	▪ 약 100만석 수준의 생산 감축으로 공급 과잉 기조를 완화
2005	▪ 쌀소득등의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	▪ 쌀값 하락시 목표가격과 산지 쌀값과의 차액 85%를 보전
	▪ 양곡관리법 개정	▪ 추곡수매제를 폐지하고 시장가격으로 매입·방출하는 공공비축제 도입
	▪ 쌀협상 국회 비준	▪ '05∼'14년까지 관세화 유예 추가 연장
	▪ 쌀 품질고급화 보완대책 수립	▪ 고품질 쌀 생산대책 추진
2006	▪ 식품위생법 개정	▪ '08년부터 쌀의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시행
	▪ 쌀 우수 브랜드 육성대책 수립	▪ 대표 쌀브랜드 100개 육성 추진

■ 쌀협상으로 개방을 준비할 시간을 10년 더 갖게 되었습니다.

- 9개국과의 협상을 통해 관세화 유예를 10년 연장하는 대신 의무 수입물량을 증량, 쌀 경쟁력 제고 기회를 확보

■ 추곡수매제를 시장지향적 공공비축제도로 개편하고 소득보전 제도가 도입되어 쌀값이 떨어져도 농가 소득이 안정되었습니다.

- 시장가격으로 매입·방출하는 공공비축제 도입(864천톤(600만석) 수준 비축)
- 쌀값하락에 따른 농가소득 감소는 쌀소득보전직불제로 보완
 - 목표가격(170,083원/80kg)과 수확기 전국 평균 산지 쌀값과의 차액의 85%를 농가에게 직접지불금으로 보전

■ 우리 쌀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고품질 쌀생산 및 우수 브랜드 육성대책을 수립·추진하고 있습니다.

원에 농업

시기	주요 법·제도 개선	효 과
2004	▪ FTA 지원특별법 제정	▪ 1조2천억원의 FTA기금을 설치하고 과수 산업 발전대책 추진
2005	▪ 농작물재해보험법 개정	▪ 농작물재해보험기금 설치 ▪ 국가재보험제도 도입
	▪ 공동마케팅조직 도입	▪ 공동출하조직 등을 기반으로 전문경영·광역화된 사업권역 구성
	▪ 농안법 시행령 개정	▪ 자조금 거출한도액 상향조정으로 자조금 사업규모 확대
	▪ 농산물 물류혁신대책 수립	▪ '06년부터 배추·무 규격출하 및 포장화 시범추진
2006	▪ 원에 농산물 우수 브랜드 육성 대책 수립	▪ 시군단위 차별화된 지역공동브랜드 50 개소 육성 추진

■ 과수농가의 경쟁력 제고 및 경영 안정을 위해 FTA지원특별법을 제정하고 FTA기금을 설치하였습니다.

- '04~'10년까지 7년간 1조2천억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과수 생산 유통지원사업, 과원규모화사업, 폐업지원사업 등 추진

■ 산지유통 주체의 규모화·조직화로 시장교섭력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 매출액 100억원 이상 연합판매조직을 공동마케팅조직으로 지정 ('06년까지 15개)하여 운영자금, 마케팅 지원 등으로 산지유통능력 확대

■ 농작물재해보험에 국가재보험제도 도입으로 거대 재해가 발생 하더라도 더욱 안심하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빈발하는 거대 재해에 대응하여 안정적인 보험운용을 위해 '05년부터 국가가 위험의 일부를 책임지는 국가재보험제도를 도입

축산 농업

시기	주요 법·제도 개선	효 과
2003	▪ 원유 생산감축 대책 추진	▪ 잉여원유 감소로 인해 우유수급 안정화 도모
2004	▪ 축산물 브랜드 육성 종합계획 수립	▪ 브랜드 인증 등 품질경쟁력을 바탕으로 소비자 인지도 제고
	▪ 가축방역종합대책 수립	▪ 악성 가축질병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 전략 마련
2005	▪ 가축질병위기대응 매뉴얼 마련	▪ 인수공통전염병에 대한 관계부처와의 합동 대처방안 수립
2006	▪ 공익수의사에 관한 법률 제정 ▪ 병역법 개정	▪ '07년부터 공익수의사 제도 시행
	▪ 자연순환 농업대책 수립	▪ 퇴·액비를 농경지에 환원하는 자연 순환농업 추진
	▪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제정	▪ 자연순환형 친환경 축산기반 구축
	▪ 농지법 개정	▪ 농지에 축사시설 설치 규제 완화

■ 축산업의 경쟁력제고를 위해 우수 브랜드 경영체를 중점 육성하고 있습니다.

- 일정규모 이상 농가 조직화, 품질·위생관리 브랜드 규약 제정 등 일정기준을 갖춘 경영체를 선발('04~'06년간 73개)하여 집중 지원
- '05년부터 소비자단체와 함께 우수 브랜드 인증 추진

■ 악성 가축질병에 대응하여 체계적 방역시스템이 구축되고 있습니다.

- 가축방역종합대책을 수립하여 방역체계 기틀을 마련하였고, 인수공통 전염병에 대한 범정부차원의 대처방안 수립
- 지방자치단체의 방역인력 증원 및 공익수의사 도입 추진

■ 친환경 축산을 위해 가축분뇨 자원화 등 자연순환농업 활성화 대책이 수립·추진되고 있습니다.

시기	주요 법·제도 개선	효 과
2003	▪ 지방세법 개정	▪ 양도세 부과 1가구 1주택 산정시 농가 주택 제외
	▪ 1사1촌 자매결연 추진	▪ 기업·단체와 농촌마을간 자매결연으로 도농상생 도모
2004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	▪ 농어업인 보건의료 및 복지지원 확대
	▪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특별법 제정	▪ 범정부 차원의 농어촌 복지·교육·지역 개발 본격추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 농어촌지역 기초생활 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 '06부터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에 대해서도 지원 확대	▪ 농업인의 보육 부담 완화
2005	▪ 농어촌 복합생활공간 조성 추진	▪ 쾌적한 정주공간과 교육·복지·문화 등 서비스 연계
	▪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 농어촌특별전형의 정원외 입학비율을 3%에서 4%로 확대
	▪ 농어촌 보육시설 설치 지침 개정	▪ 국공립 보육시설 설치시 농산어촌에 우선적으로 설치
2006	▪ 농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제도 도입	▪ 체험프로그램 개발 등 체험마을 운영 원활화
	▪ 농어촌복합체육시설 설치 지원	▪ 읍면 지역에 복합체육시설 설치
	▪ 농어촌 순회교사수당 및 복식 수업수당 지급규정 제정	▪ 농어촌 교원중 순회교사 및 복식수업 담당교사 수당 지급
	▪ 교장 초빙·공모제 시범운영	▪ 농어촌 학교에 유능한 교장 임용
	▪ 학교급식법 개정	▪ 농어촌지역 초등학생 대상의 급식비 지원을 중·고등학생까지 확대

■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 제정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농어촌 복지·교육·지역개발이 추진되게 되었습니다.

-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15개 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위원회를 구성하고 5개년 기본계획('05~'09, 20.3조원 투입) 수립·추진

■ **도농교류가 확산되고 농촌이 농업인과 도시민이 더불어 정주할 수 있는 복합생활 공간으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 1사1촌 자매결연 건수 및 농산물 직거래 금액 등 관광 매출액도 증가
 - * 1사 1촌 자매결연 건수 : ('04) 2,404건 → ('06) 14,498건
 - * 농산물직거래 등 금액 : ('04) 36억원 → ('06) 1,400억원
- 농촌을 가서 살고 싶은 매력 있는 공간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농어촌 복합생활공간 조성방안('05.12)”마련·추진
- 도시민의 농촌유입 촉진을 위해 전국 55개 지구를 대상으로 전원 마을 조성사업(20~50호) 추진

■ **농어촌 주민 자녀들의 보육 및 교육여건이 개선되었습니다.**

- 국공립 보육시설을 농어촌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농어업인에게 정부보육료의 70%수준으로 영유아 양육비 지원
- 교장 초빙·공모제, 순회교사·복식수업 수당 지급 등으로 농어촌 교원의 후생 및 자질 향상 도모
- 농어촌 정원의 특별전형 입학비율 확대(3%→4)로 대학진학 기회 확대

■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 제정으로 건강보험료 경감 등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여건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식 품

시기	주요 법·제도 개선	효 과
2003	▪ 축산물가공처리법 개정	▪ 위해요소중점관리제도(HACCP)를 모든 도축장에 의무 적용
2004	▪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 시범사업 도입	▪ 수입쇠고기 둔갑판매 방지 및 위생·안전성 제고
2005	▪ 농산물품질관리법 개정	▪ GAP, 이력추적제 법적근거 마련
	▪ 식품위생법 개정	▪ '07년부터 음식점의 쇠고기 원산지 표시제 실시
2006	▪ 농산물품질관리법 개정	▪ 허위표시위반자 벌칙강화
	▪ 친환경농업육성법 개정	▪ 친환경농산물 인증 단계를 간소화하고 무항생제 축산물 신설
	▪ 농안법 개정	▪ 관세청·검찰청이 몰수한 밀수 농산물을 농림부로 이관·처분 ▪ 도매시장 출하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 실시
	▪ 식품위생법 개정	▪ '08년부터 음식점의 쌀 원산지 표시제 실시

■ 선진국 수준의 농식품 안전성 확보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 생산에서 유통까지의 위생관리를 위해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 위해요소중점관리(HACCP), 이력추적제도 등 선진 제도 도입·확산
- '04년부터 쇠고기 이력추적제를 시범 도입하여 이력추적 관리

■ 원산지 표시제도 확대로 더욱 정확한 먹거리 정보가 제공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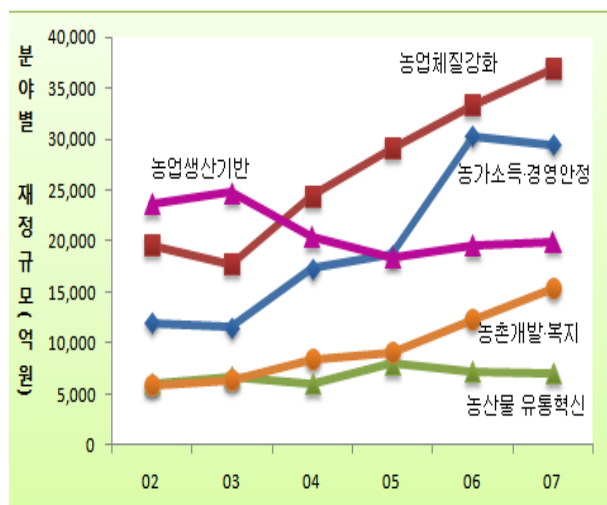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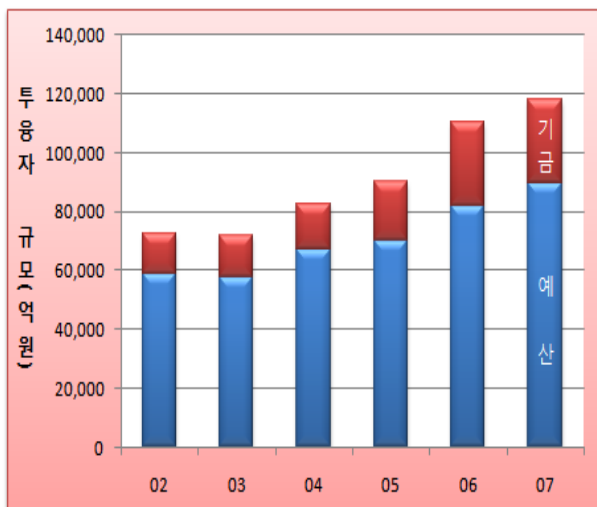
- 이미 정착단계인 가공·판매단계에서의 원산지 표시 제도를 '07년부터 음식점 단계로 확대 적용 추진('07 : 쇠고기, '08 : 쌀)
- 특별사법경찰관리 및 소비자 참여를 통한 명예감시원 확대로 단속 강화

■ 참여정부 4년간('03 ~ '06) 35조4,989억원이 농업·농촌분야에 투입되었고, '07년말까지 47조2,810억원이 지원될 계획입니다.

○ '07년을 '02년과 비교시 전체 투융자는 62% 증가, 분야별로는 소득·경영안정(246.6%), 농촌개발·복지증진(263.4%) 등이 대폭 증가

(단위 : 억 원)

구 분	2002실적	2003실적	2004실적	2005실적	2006계획	2007계획
계	72,614	71,790	82,590	90,037	110,572	117,821
▣ 예 산	58,528	57,712	66,972	70,339	81,845	89,724
▣ 기 금	14,086	14,258	15,618	19,698	28,727	28,097
▪농가소득경영안정	11,949	11,594	17,375	18,669	30,313	29,466
▪농업체질강화	19,645	17,746	24,479	29,239	33,408	36,995
▪농산물 유통혁신	6,079	6,745	6,040	7,994	7,242	7,095
▪산림자원 육성	5,467	4,759	5,825	6,568	7,763	9,195
▪농업생산기반	23,621	24,779	20,380	18,429	19,557	19,656
▪농촌개발·복지증진	5,853	6,347	8,491	9,138	12,289	15,4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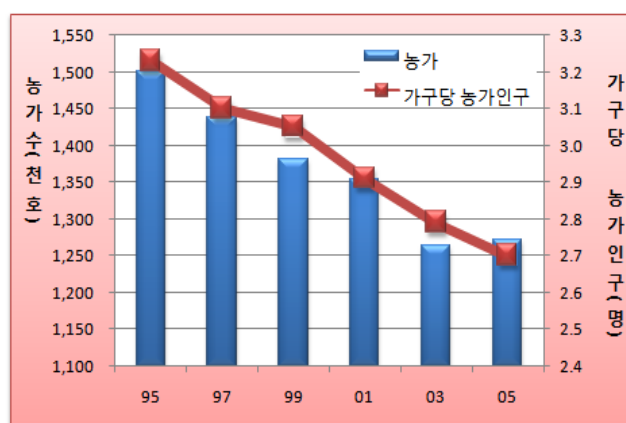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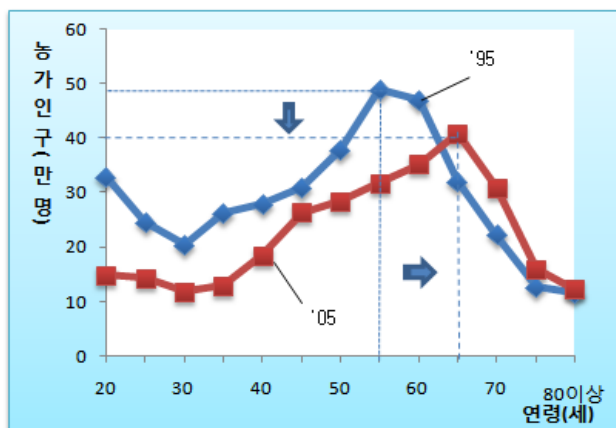
3 농정의 현좌표

가 농업구조 및 농가소득 변화

■ 농가인구 감소('95년 대비 △29.2%)와 고령화가 진행(65세이상 : 29.1%)되고 있습니다.

○ 농가인구가 농가수('95년 대비 △15.2%)보다 더 큰 폭으로 감소함에 따라 가구당 농가인구도 '95년 3.2명에서 '05년 2.7명으로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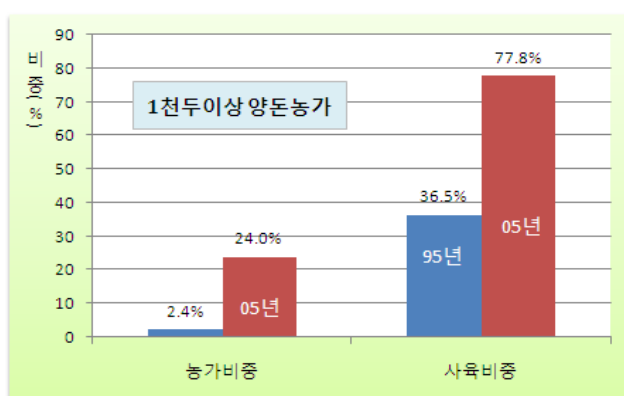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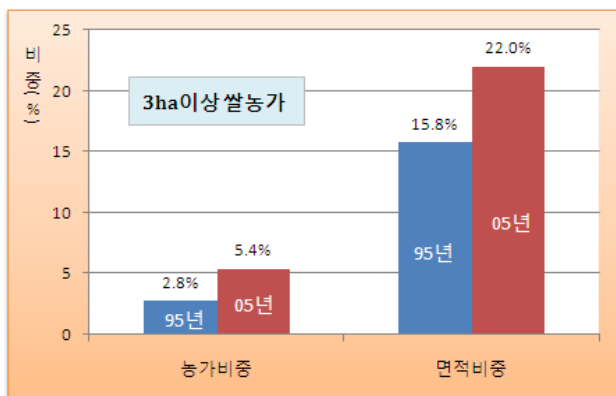
* 농가인구/농가수 : ('95) 4,851천명/1,501천호 → ('05) 3,304천명/1,273천호



■ 지속적인 규모화 정책에 따라 전업농이 증가하고 전업농이 차지하는 생산비중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 3ha이상 쌀농가(농가비중/면적비중) : ('95) 2.8%/15.8 → ('05) 5.4/2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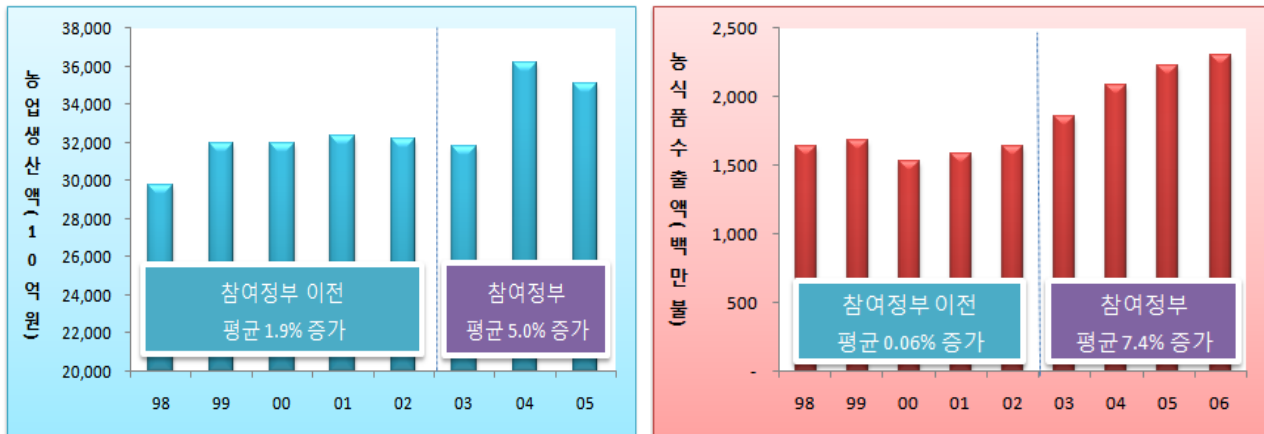
* 1천두이상 양돈농가(농가비중/사육비중) : ('95) 2.4%/36.5% → ('05) 24.0/77.8



■ 지속적인 생산성 증대와 농축산물 가격안정 등에 힘입어 참여 정부 3년간('03~'05) 농업생산액은 연평균 5.0% 증가하였습니다.

○ 농식품 수출액도 '03~'06년간 연평균 7.4%가 증가('06 : 2,307백만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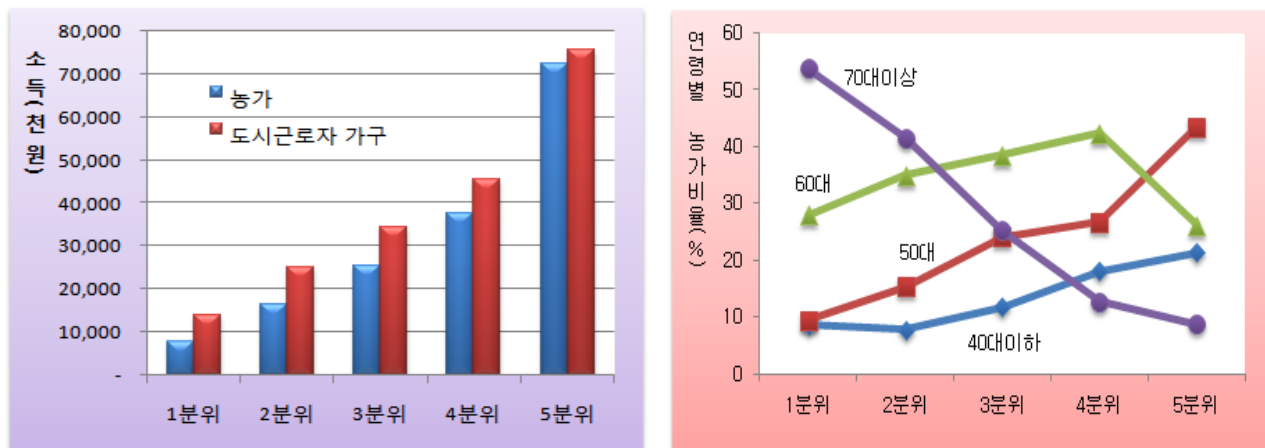
* 한국산 파프리카는 '06년말 현재 일본 시장점유율 63.9%를 차지



■ 농가소득 상위 20% 계층과 하위 20% 계층간 소득 격차는 9.3배 (도시가구 : 5.4배)로 농업내부 소득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 농가 5분위(상위 20%) 소득은 도시가구 5분위 대비 95.2%이나 1분위 (하위 20%) 소득은 55.5%로 저소득 계층의 도농간 소득 격차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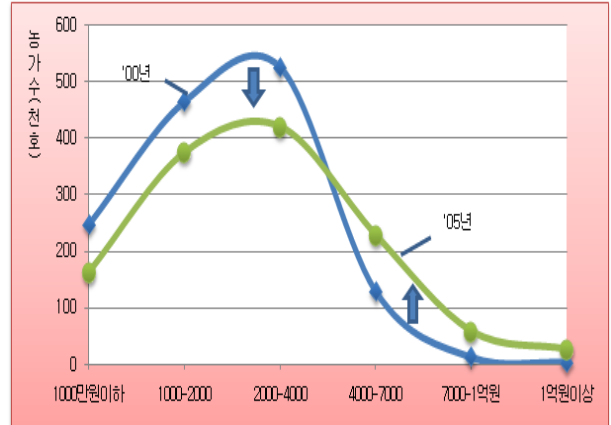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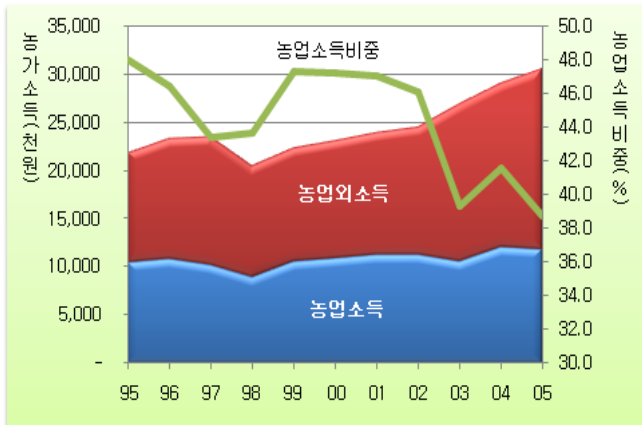
○ 고령화 등에 따른 시장개방 적응력 차이가 원인으로 분석



■ 농업소득은 '95년 이후 정체상태이나 직불제 확충 등 농업외 소득 증가로 농가소득은 '95~'05년간 연평균 3.4% 증가하였습니다.

○ '00~'05년간 소득 1억원 이상 농가가 6배 이상 증가하는 등 고소득 농가비중은 증가한 반면, 4천만원 미만 농가비중은 감소

- * 농가소득 1억원 이상 농가수 : ('00) 4,096호 → ('05) 26,531호
- * 농가소득 1천만원 이하 농가수 : ('00) 246,658호 → ('05) 162,226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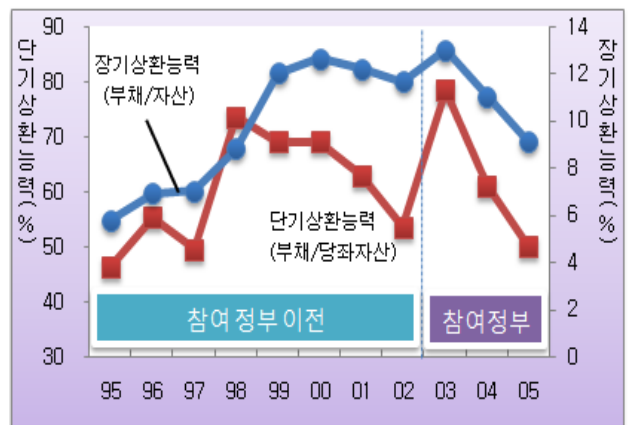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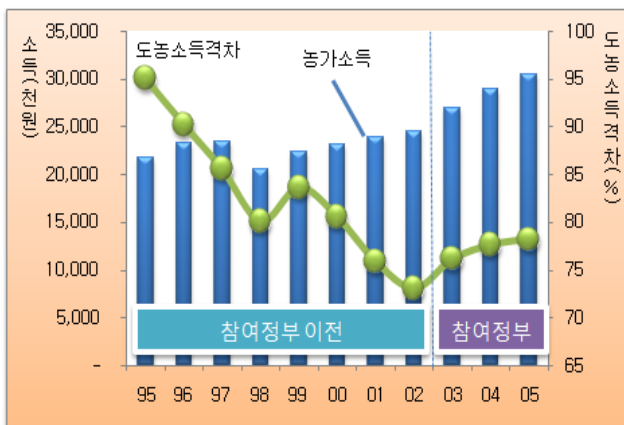


■ 직접지불제 등 소득·경영안정 장치 덕분에 '02년 73%였던 도농간 소득 격차가 '05년 78%로 회복되었습니다.

○ 농업소득 정체에도 불구하고 쌀소득보전 직불제, 조건불리 직불제 도입 등 직불예산 확대로 농가소득은 '03년부터 연평균 6.5% 증가

- * 농가소득 : ('02) 24,475천원 → ('03) 26,878천원 → ('05) 30,503천원
- * 농업예산 중 직불예산 비중 : ('02) 6.5% → ('03) 9.8% → ('06) 2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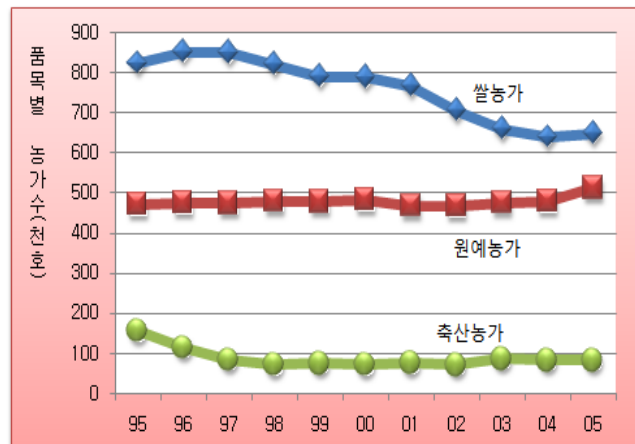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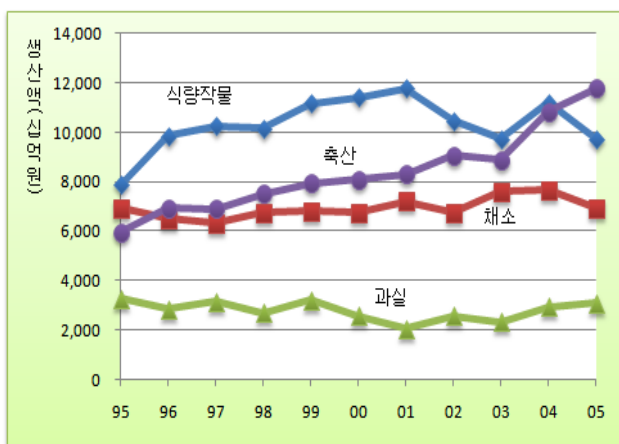
○ '03년 이후 부채/자산비율인 장기상환능력('03 : 13.0% → '05 : 9.1) 및 부채/당좌자산 비율인 단기상환능력('03 : 78.4% → '05 : 50.1)이 호전



나 품목별 농업구조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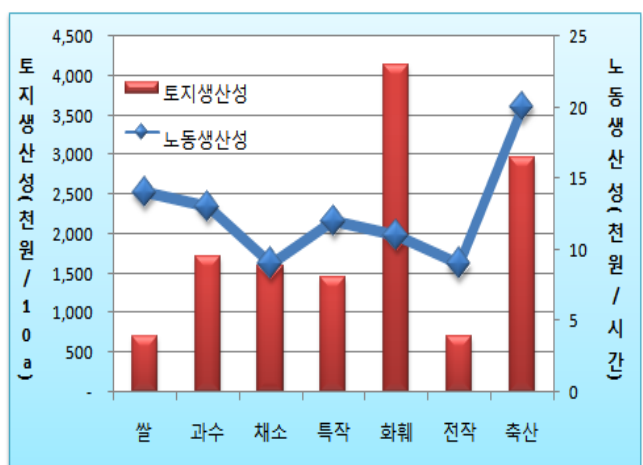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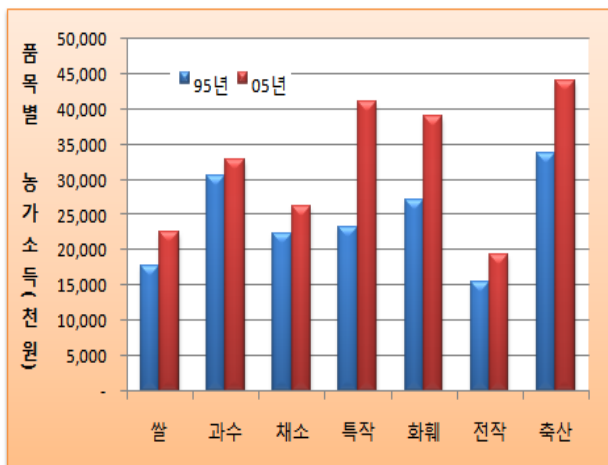
■ 소비패턴 변화에 따라 쌀 등 식량작물 생산액 비중은 감소('95 : 29.6%→'05 : 27.8)하고, 축산비중은 증가(22.4%→33.5)하였습니다.

○ 품목별 농가수는 쌀의 경우 '95년 823천호에서 '05년 648천호로 줄어든 반면 채소·과실 등 원예농가는 470천호에서 511천호로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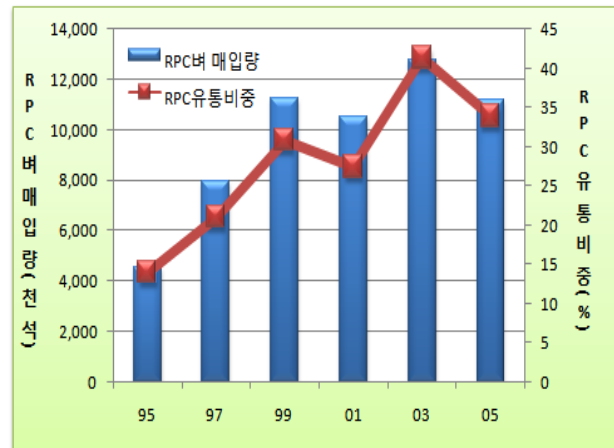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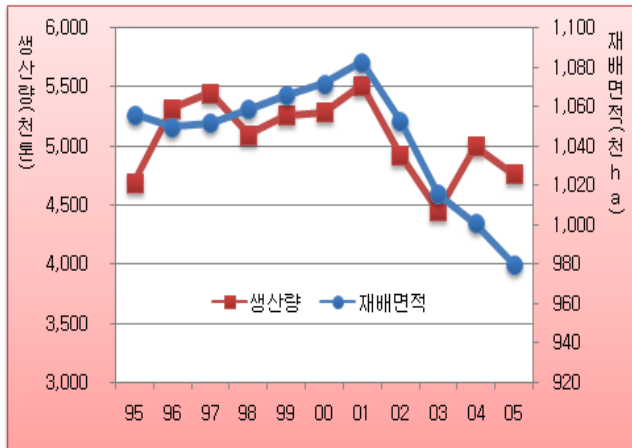
■ 축산농가(44,061천원)가 가장 높은 소득을 올리고 있는 반면, 쌀농가(22,648천원), 일반 밭작물 농가(19,432천원) 소득이 낮게 나타났습니다.

○ 축산 등 전업화가 상당수준 진행된 품목과 쌀의 경우처럼 전업화 속도가 늦은 품목간 소득격차는 더욱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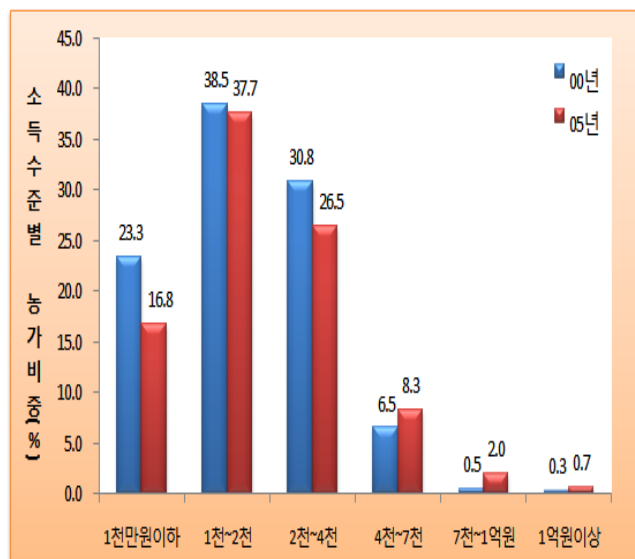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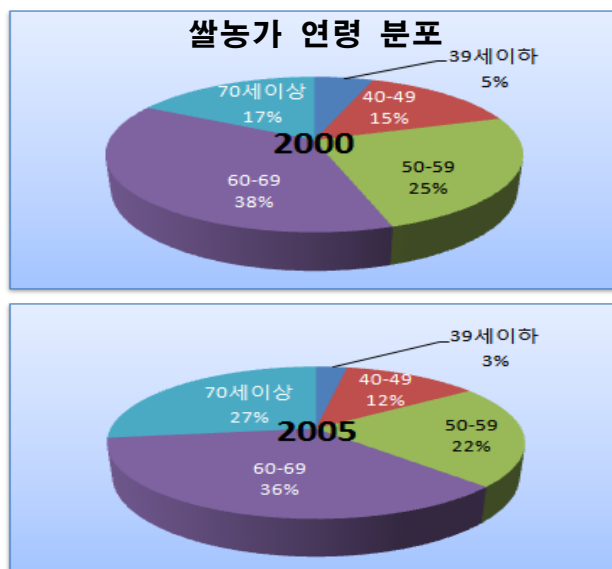
■ **쌀은 재배면적 감소에도 규모화·전업화 진전으로 안정적인 생산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RPC 벼 매입량이 '95년 460만석에서 '05년 1,119만석으로 증가하면서 농가 판로확보 및 편의성이 증대되고, 수확후 관리비용 절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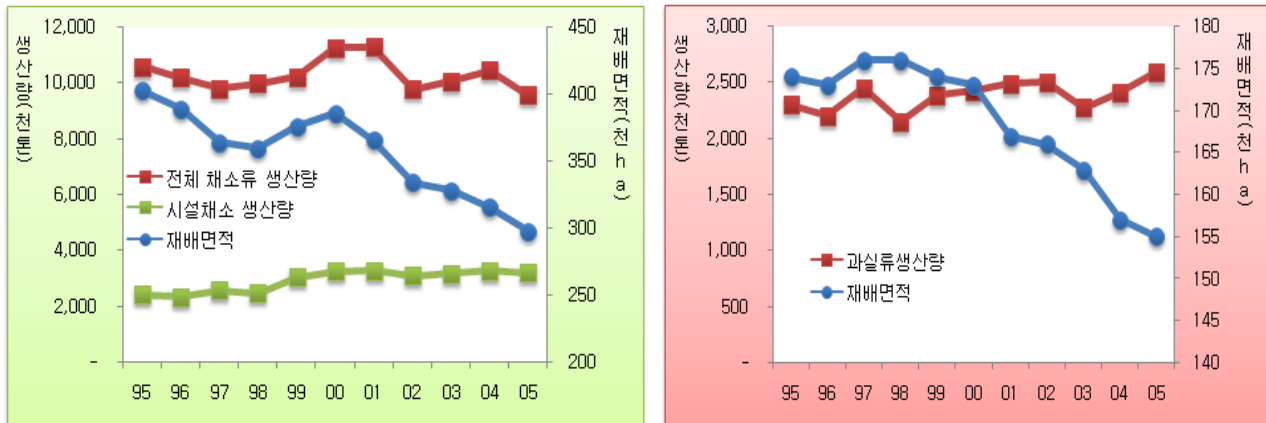
■ **60대 이상 쌀농가가 전체 쌀농가의 63%를 차지하는 등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 농가소득 4,000만원 이하의 쌀농가 비중은 '00년 93%에서 '05년 81%로 감소, 4,000만원 이상 농가비중은 7%에서 11%로 다소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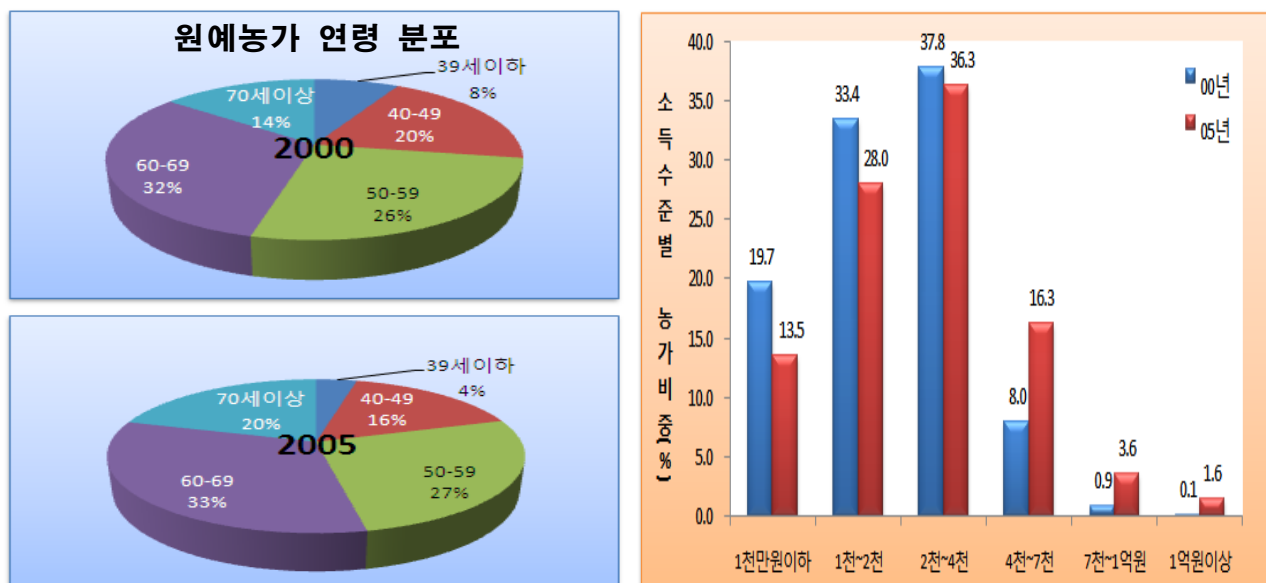
■ 원예품목의 재배면적은 감소하고 있으나 생산성이 향상되어 생산량은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특히, 시설채소 생산 비중이 확대('95 : 23% → '05 : 34%)되고 화훼생산액('95 : 5,089억원 → '05 : 10,105)이 크게 늘어나는 등 국민소득 수준 향상에 따라 원예생산 구조도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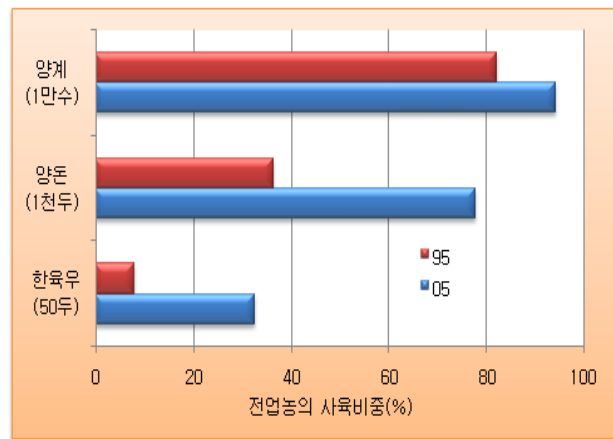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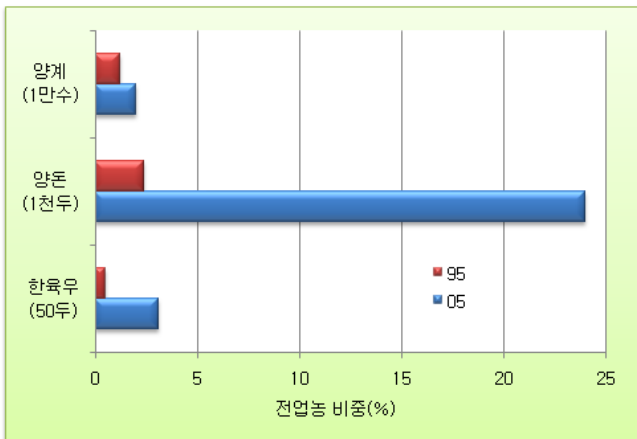
■ 원예농가의 연령별 구조는 60대 이상 농가가 전체 원예농가의 53%, 40대 이하 농가가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농가소득 4,000만원 이하의 원예농가 비중은 '00년 91%에서 '05년 78%로 감소, 4,000만원 이상 농가비중은 9%에서 22%로 크게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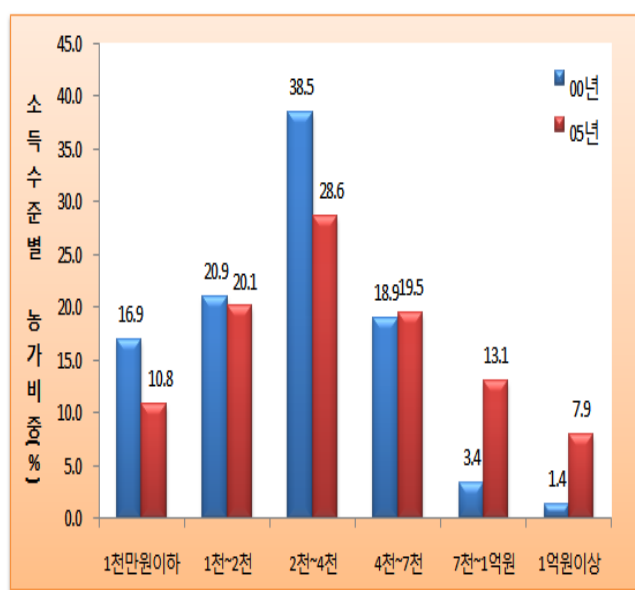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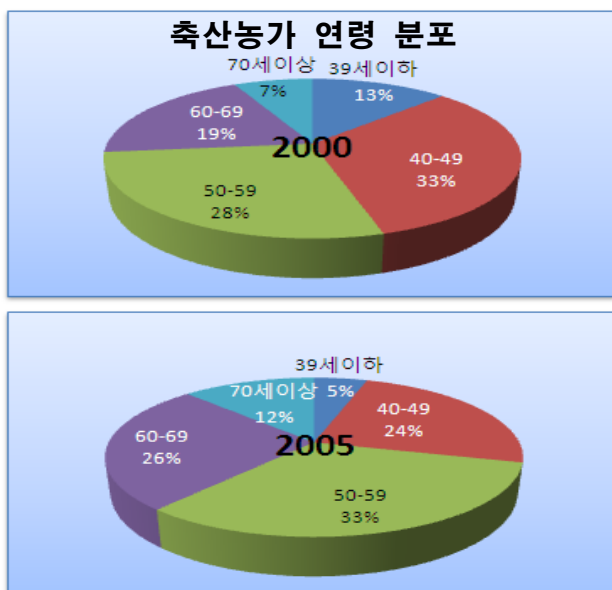
■ 축산은 전문화·규모화가 뚜렷하게 진행되면서 전업농이 차지하는 사육비중이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 한육우는 3.1%의 전업농이 32.5% 한육우를 사육, 양돈은 24.0%의 전업농이 77.8% 사육, 양계는 2.0%의 농가가 94.3% 사육을 담당



■ 50대 미만의 축산농가가 전체의 62%로 타품목에 비해 젊은 경영주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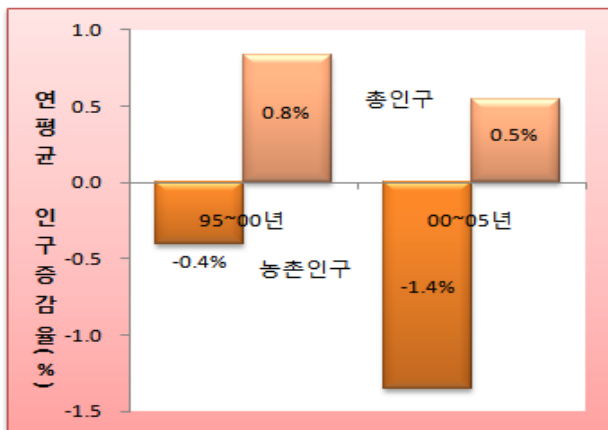
- 농가소득 4,000만원 이하의 축산농가 비중은 '00년 76%에서 '05년 59%로 감소, 4,000만원 이상 농가비중은 24%에서 41%로 크게 증가



■ 농촌인구는 '95년 이후 연평균 0.9% 감소'05 : 8,764천명한 반면 총인구는 0.7% 증가, 농촌인구 비중은 21%에서 18%로 감소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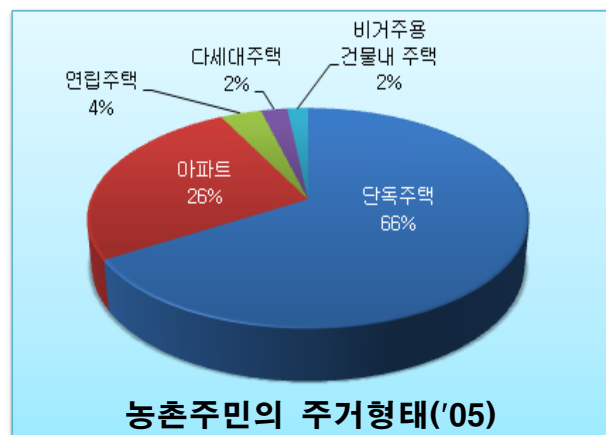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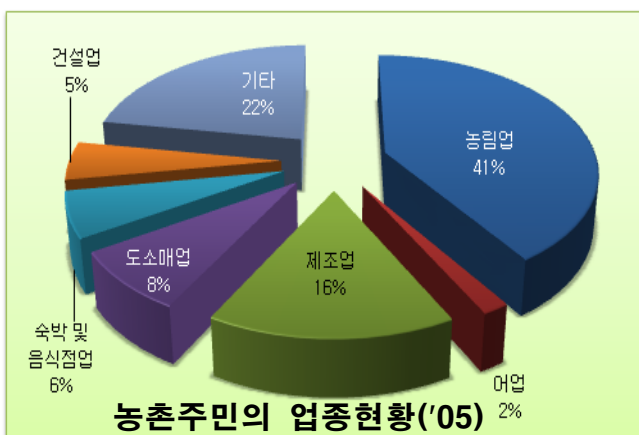
○ 노령화 지수(65세이상 인구/14세이하 인구)는 농촌이 108.2%로 도시 36.7%와 비교하여 매우 높은 수준

* 총 88개 郡 중 57개 군이 65세 이상 인구 20% 초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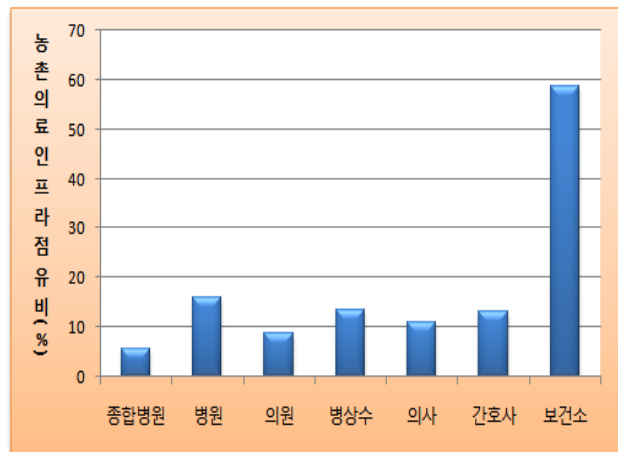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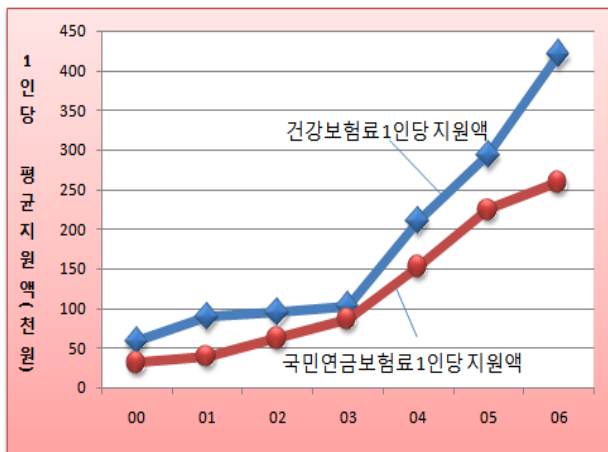
■ 농촌지역의 산업다각화로 '95년 농촌 거주 취업자 중 52%를 차지하던 농림업 종사자는 '05년 41%로 감소하였습니다.

○ 농촌의 주택보급율은 100%를 상회하나 25년 이상 노후주택 비율은 도시의 5배 이상 수준(농촌 46.5%, 도시 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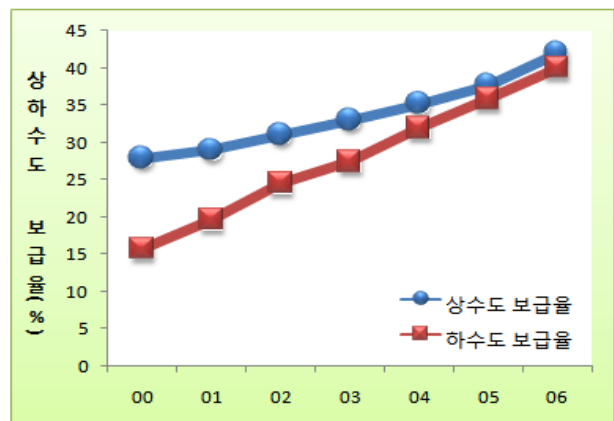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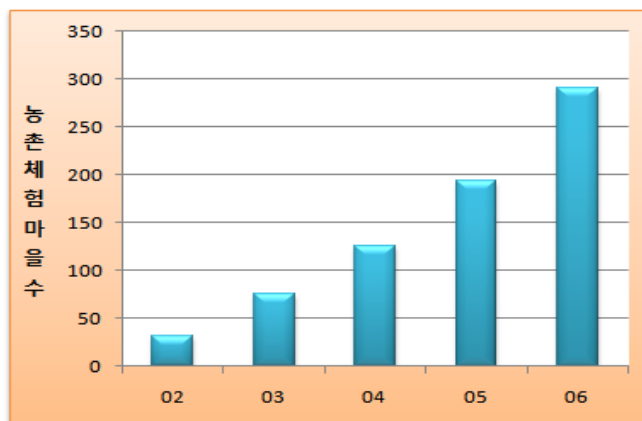
■ **건강·연금 보험료 지원이 늘었으나, 농촌지역 의료기관(9.0%) 및 의료인력(12.4%) 등 의료 인프라는 아직 부족한 상황입니다.**

- 건강보험료 경감률은 '02년 22%에서 '06년 50%로 확대,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액은 '02년 표준소득월액 1등급 월보험료의 1/2(3,300원)에서 '06년 13등급 월보험료의 1/2(21,600원)으로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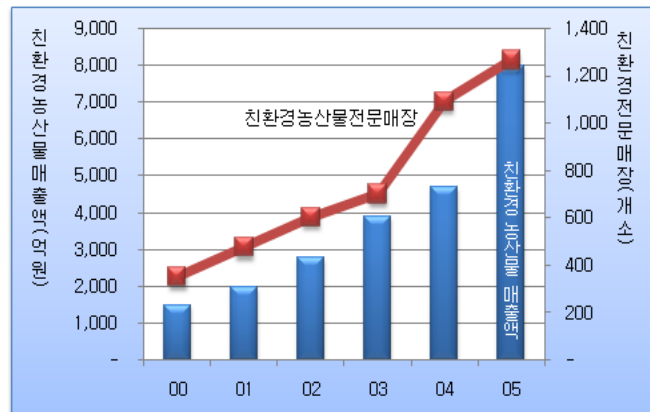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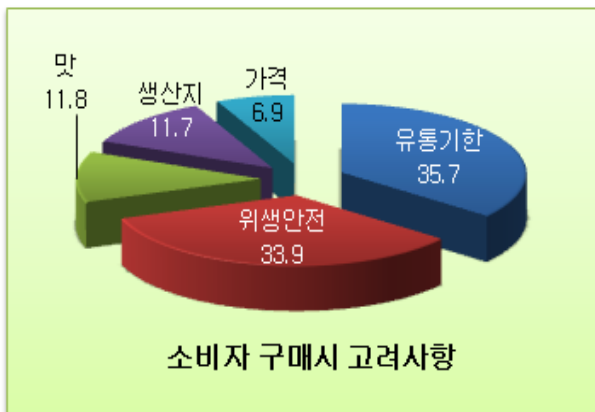
■ **농촌 상·하수도 보급이 늘어나고 대부분의 농촌지역에 초고속 인터넷망이 설치되는 등 농촌주민의 삶의질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 도시민의 농촌 휴양수요가 증대되고 1사1촌 운동 등 도농교류 확산
- * 상수도/하수도 보급률 : ('02) 31% / 25% → ('06) 42% / 40%
 - *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률(이용가능 가구수) : ('02) 82%(308만호) → ('06) 99%(373만호)
 - * 농촌체험마을(방문객수): ('02) 31개소/170천명 → ('06) 291개소/1,882천명



■ 국민생활수준 향상에 따라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농식품에 대한 소비자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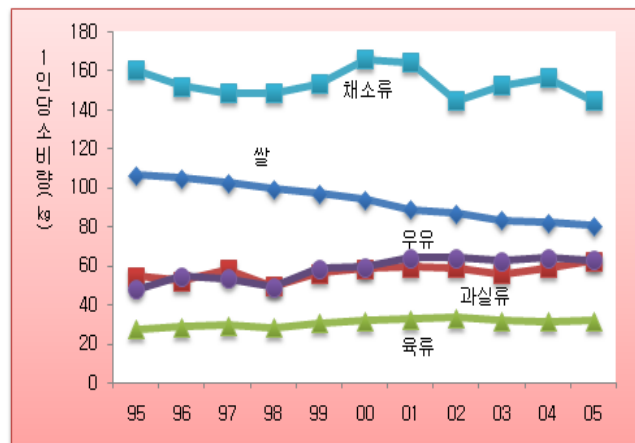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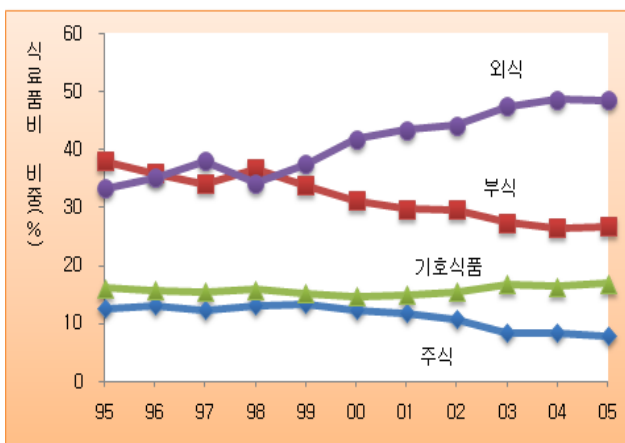
○ 소비자 선택기준도 수량 및 가격에서 품질 및 안전성으로 변화



■ 소비자의 식료품 소비 지출액은 증가('95 : 367천원/월 → '05 : 552) 하는 가운데 소비자의 소비패턴은 크게 변화하였습니다.

○ 외식·기호식품에 대한 지출비중은 늘어난 반면 주식(곡류)·부식(육류, 채소 등)의 비중은 감소

○ 1인당 소비량도 쌀은 계속 감소('95 : 106.5kg → '05 : 80.7)하는 반면 육류, 우유, 과일 등 소비량은 다소 증가



수요자별 정책 성과 II

1. 농업인

2. 품목별 농업인

3. 농촌 주민

4. 소비자

구분	2002년	2006년	2007년
□□ 전문경영체 육성			
○ 창업농자금 지원한도(금리)	8천만원(4%)	1억2천만원(3%)	1억2천만원(3%)
○ 농업인 교육과정수	55개	179개	200개
○ 농업전문 펀드운용규모	100억원	180억원	300억원
□□ 소득안정			
○ 농가소득	24,475천원	30,503천원('05)	
○ 농가당 직불금	335천원	1,500천원	1,689천원
○ 농가소득 중 직불금 비중	1.4%	5.3%	5.7%(P)
○ 농가당 조세감면액	1,524천원	2,705천원	
□□ 경영안정			
○ 농업인 재해공제료 지원(1인당)	11천원	23천원	27천원
○ 재해복구자금 금리	4.0%	1.5%	1.5%
○ 배수개선율 / 수리답율	63.1%/77.3%	71.1%/78.8%	73.0%/79.2%
○ 농업금융(금리 및 상환조건)			
- 중장기 정책자금	3% (2년거치 3년상환)	1.5% (5년거치 15년상환)	1.5% (5년거치 15년상환)
- 상호금융저리대체자금	6.5% (5년 일시상환)	3~5% (3~5년 분할상환)	3~5% (3~5년 분할상환)
□□ 생산 및 수출			
○ 친환경농산물 생산비중/농가	1.1%/12천호	6.2%/80천호	7.0%/90천호
○ 벼 보급종 갱신율	20.8%	35.5%	42.0%
○ 농식품 수출액	1,639백만불	2,307백만불	2,450백만불

가. 체계적인 창업준비를 위한 교육·자금 지원이 늘어났습니다.

◇ 농업계 학생, 도시민 등을 위한 차별화된 영농준비교육 강화

○ '06년 창업농자금 금리인하(4%→3), 영농확대를 위한 추가자금 지원

* 창업지원 자금 : ('02) 1,000억원(금리4%) → ('04) 855(4%) → ('06) 2,093(3%)
→ ('07) 2,048(3%) → ('13) 2,894(1%)

■ 창업자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과 연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 '02년에는 창업농으로 선정되어야 4주간의 교육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창업농 : 시·군이 35세이하 영농희망자 중 영농의지·교육경력을 평가 선발한
자로서 정부로부터 경영·기술교육 및 창업자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음

○ '06년부터 농고 및 농과대 재학생도 창업연수와 영농정착교육 등
(농고생 10개교 5,365명, 농대생 16개교 362명)을 통하여 다양한
농업경영 성공사례와 현장 실습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도시 출신 영농희망자도 3~6개월간 경영기술교육(직업훈련과정,
52명)을 받거나 선도농가에서 인턴으로 일하며 농업경영 현장을
체험(농업인턴제, 100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현장체험·창업교육지원 : ('02)1,075명 → ('04)1,125 → ('06)6,825 → ('07)7,155 → ('13)9,565

○ '07.3월부터 한국농업전문학교가 한국농업대학으로 개편되어 식품·가공 등 심화교육을 이수한 학생은 학사학위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후계농업인으로 우선 선정되어 정착자금을 지원

* 한국농업전문학교 졸업생 수 : ('02) 640명 → ('04) 1,043 → ('06) 1,4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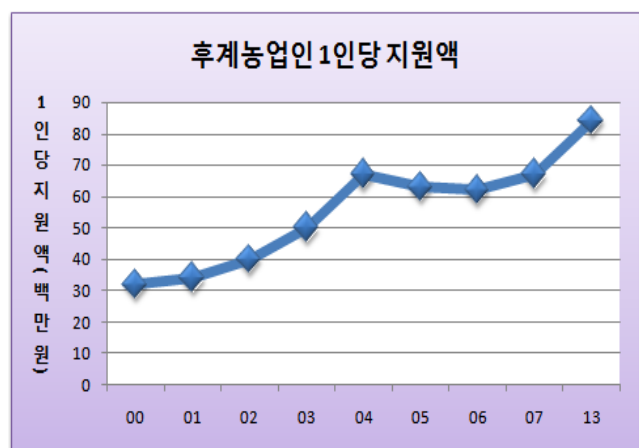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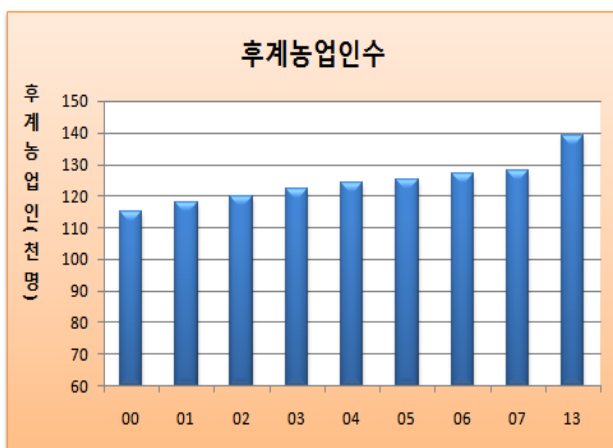
■ 최대 1억 2천만원까지 금리 3%의 조건으로 창업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02년에 창업자금을 연 4% 금리로 8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었으나, '06년부터 연 3% 금리로 1억2천만원까지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 '06년부터 창업후 5년이 지난 농업인 중 영농실적이 우수한 사람은 영농 확대를 위한 자금(1인당 8천만원, 금리 3%)을 추가 지원

※ 한국농업전문학교를 졸업한 △△△씨(경기 화성, 31세)는 '04년 창업농으로 선정되어 1억원을 지원받아, 0.5ha규모 비닐온실에 다솜추(꽃양배추 일종의 특수채소)를 재배하여 연간 8천만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음

○ '07년부터 창업농 자금지원 기간이 선발 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되어 3년 이내 원하는 시기에 나누어 지원받게 됩니다.



나. 필요한 교육·컨설팅을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 '06년부터 농업교육을 전면 개편, 민간전문가의 현장중심 교육·실습·토론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한 맞춤형 교육 체계 구축

- 교육예산을 대폭 확충하고, 농업경영 컨설팅 우수업체 인증, 서비스 영역 다각화 등 컨설팅 품질을 향상

* 교육예산 : ('02) 28억원 → ('04) 28 → ('06) 122 → ('07) 130 → ('13) 200

■ 민간 중심의 품목·경영수준에 맞는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 '02년에는 공공기관 중심의 생산기술 교육을 받았으나 '06년부터 농업인단체·기술센터·대학 등을 통해 다양한 기술·경영·마케팅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 교육과정도 '02년 55개 과정에서 '06년 179개 과정, '07년에는 200개 과정으로 늘어나 더욱 다양한 선택이 가능

* 교육과정수 : ('02) 55개 → ('04) 62 → ('06) 179 → ('07) 200 → ('13) 300

- 1인당 교육지원비도 '02년 4만원에서 '06년 16만원까지 확대되어 고품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1인당 교육지원비 : ('02) 4만원 → ('04) 6.7 → ('06) 16.2 → ('07) 16.3 → ('13) 20

* 교육 실적 : ('02) 695백명 → ('04) 413 → ('06) 750 → ('07) 800 → ('13) 1,000

- '07년부터 통합농업교육정보시스템(AgriEdu.net)에서 농업인 스스로 교육정보를 찾아 필요한 교육을 보다 쉽게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통합농업교육정보시스템 : 전체 농업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주요 교육과정 등을 일괄 제공하고, 농업인이 온라인으로 교육신청을 할 수 있는 시스템

※ '01년 귀농한 ○○○씨는 수국차를 생산하며 연 2천만원의 소득을 얻고 있었으나, '04년 농업연수원의 친환경농업 교육을 받은 이후 5천만원까지 소득 증대

■ 전문 컨설팅 업체로부터 다양한 컨설팅을 받을 수 있습니다.

○ '02년에는 컨설팅 비용의 50%를 부담하면서도 영세 컨설팅 업체가 많아 서비스도 취약했습니다.

○ '05년부터 농업인이 부담하는 컨설팅 비용이 30%로 줄고 '06년에는 농림부가 인증한 경영·마케팅 전문 컨설팅 업체로부터 품질 좋은 컨설팅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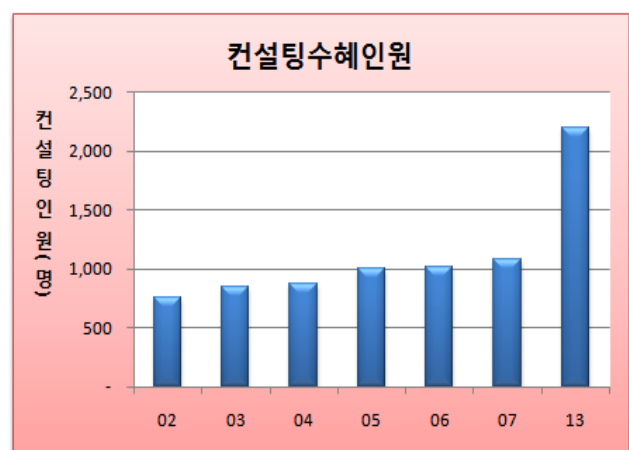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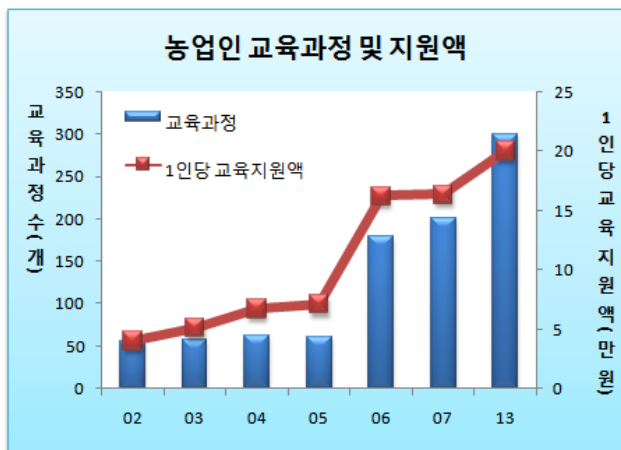
* 수혜농가 및 예산 : ('02) 759농가(17억원) → ('04)873(19) → ('06)1,009(44)

※ 파프리카 재배 청록영농조합법인은 정부지원 하에 민간 컨설팅 회사인 S社로부터 기술, 경영기법 등에 대한 컨설팅을 받고 1년만에 생산성·품질 향상 및 매출액 50%(4억원 → 6억원) 신장 효과 달성

○ '07년에는 컨설팅 업체와 컨설팅 제공 분야(세제, 특허출원 등)가 늘어나 농업인이 더욱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또한 컨설팅 이전에 농업인 스스로 자가진단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컨설팅서비스를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컨설팅분야 : ('02) 농업생산, 회계·재무 → ('06추가) 마케팅, 브랜드, 농촌관광 → ('07추가) 세제, 특허출원



다. 농업법인 창업이 쉬워졌습니다.

◇ '05년부터 농업법인 창업 2년내 취득한 농업용 재산의 취득등록세 감면, 농업회사 농업소득세 부담을 완화

* 농업전문펀드 조성규모 : ('02) 100억원 → ('06) 180 → ('07) 300 → ('13) 1,000

■ 농업특화 창업 보육센터 설치 확대, 세금 부담 완화 등으로 농업인들의 농기업 창업·운영이 더욱 쉬워졌습니다.

○ '02년에는 수도권에서만 농업창업보육센터를 활용할 수 있었으나, '06년 영·호남권, '07년에는 강원, 충청권에서도 창업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농업창업보육센터: ('02)수도권3 → ('05)영남1 → ('06)호남1 → ('07)강원, 충청 각1

* 졸업업체중 벤처기업 인증 업체 : ('02) - → ('04) 13 → ('06) 18 → ('07) 22 → ('13) 35

※ (주)강화명품은 한국농업전문학교 창업보육센터 입주 후 전담 컨설턴트로부터 마케팅기법 개발, 품질 고급화 전략 등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받아 창업 3년만에 중견 벤처기업으로 발전(매출액 4억원 → 11억원)

○ '05년부터 농업인·농업법인은 5년간 농업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고, 취득세·등록세 감면, 친환경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09년까지 영농조합법인의 배당소득 소득세가 감면됩니다.

※ 매출액 11억원규모의 벼 재배 당진영농조합법인은 연간 28백만원의 소득세 감면, 350백만원 상당 농지 취득시 10백만원의 취득·등록세 감면

- '07년부터는 우수경영체가 전문인력 채용 시 고용장려금을 지원받게 되어 조합공동사업법인, 산지유통센터(APC) 등의 상품기획, 마케팅, 경영분야 전문인력 확보가 보다 쉬워집니다.

* 경영실적 및 경영능력이 우수한 경영체에 전문인력 1인당 월120만원씩 12개월간 보조지원('07년 : 288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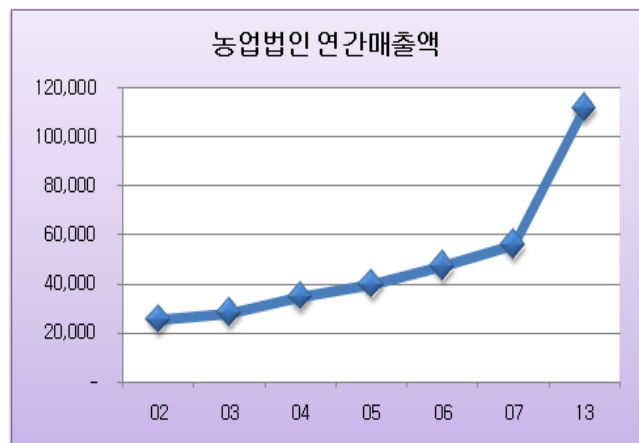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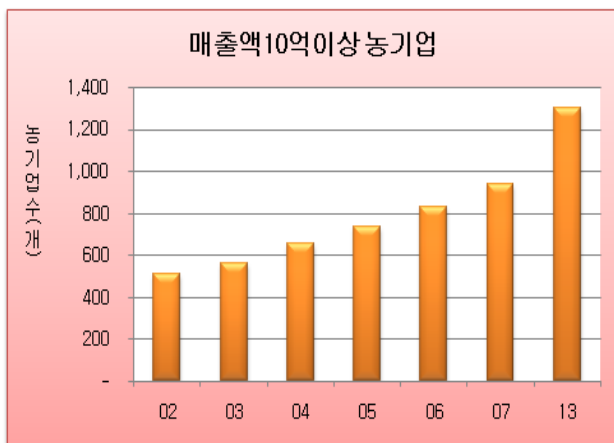
■ 농업전문 펀드 조성 확대로 농기업 투자유치가 보다 쉬워졌습니다.

- '02년 100억원에 불과했던 농업투자펀드 규모가 '06년에는 180억원으로, '07년에는 300억원으로 늘어납니다.

- '06년부터는 농식품가공업체, 농자재 업체 등이 농업전문투자펀드로부터 투자유치가 더욱 쉬워졌습니다.

* 펀드조성액: ('02) 100억원 → ('04) 180 → ('06) 180 → ('07) 300 → ('13) 1,000

※ RNL 생명과학(주)이 농업전문 펀드로부터 5억원의 투자 및 컨설팅을 지원받아 기능성 쌀과 가축 소독약을 개발하여 매출 70억원 규모의 코스닥 상장기업으로 성장



가. 직불제 확충으로 농가소득이 안정되고 있습니다.

◇ 농가소득보전제도를 대폭 강화하여 농업예산 중 직불예산 비중이 '02년 6.5%에서 '06년 24%로 확대

* 직불 예산 : ('02)4,289억원→('04)8,675→('06)19,441→('07)20,825→('13)38,727

■ 농업인이 더 많은 직접지불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 농가당 평균 직불금이 '02년 335천원에서 '06년 1,500천원으로 늘어남에 따라, 농가소득 중 직불금 비중도 '02년 1.4%에서 '06년 5.3%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 '13년까지 직접지불금 예산이 단계적으로 늘어나 농가소득의 10% 정도를 직접지불금으로 지원받게 됩니다.

■ 다양한 직불제 도입으로 더 많은 농업인이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 '02년까지는 경영이양직불제, 친환경농업직불제, 논농업직불제 등 주로 쌀 농업인만 직불제 혜택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 '04년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05년 경관보전직불제가 도입되어, 생산여건이 불리한 지역에서 밭농사를 짓거나 유채·코스모스 등 경관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도 직불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05년에는 쌀소득보전 직불제가 시행되어, 쌀농가의 소득이 더욱 안정되고 있습니다.

■ 기존에 시행되던 제도가 현실에 맞게 개선되었습니다.

- 일시불로 수령하던 경영이양직불금을 '04년부터 분할 수령할 수 있게 되고 직불금도 증가하여, 고령 은퇴농의 생활이 더 안정되었습니다.

* 농지매도시 경영이양직불금(ha당) : ('02) 2,810천원(일시불, 임대·매도 동일)
→ ('04) 연2,896천원, 최대23,168천원(대상자 연령별로 2~8년 동안 수령)

- '03년부터 친환경농업직불금이 인증단계별로 차등 지급되어 유기나 무농약 농법을 사용하는 농업인은 더 많은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 친환경 직불금(밭, ha당) : ('02) 524천원 → ('06) 무농약 674천원, 유기 794천원

■ 농업의 환경보전 및 농촌사회 유지 등 공익 목적의 직불제가 확대되어 더 많은 농업인들이 직불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지원대상 도서가 도서개발촉진법상 도서에서 '07년부터 경사도와 관계없이 제주도를 포함한 전체 도서로 확대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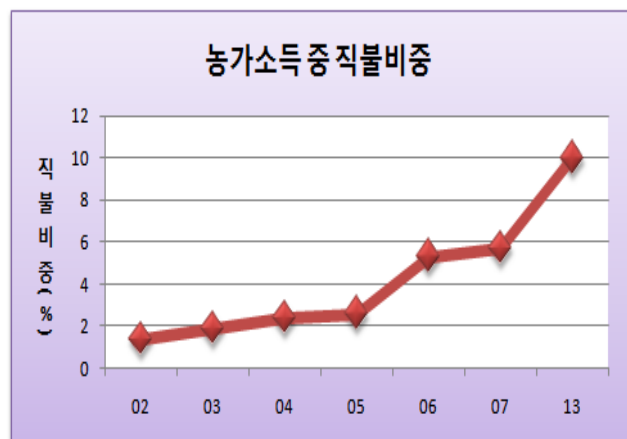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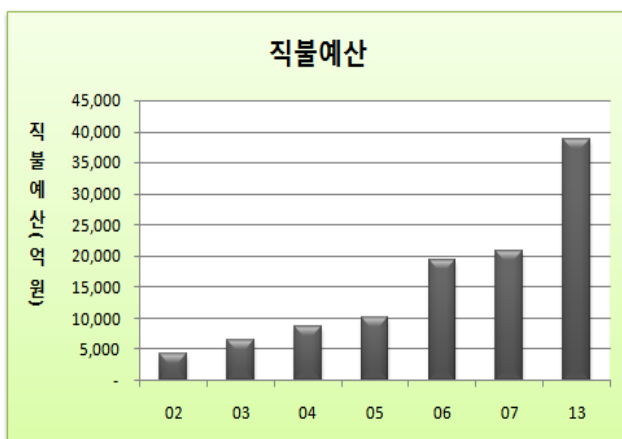
* 대상지역/예산규모 : ('06) 119천ha / 331억원 → ('07) 188 / 523

- 경관보전 직불제가 '07년부터 연, 자운영까지 확대됩니다

* 대상품목 : ('06) 유채, 메밀, 코스모스, 해바라기, 목화, 야생화 → ('07) 연, 자운영 추가

- 친환경농업 직불제 시행면적 확대에 따라 자연 순환농법으로 농사 짓는 농가도 지원받는 방안이 강구됩니다.

* 시행면적/예산 : ('06) 27천ha / 141억원 → ('07) 43 / 175



나. 농업부문 세금감면 확대로 영농비가 절감되었습니다

◇ 농지 등 취득, 보유, 경작 및 이전, 농산물의 생산과 유통, 농업법인의 경영 등과 관련한 각종 세금을 감면

■ 농업부문 세금감면액이 '02년 23,060억원에서 '06년 37,454억원으로 늘어났습니다

- 농가당으로 보면 1,524천원에서 2,705천원으로 늘어나 그만큼 영농비 부담이 줄었습니다.
- '04년부터 친환경농업 확산을 위해 키토산, 목초액 등 친환경 농업용 자재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 적용

< 농업부문 세금감면액(추정) >

(단위 : 억원)

연 도	2002	2003	2004	2005	2006
□총 감면액	23,060	25,397	28,680	33,373	37,454
■ 농업용 면세유	8,733	11,102	11,451	12,437	13,119
■ 농업용 기자재 부가세 영세율	6,139	6,407	6,807	7,609	8,263
■ 농업용 기자재 부가세 사후환급	435	531	643	662	719
■ 8년 자경농지 양도세 면제	1,747	1,395	2,148	4,448	4,831

가. 농업보험 제도 기반 강화로 안심하고 영농에 종사하게 되었습니다.

◇ 자연재해로부터 농가를 보호하기 위한 농작물 재해보험, 가축공제를 내실화하고, '06년부터 농업용 시설에 대한 풍수해보험 실시

○ '05년부터 거대 재해에 대응한 안정적인 농작물 재해보험 운영 기반 마련을 위해 국가 재보험 제도 도입

■ 농작물재해보험에 국가 재보험 제도가 도입되어 거대재해가 발생해도 더욱 안심하고 농사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국가가 위험 일부를 책임짐으로써 민영보험사의 재참여를 유도하고, 적극적인 보험 상품 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되었습니다.

■ 가축공제 민간 보험사 참여로 더 나은 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 농협이 독점하던 가축공제에 '07년부터 민간 보험사(LIG, 현대, 동부, 삼성 컨소시움)가 참여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 풍수해에 의한 재산피해에 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06년 풍수해보험이 실시되어 시설(주택, 축사, 온실)에 발생하는 풍수해 피해를 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국고지원으로 농업인은 보험료의 35~51%만 부담

■ 농작물·가축 등에 대한 보험제도가 농업재해보험으로 개편되어 종합적 재해위험 관리가 가능하게 됩니다.

나. 농협 안전공제에 가입한 농업인이 더 많은 보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 농작업 중 사고 위험에 대비하여 농협의 농업인 안전공제와 농기계 종합공제 가입 시 공제료의 50%를 지원

○ 사망시 보상수준을 '02년 300만원에서 '06년 2,500만원으로 상향

◇ '06년 처음으로 농작업 재해를 예방하고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농작업 안전관리 모델 마을 조성사업을 '06년에 도입

■ 농업인이 농작업 재해로 사망할 경우 '02년 300만원을 받았으나, '06년에는 2,500만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 사망시 보상수준 : ('02) 300만원 → ('04) 1,000 → ('05) 1,500 → ('06) 2,500

○ '07년에는 3,500만원(일반재해 사망시 500만원), '13년에는 산재보험 수준인 9,000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 작목별 농작업 안전모델 확산으로 농업인이 안전하게 영농에 종사할 수 있게 됩니다.

○ '06년 9개소의 농작업안전모델 마을이 형성되었으며, '07년에는 8개소가 신규로 늘어나고, '14년까지 총 990개소로 늘어나게 됩니다.

※ 전남 화순군 도곡면 신성리의 경우 농작업 안전모델 마을로 선정된 이후 농약노출에 대응하여 농약무인방제시스템 구축, 농약빈병 수거함·샤워실, 세탁실을 설치하고, 부적절한 작업 자세에 따른 농부증 예방을 위해 포장작업대 설치·건강관리기구 구비·운동프로그램 운영 등을 실시

다. 더욱 신속하게 재해복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복구비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원스톱 지원 시스템 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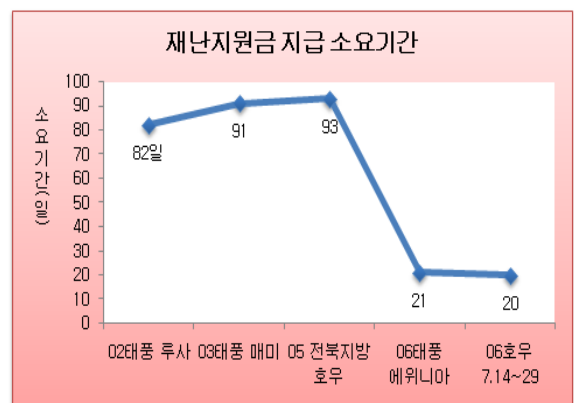
- '06년부터 7개 부처에서 분산지원하던 복구비를 소방방재청에서 일괄하여 신속하게 처리

■ 영농규모에 관계없이 재해복구비를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 '02년에는 소규모 농가만 재해복구비를 지원받았으나, '06년부터 영농규모에 관계없이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 * 농업시설 복구비 : 축사1,800㎡, 계사2,700㎡, 농경지3ha미만 → 규모제한 폐지
 - * 생계지원, 영농자금이자감면 등 간접지원 : 5ha미만 농가 → 규모제한 폐지
- 과거에 제외되었던 하천부지내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경작하는 농업인의 농업시설 및 농작물에 피해 발생시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 지원대상 재해범위 : 폭설 · 가뭄 · 지진 · 서리 · 우박

■ 재해복구비를 신속하게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 '02년에는 생계지원, 농작물, 가축, 축사 등의 복구비를 종류별로 지원받았으나, '06년부터 농가별 총 피해사항을 합산·등급화하여 일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 '02년에는 재해복구 확인후 재난 지원금을 지원받았으나, '03년부터 지자체가 확보하고 있는 예비비로 복구이전에 미리 받게 되었습니다.
- 복구지원 융자금 금리도 '02년 4%에서 '06년 1.5%로 낮아졌습니다.



라. 웬만한 수해나 가뭄에도 안심하고 농사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 **태풍, 홍수 등에 대비하여 수리시설을 개보수하고 가뭄 대비 농촌용수개발 사업 및 받기반정비사업 추진**

- '02년 수리시설 개보수 예산의 35%가 재해대비 사업에 투입되었으나 '06년 50%, '07년에는 60%로 확대

■ **배수개선으로 농경지 침수 걱정이 많이 줄었습니다.**

- '02년까지 배수개선대상 188천ha중 119천ha(63.1%), '06년까지 137천ha(71%)가 완료되어, 농경지 침수면적이 '02년 250천ha에서 '06년에는 18천ha로 대폭 감소되었습니다.

* 농경지 침수면적 : ('02) 250천ha → ('04) 39 → ('06) 18

- 상습침수 저지대 농경지 31천ha에 시행중인 배수개선사업이 '07년에 3.5천ha가 완료되며, '13년까지 163천ha(86.4%)의 농경지 침수 문제가 줄어들 것입니다.

■ **노후된 수리시설이 현대화되어 논물 걱정이 줄었습니다.**

- 노후된 수리시설 8,769지구 가운데 '02년까지 5,257지구(59.9%), '06년까지 5,622지구(64.1%)를 개보수하여, 최근 4년간('03~'06) 365지구의 노후 수리시설이 현대적 시설로 보강되었습니다.

- '07년에는 개보수사업 5,728개 지구(65.3%)까지 완료

* 수리시설 피해건수 : ('02) 7,151건→('04) 1,967 → ('06) 2,138

* 수리시설 피해금액 : ('02) 4,901억원→('04) 866 → ('06) 1,373

○ '04년부터 홍수 발생시 인명과 재산 피해가 큰 저수지에 물넘이 시설 확장, 제방 높이기 및 사전 수위조절을 위한 비상수문 등 비상시설이 설치되고 있습니다.

- '06년까지 30개소중 6개소 완료, '07년은 31개소중 3개소 완료

■ 저수지, 양수장 등 수리시설 확충으로 웬만한 가뭄은 이겨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수리시설을 갖춘 수리답율은 '02년 전체 논(1,105천ha)의 77.3%에서 '06년말 78.8%로 높아졌습니다.

- '07년까지 전체 논 면적의 79.2%인 875천ha에 수리시설이 완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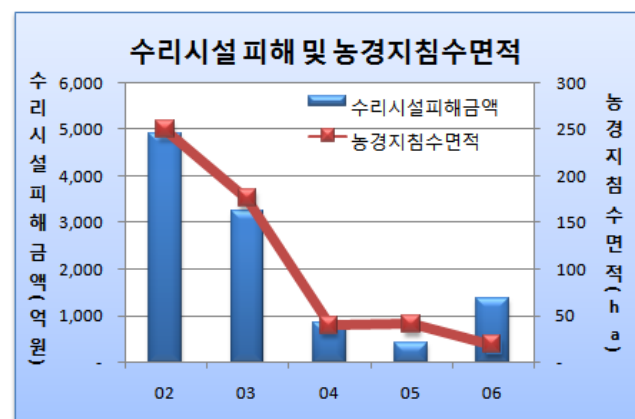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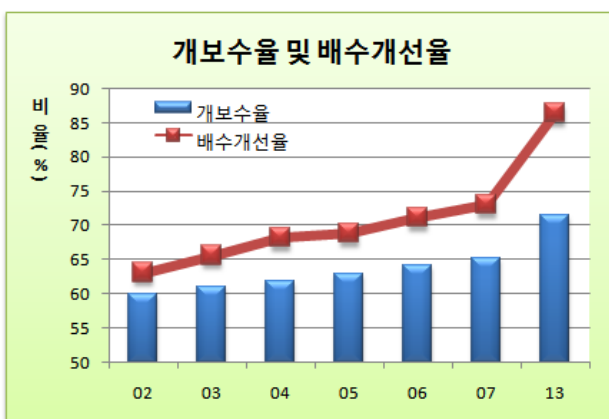
○ '06년부터는 기존의 수리시설을 통합·보강하는 '용수이용체계 재편사업'이 새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 '07년 추진계획 : 타당성조사 2지구, 기본조사 1지구, 세부설계 2지구

■ 밭에도 농업용수개발과 농로정비가 이루어지고 있어 밭작물 재배농가도 영농이 편리해졌습니다.

○ 마늘 등 채소류의 집단화된 주산지 밭 11만ha를 대상으로 '02년까지 53천ha(47.8%), '06년까지 73천ha(66.2%)의 밭이 정비되었습니다.

- '07년 4.6천ha가 추가 정비되는 등 '13년까지 99천ha(90%)를 정비



가. 금융서비스가 향상되고, 금융부담도 완화되고 있습니다.

◇ **농업인의 부채상환부담 경감을 위해 '04년(8.2조원) 및 '06년(5.6조원) 농업용자금 상환연기 및 금리인하 시행**

-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02년 4%~5.5%이던 정책자금 금리를 '06년 3%~4%로 점진적으로 인하

■ **부채로 인한 농가의 금융부담이 크게 완화되고 있습니다.**

- 중장기 정책자금 상환조건이 '02년 금리 3%, 2년 거치 5년 상환에서 '04년 금리 1.5%, 5년 거치 15년 상환 조건으로 개선되었습니다.
 - * 상호금융 대체자금 및 농업경영개선자금 금리 인하(6.5% → 3%)
- '06년에는 '01년 지원된 상호금융저리대체자금 8.2조원 중 미상환된 5.6조원에 대해서 3~5년간 추가로 상환이 연기되었습니다.
 - '07년 중 상환기한이 도래되는 상호금융저리자금(3,389억원)에 대해서도 동일한 조건으로 상환 연기
 - * 원금 10% 상환시 5년 분할상환(금리 3%), 미상환시 3년 분할상환(5%)

■ **농업정책자금을 싼 금리로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정책자금 금리는 '02년 4%~5.5%였으나, '06년에 농업인 3%, 비농업인 4%로 낮추어 연간 158억원의 이자부담이 줄었습니다.

- 재해대책융자금(4%→1.5), 농지매입자금(3%→2), 일부 육림자금(3%→1.5)은 금리가 더 인하되어 연간 240억원의 금리 부담이 추가로 완화되었습니다.

* 정책자금 금리인하 : ('02)4%~5.5% → ('05)3%~5.5% → ('06) 3%~4%

* 금리인하에 따른 부담 완화 : ('02) 99억원 → ('05) 264억원 → ('06) 398억원

- '07년 이후에는 농업인의 성장단계별로 농가유형에 적합한 조건(대출금리, 상환기간 등 지원조건 차등)으로 정책자금 지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 연대보증이나 담보 없이 농업자금을 쉽게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 농업인의 경우 소정의 심사과정을 거쳐 10억원(법인은 15억원) 까지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간이신용조사) 3천만원까지, (약식신용조사) 2억원까지, (정식신용조사) 2억원 초과

- 특히, 후계농업인 등 선도농업인과 부채대책자금, 재해대책자금 등은 간이신용조사방식으로 쉽게 보증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시중은행을 통해서도 농업정책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 '02년에는 농협, 산림조합 등을 통해서만 정책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었으나, '06년에는 축발기금 융자금과 RPC운영자금, 농기계 구입자금 등은 시중은행에서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 '08년에는 농업정책 자금의 50%이상, '13년까지 모든 농업정책 자금이 시중은행을 통해 대출받을 수 있게 됩니다.

나. 부채를 근본적으로 해소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 재해, 가격급락 등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경영회생지원제도를 '03년 도입하여 '04년부터 상시적으로 지원
- ◇ 부채농가의 실질적인 회생을 돕기 위해 농지은행을 통한 농지매입 경영회생 지원제도를 '06년 도입

■ 워크아웃 방식으로 경영회생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경영회생지원을 통해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이 높은금리(8.5%), 단기상환(1~2년) 조건의 농업용 상호금융 대출금을 낮은 금리(3%), 장기상환(3년거치 7년분할)의 자금으로 대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03년부터 준전업농(전업농 규모의 1/2) 또는 농업용 부채 2,500만원 이상 농업인은 회생가능성 평가 후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03년 171농가가 215억원을 지원받았고, '06년에는 572농가가 330억원을 지원받았습니다.
 - * 연도별 지원액(누계) : ('03) 215억원 → ('04) 1,854 → ('05) 2,964 → ('06) 3,294
 - * 지원 농가수(누계) : ('03) 171농가 → ('04) 2,286 → ('05) 3,839 → ('06) 4,411
- '06년부터 특별재난지역의 피해농업인에 대해서는 준전업농 영농 규모의 1/2이상, 농업용 부채는 1,200만원 이상으로 지원조건이 50% 수준으로 완화되었습니다.

■ 농지은행을 통해 영농을 계속하면서 부채를 갚아나갈 수 있습니다.

- 종래에는 부채로 인해 농지가 법원에서 경매처분되는 경우 자산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여 경영회생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 '06년부터 실시된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을 통해 부채농가는 농지를 농지은행에 매각하여 부채를 상환하고 다시 임차하여 영농을 계속(환매권도 보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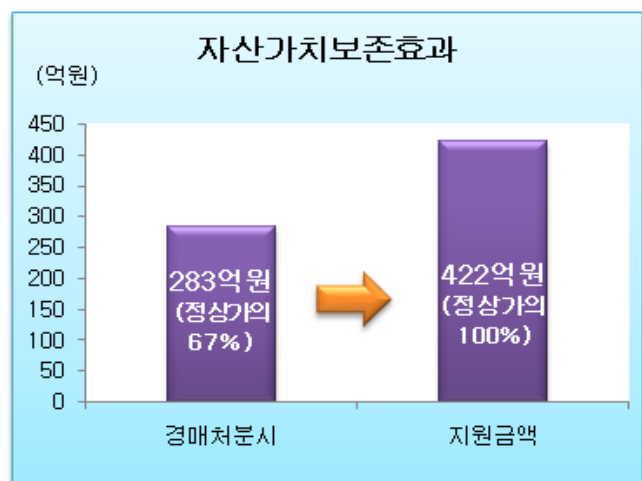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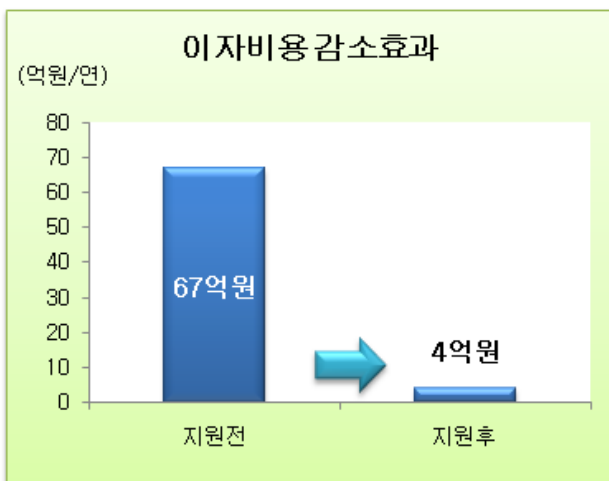
- '06년 자연재해, 연체로 파산직전에 있던 183농가가 311ha의 농지를 422억원에 농지은행에 매각하고 경영위기를 극복

※ 강원도 정선에서 고랭지배추(2.2ha)를 재배하는 조성개씨(49세)는 '03년 태풍 매미와 '04년 배추값 폭락으로 부채 2억3백만원, 연체 97백만원이 발생
 ○ 소유농지 밭 2.2ha를 경매처분시 정상가(2억67백만원)의 60% 수준(1억 6천만원)밖에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농지은행 사업대상자로 선정
 ⇒ 농지값을 정상가(2억67백만원)로 받아 부채를 청산하고도 64백만원이 남았고, 연체이자 연 800만원 대신 임차료 270만원만 부담하면서 영농을 유지

○ '07년에는 지원 요건(연체액 5천만원 이상)이 연체액 기준에서 부채액 기준으로 완화되고, 사업량도 372ha(566억원)로 확대되며

- '08년부터는 사업비가 연간 1,000억원 수준으로 확대되어 더 많은 농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2006년 농지매입 경영회생지원사업 추진효과 >



가. 친환경농업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었습니다.

◇ 개방에 대응한 우리 농산물의 품질경쟁력 향상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친환경 농업생산 기반을 확대

■ 점점 더 많은 농가가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 친환경농산물 생산비중은 '02년 1.1%에 불과하였으나, '06년에는 6.2%로, '07년에는 7%로 증가하였고, '13년에는 더 많은 농가(13만호)가 참여하게 되어 생산비중은 10%수준으로 확대됩니다.

* 친환경농산물 비중 : ('02) 1.1% → ('04) 2.5 → ('06) 6.2 → ('07) 7.0

*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 : ('02) 12천호 → ('04) 29 → ('06) 80 → ('07) 90

※ 친환경농업은 관행농가에 비해 노동력(28.4%)과 생산비(17.7%)는 증가하지만 평균 판매가격이 13.2%증가하고 순수입이 4.9% 증가('05년 농경연 연구)

■ 집단화된 친환경 농업지구 및 광역 친환경농업단지 등 친환경 농업 생산기반이 확대되어 친환경농업 여건이 좋아졌습니다.

○ 읍·면 중심 친환경농업지구(10ha이상)가 '02년 613개소였으나, '06년에는 820개소로 늘어나고 시·군 중심 광역친환경농업단지(1,000ha, 개소당 100억원)도 3개소가 조성되었습니다.

- '07년에는 친환경농업지구와 광역친환경농업단지가 각각 879개소(신규 59)와 9개소(신규 6)로 늘어나고, '13년에는 1,250개소와 50개소로 확대되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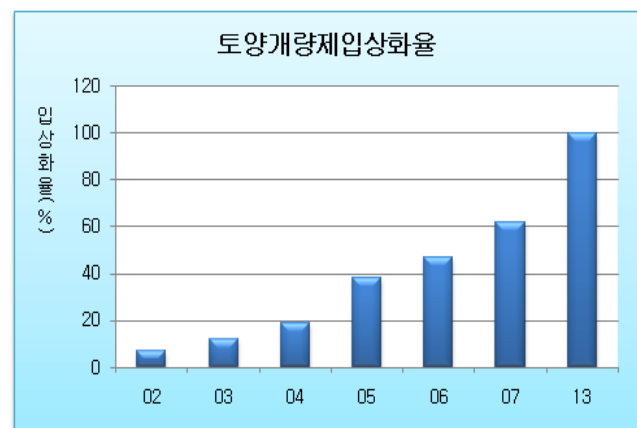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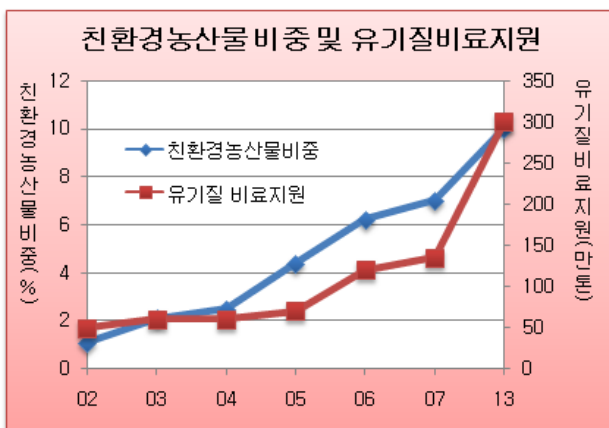
■ 친환경 농자재 이용이 수월해졌습니다.

- 유기질비료 지원이 '02년 50만톤(175억원)에서 '06년 120만톤(420억원)으로 늘었고, '07년 135만톤(473억원), '13년 300만톤(1,200억원)으로 확대됩니다.
- 시설원예작물에 대한 천적방제비 지원이 '05년 321ha에 12억원, '06년 1,000ha, 38억원으로 늘었으며, '07년에도 1,000ha에 38억원, '13년에는 4,200ha에 92억원으로 늘어납니다.
- '07년부터 친환경 농자재 목록 공시제도가 도입되어 농업인들의 친환경 농자재 선택이 용이해 집니다.

■ 입상(알갱이)화된 토양개량제로 살포가 편리해 졌습니다.

- 가루형태 토양개량제(규산·석회질비료)의 입상화율이 '02년 7%에서 '06년 47%로 늘었고, '07년에는 62%, '13년까지 100% 입상개량제로 전환됩니다.

* 토양개량제 지원 : ('02) 809천톤 → ('06) 644 → ('07) 547 → ('13) 896



나. 가축분뇨를 양질의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경종과 축산이 상생하면서 자연생태를 보전하는 자연순환농업 구현

- 가축분뇨 자원화율을 높이고 토양환원 촉진을 위한 「자연순환농업 추진대책」 수립·시행('06.6)

■ 자연순환농업으로 축산농가의 가축분뇨처리 부담이 줄어들고, 경종농가는 경영비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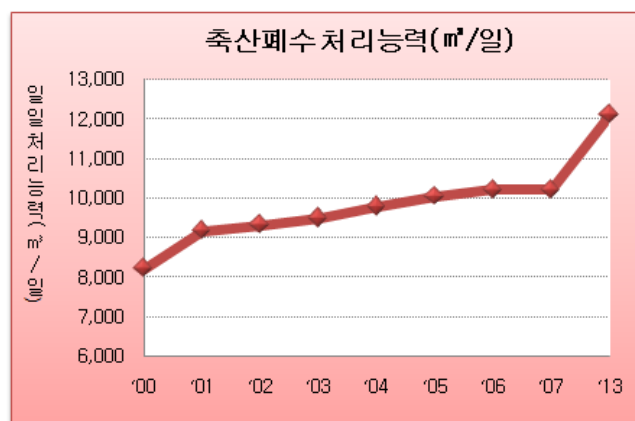
- '02년 가축분뇨 중 80%, '06년에는 82% 정도가 퇴·액비 등으로 자원화되었으나 '07년 83%, '13년에는 90%이상이 자원화 됩니다.

■ 환경친화적으로 축산업에 종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영세한 축산농가의 가축분뇨가 하천오염의 원인이었으나,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의 확충으로 농가부담은 줄어들고 하천수질도 개선되었습니다.

* BOD 오염물질 삭감량 : ('03) 81톤/일 → ('04) 88 → ('06) 90 → ('07) 92 → ('13) 102

- 농지법 개정으로 농지에 축사설치가 용이하게 됨에 따라 '07년부터 경종농가와 연계된 친환경축산 표준모델이 마련됩니다.



다. 고품질 우량종자를 더 많이 보급받게 되었습니다.

◇ 민간의 품종개발연구 집중지원으로 종자 R&D 투자 효율성 제고

- 우수 품종 보급·판매 지원을 통한 종자수출 증가로 종자 산업을 수출전략산업으로 육성

■ 고품질 우량종자 확보가 더욱 용이해집니다.

- 정부가 공급하는 고품질 벼 보급종 갱신율이 '02년 약 20%수준에서 '06년 35.5%로 확대되었고 '07년에는 42%로 확대됩니다.

* 벼 보급종 갱신율 : ('02) 20.8% → ('04) 28.5 → ('06) 35.5 → ('07) 42.0

* 벼 보급종 공급량 : ('02) 10,782톤 → ('04) 14,028 → ('06) 16,799 → ('07) 19,400

- '08년에는 보급종 갱신율이 50%로 늘어나 농업인들이 2년에 한 번씩 고품질 벼 종자 갱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 육종가는 더 많은 신품종 개발자금을 지원받게 됩니다.

- 육종가가 신품종 개발시 정부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02년 24억원에서 '06년에는 50억원으로 늘었습니다.

* 품종개발 지원규모 : ('02) 24억원 → ('04) 26 → ('06) 50 → ('07P) 70 → ('13P) 100

- 또한, 육종가가 신품종을 등록하거나 해외 품종보호출원을 할 경우 정부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06년 품종당 3백만원에서 '07년 5백만원까지 늘어났습니다.

■ 종자산업 육성 지원으로 종자수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 종자산업 육성지원으로 종자수출이 '02년 17백만불에서 '06년 20백만불로 증가하였고 '13년 50백만불로 확대될 계획입니다.

○ '07년부터 우수 품종을 생산, 수출하는 종자업체는 최대 30억원 까지 저리 융자지원(5년거치, 3%)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종자수출 : ('02) 17,449천불 → ('04) 16,861 → ('06) 20,010 → ('07P) 22,000 → ('13P) 50,000

■ 국산 우수 품종의 개발·보급 확대로 화훼류, 딸기 농가의 로열티 부담이 완화되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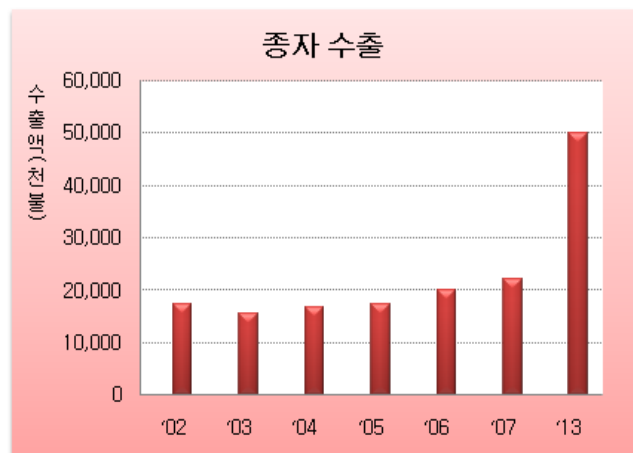
○ '06년부터 '10년까지 딸기·장미사업단에 매년 20억원을 투입하여 국산품종 재배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 딸기 : ('05) 9% → ('06) 18% → ('07P) 22% → ('13P) 55%

* 장미 : ('05) 1% → ('06) 2% → ('07P) 4% → ('13P) 25%

○ '07년부터는 국화 사업단을 운영하여 국산품종 개발과 보급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 국화 : ('06) 1% → ('07P) 2% → ('08P) 4% → ('13P) 15%



라. 브랜드 마케팅으로 더 나은 조건으로 판매할 수 있게 됩니다.

◇ '06년 세계 유명 농산물 브랜드와 경쟁할 수 있는 우수 브랜드 육성 대책 수립·추진

* 브랜드 육성목표('13) : 쌀(100개), 채소·과수(71개), 축산(80개)

■ 브랜드를 통해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게 됩니다.

- '03년 축산물을 시작으로 '07년부터는 모든 농산물에 대해 우수 브랜드 경영체 육성이 추진됩니다.
 - 농가를 조직화하고 품질관리 기준을 만들어 브랜드를 구축하고 판매전략 컨설팅지원을 강화하는 맞춤형 지원체계를 확립
- '07년에 우수 브랜드 경영체 18개소(쌀 8개소, 채소류 2개소, 과실 8개소)를 선정·지원하고, '04~'06년 선정된 73개 축산물 브랜드가 규모화·내실화 됩니다.

■ 선정된 우수 브랜드 경영체는 충분한 자금을 지원받게 됩니다.

- 금년에는 컨설팅, 기반조성, 시설현대화 등에 172억원이 지원됩니다.
- 브랜드사업 평가와 컨설팅 등을 통하여 문제점을 조기에 개선하고, 우수 경영체는 인센티브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 인센티브 자금은 공동마케팅조직 및 축산경영체 평균 20억원 수준

※ 경기·충북 복숭아 연합사업단을 구성하여 '03년부터 '햇사레' 공동 브랜드를 출범하고 4개 농협 조합원(1,682농가)이 생산량(연간 9천여톤)을 단일 브랜드로 출하하고 재배 및 수확 후 관리를 통일
⇒ '05년 농가수취가격 : (일반) 14,200원/4.5kg → (햇사레) 16,700원/4.5kg

마. 농가가 수출로 개방화 시대에 새로운 기회를 갖게 됩니다.

◇ '04년부터 수출유망상품 지원사업을 시작하는 등 적극 지원

○ '07년 신시장 개척을 위한 수출물류비 인센티브 대폭 확대

■ 우리의 농산물이 더 넓은 시장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 100만불 이상 수출국가가 '02년 49개국에서 '06년 56개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수출액도 '02년 16억불에서 '06년 23억불로 증가하였고 '07년 24.5억불, '13년 40억불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 농업인의 수출 비용부담이 크게 줄었습니다.

- 농가의 수출 물류비용 부담이 '02년 70%에서, '06년 60%로 낮아졌고, '07년부터 40%만 부담하게 됩니다.

※ 농업인이 러시아로 배를 100톤 수출할 경우, 수출물류비용 부담이 '02년 55백만원에서 '06년 47백만원, '07년 32백만원으로 감소

- 수출전용 냉장컨테이너(12FT)가 '02년 10대에서 '07년부터 50대로 늘어나 수출 소요 비용이 대폭 절감됩니다.
- '05년부터 '환변동보험' 가입비(500만원)를 지원받았고, '06년에는 최고 1,000만원까지 지원 받았습니다.

가. 인터넷을 통해 편리하게 농림사업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 '05년 개발된 AgriX를 통해 사업신청에서 자금집행까지 전 과정을 온라인화하여 농업인 편의증진, 업무간소화 등 도모

* 적용대상사업 : ('05) 직불제중심 → ('06) 축산관련사업 → ('07) 과수·원예분야

■ 지원받을 수 있는 농림사업을 쉽게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06년부터 AgriX에 접속하여 본인의 영농상황 등을 입력하면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을 쉽게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06년부터 130여개 사업 시행지침(5권, 3,000페이지)을 DB화하여 정보제공

○ '13년에는 PDA, IPTV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도 가능하게 됩니다.

■ 안방에서도 사업 신청과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종래에는 농림사업 신청시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기관에 제출해야 했으나, '06년부터 업무담당자가 AgriX에 연계된 전자민원시스템(G4C)을 열람·확인할 수 있게 되어 서류제출이 필요없게 되었습니다.

- 사업신청 후 진행상황도 SMS나 인터넷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07년에는 전년도에 신청한 신청서를 토대로 변동 사항만 수정하여 제출하면 되며, 인터넷을 통한 사업신청도 가능하게 됩니다.

나.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현장의 의견과 고객요구를 농정에 반영하고 쌍방향 의사소통을 위해 '04년 현장체험학습 도입, '06년까지 3개의 상시채널 유지

- 직원 개별의 '농정상담역', 2~5명 단위 '체험학습단', 부서(과·팀) 단위의 '과의 날 행사' 운영

■ 농림공직자의 현장체험학습 및 현장토론 확대로 농가들의 정책제안 및 의견제기 기회가 늘어났습니다.

- '04년 처음 도입한 「현장체험학습」에 이어 '05년 「과의 날 행사」를 통해 농림공직자들에게 농업 현장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현장 감각을 길러주고 있습니다.
- 농업인들과의 토론 또는 교류를 통해 현장농정을 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며, 현장애로 상담과 제도개선의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 연도별 현장체험학습 인원 : ('04) 81명 → ('05) 386명 → ('06) 345명

■ 농업인이 현장 컨설턴트로 농정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 '05년 「농정상담역」 제도를 도입하여 현장경험 부족과 현장의 요구에 둔감할 수 있는 농림공직자별로 2~3명의 선도농업인이 현장의 여건과 상황 등을 전화, 메일 등으로 알려줍니다.

- 또한 농업인들도 상담역 활동을 하면서 농림공직자로부터 농업에 필요한 정책정보와 지원방안들에 대해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 농정상담역 : ('05) 1,029명 → ('06) 1,253명

■ 현장 농업인의 경험과 아이디어가 농업정책에 직접 반영되고 있습니다.

- '05년부터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농정신뢰회복, 소비촉진·수출촉진, 도·농상생 등 3개 분야로 구분한 정책공모제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 '05~'06년 2년 동안 334명이 정책공모에 참여하여 그중 47건이 선정(상금 2억원)되었고 여성농업인아카데미 교육과정 등 10여건의 정책은 '06년부터 예산이 반영되어 운영
- '07년부터는 농업인뿐만 아니라 소비자도 참여하게 되어 농업 정책의 참여 기회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 '07년을 「농업계 대화합」의 元年으로 삼아 정부와 농업계가 합심하여 개방에 대비하는 지혜를 모아 나가겠습니다.

- 농업인단체와 정책간담회 정례화를 통해 현장농업인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농업인 단체와 시책에 대한 정책심사평가단을 구성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운영하여 나가겠습니다.

다. PCRM[정책고객관리서비스]으로 정책과정에 직접 참여합니다.

◇ '04년부터 정책고객의 정책과정 참여를 통한 고객 만족도 제고를 위해 PCRM을 통한 쌍방향 의사소통 전개

- 정책정보 제공 대상이 '04년 5만명에서 '06년 9만명으로 증가

■ 9만명의 고객이 농업정책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고 있습니다.

- '06년 현재 9만명에 달하는 농업인·주부 등 정책고객과 전문가들이 '주간 뉴스레터', '정책 속보' 등으로 만들어진 농정정보를 이메일을 통해 신속하게 제공받고 있습니다.
 - '07년말까지 11만명 수준, '13년에는 20만명으로 확대
-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06년부터 음성을 통해서(읽어주는 보도자료) 새로운 정보를 접할 수 있고, 농정을 쉽게 이해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만화(햇살이네 집)를 통해 정책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농업인들의 소중한 의견이 농업정책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 많은 분들이 농업정책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고(개봉률 68%)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직접 참여하고(설문 참여율 20%) 있습니다.

- ※ '04년 농가 부채 상환연장 신청이 저조하여 PCRM을 통해 설문조사(2회)를 한 결과, “몰랐다”는 의견이 많아 상환기간을 연장, 33%에 불과했던 신청률이 94%로 크게 증가
- ※ '06년 2차에 걸친 농업·농촌종합대책 설문조사 결과, 1만여 명이 다양한 의견을 주셨고 이를 반영하여 대책을 수립중

가. 여성농업인이 전문적인 역량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 **농업경영주 중 여성농업인 비중이 '02년 15.3%에서 '06년 17.2%, '13년에는 20%수준으로 확대**

○ 협동조합 조합원 중 여성농업인이 '02년 21.2%에서 '06년 26.4%로 늘었으며, '13년에는 30%이상으로 확대

■ 다양한 전문교육으로 여성농업인 역량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 여성 농업인 교육이 '02년 6개 과정에서 '06년 16개 과정으로 확대되어 보다 다양한 전문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후계농업인 선정, 한국농업대학 입학 시 여성이 우대받고 있습니다.

○ '02년부터 후계농업인 20% 범위에서 여성농업인이 우선 선발 되고, '05년부터 농업인턴이나 대학생 창업연수생 및 창업농 선발시 여성이 가점을 받게 되었습니다.

○ 한국농업대학에 지원하는 여학생의 우선 선발비율이 '02년 모집 정원의 20%에서, '04년 30%로 늘어났습니다.

나. 여성농업인들의 창업이 보다 쉬워졌습니다.

◇ '06년부터 지역농산물과 여성 특유의 솜씨, 전통기술을 연계·활용한 여성농업인의 소규모 창업을 지원

- 창업에 필요한 컨설팅과 시설 및 장비구입 등을 위한 자금을 개소당 45백만원씩 지원

■ 여성농업인들이 창업 컨설팅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07년 처음으로 30명의 창업컨설팅 전문가가 양성되어 여성농업인들이 창업시 사업의 타당성, 관련법령, 마케팅 등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11년까지 창업컨설팅 전문가 169명 양성

■ 여성농업인들이 창업 시 시설자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06년부터 농촌 여성의 농외소득 증대를 위해 개소당 45백만원의 창업자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 '06년 지평선토속한과(전북 김제) 등 9개소 4억원 창업 지원
- '07년에 9개소가 창업지원금 45백만원씩을 지원받게 되며, '13년까지 156개소가 지원받게 됩니다.

※ 경기 안성의 김금희씨는 새송이버섯 단일품목으로 고용인구 95명에 연간 매출액 48억원 달성

※ 경남 합천의 강영란씨는 돼지고기와 홍삼이 만난 '심바우 포크'를 개발하였으며, 돼지 1,800두 규모의 월계축산 공동대표로 활약

다. 여성농업인의 지위와 권리가 향상되고 있습니다.

◇ 여성농업인 등 가족구성원의 지위향상과 농가경영 개선을 위해 「농가경영협약」을 도입, '04년 처음으로 22농가 시범 추진

○ '06년부터 여성농업인단체 주관의 농가경영협약 교육 지원

■ 여성농업인 등 가족종사자가 지위와 권리를 보호받게 됩니다.

○ '04년 처음으로 22개 선도농가가 농가경영협약을 맺은 후, '06년에 92농가가 체결, '07년 214농가, '13년 1천농가로 늘어나게 됩니다

* 농가경영협약 : 가족구성원이 공동으로 농업경영에 참여하여 역할분담 하고, 경영 계획 수립, 보수, 휴가, 경영승계 등 합의한 사항을 문서로 작성·실천

○ 협약농가는 창업농 및 부부후계농 선발, 정책자금 우선 지원 등 우대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06년 협약농가 등은 부부간 협의 증가(99.3%), 여성지위향상(94.2%), 경영개선(95.6%) 등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여성농업인이 제도적으로 직업적 지위를 인정받게 됩니다.

○ 관련법규 보완을 통해 읍·면장이 농업종사사실을 확인해 주는 '농업인 확인제도'가 '07~'08년중 마련됩니다.

- 이를 통해 여성농업인이 농업종사경력을 인정받지 못하거나, 교통 사고 발생시 전업주부로 보험기준액을 산정받는 불이익을 방지

라. 여성 결혼이민자가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게 됩니다.

◇ 농촌총각의 국제결혼이 증가함에 따라 여성결혼이민자가 농촌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토록 '07년부터 방문 교육도우미 등 지원

○ '07년 30개 시·군에서 시범 실시, '11년부터 전국으로 확대

* 농촌지역 여성결혼이민자 수('05) : 14천명

* 농업인 국제결혼 비율 : 35.9%

■ 방문교육도우미의 도움으로 언어 및 문화차이를 극복합니다.

○ '07년 1,800명의 여성결혼이민자가 300명의 방문교육도우미로부터 한국어교육, 생활상담 등을 지원 받게 되며, '13년에는 11천명이 지원받게 됩니다.

■ 여성결혼이민자 부부교실 및 가족캠프 등을 통해 화목한 가정 및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 '07년에 여성결혼이민자 가족 1,200명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는 다문화 교육에 참여할 수 있으며, '13년에는 4천명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 '07년에 모범가정 중 8농가에게는 모국방문, 16농가에게는 선진지 견학 기회가 주어집니다.

구 분	2002년	2006년	2007년
□□ 쌀 농업인			
○ 쌀전업농 소득	3,713만원	4,444만원	4,600만원
○ 쌀전업농 생산비중	23%	32%	34%
○ 쌀 직불금(ha당)	467천원	1,160천원	
○ 공공비축 매입량	549만석	350만석	300만석
○ 완전미 비율	71.4%	88.9%	90.0%
○ 질소질 비료 시용량(10a당)	15.4kg	9.5kg	9.3kg
○ RPC건조·저장시설	81개소	110개소	110개소
□□ 원예 농업인			
○ 과수전업농가(생산비중)	18천호(39%)	19천호(42%)	19.5천호(43%)
○ 화훼 신품종 개발	319개	633개	710개
○ 원예자조금 조성 품목	3개	21개	23개
○ 농작물재해보험 대상품목	2개	7개	10개
- 가입농가수(가입율)	18,549호(18.3%)	27,327호(24.5%)	28,693호(26.5%)
□□ 축산 농업인			
○ 한우/돼지 브랜드 유통비율	17%/41%('03)	32%/51%	34%/53%
○ 한우 1등급 출현율	35.2%	44.5%	48.0%
○ 한우 체중(18개월령, 수소)	522.1kg	566.8kg	580.0kg
○ 가축공제 대상축종/가입율	4개/10.1%	9개/40.7%	11개/42.7%
○ 우유잉여량	314천톤	97천톤	93천톤
○ 가축질병 발생율	1.5%	1.2%	1.1%

1

개방에 대비할 새로운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 '04년 쌀 협상으로 '14년까지 10년간 추가유예 권리를 확보

- '93년 UR협상 결과로 '95~'04년까지 관세화를 유예
- '14년까지 의무수입물량을 도입, 이중 일부를 밥쌀용으로 시판
- * 쌀 의무수입 물량 : ('95) 51천톤 → ('04) 205 → ('14) 408

■ 수입쌀의 부정유통 차단으로 농가 피해가 최소화됩니다.

- 가공용 쌀은 육안식별이 쉬운 태국산 쌀과 혼합하여 중국산 쌀의 국내산 둔갑판매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 '06년부터 시판되는 밥쌀용 수입쌀은 유통단계별로 추적 조사 하고 부정유통 개연성이 있는 업체는 잠복근무 등의 집중 감시됩니다.
 - 원산지 표시위반자 처벌 강화를 위해 농산물품질관리법 개정('05.8)
 - * 허위표시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중전 5년/ 5천만원)

■ '08년부터 수입쌀의 대량 소비처인 음식점에서도 쌀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됨에 따라 수입쌀의 둔갑판매가 더욱 어려워집니다.

가. 쌀 품질고급화로 수입쌀과 경쟁할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 쌀의 생산에서 유통까지 체계적인 품질향상 대책 추진

- 완전미 비율이 '02년 71.4%에서 '06년 88.9%로 확대

■ 정부 보증 우량종자 공급이 늘어나 소비자가 선호하는 고품질 쌀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정부 보증종자 공급율이 '02년 소요량의 20%에서 '06년에는 35%로 향상되었으며 '07년에는 42%까지 확대됩니다.
- '08년부터 공급율이 50%까지 확대되어 농가가 2년마다 순도 높은 우량종자를 보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질소질비료 지원이 중단되고 유기질비료 공급이 늘어나 지력 증진 및 쌀 품질향상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 유기질비료 지원액은 '02년 210억원에서 '06년에는 420억원으로 늘어났고, '07년에는 473억원, '10년에는 750억원으로 확대됩니다.
- 단백질 함량을 높여 쌀 품질을 저하시키는 질소질 비료 사용량은 '02년 10a당 15.4kg에서 '06년에는 9.5kg으로 감소하였고 '07년에는 9.3kg까지, '13년에는 9.0kg까지 줄어나갈 계획입니다.

나. 쌀 대표브랜드 육성으로 쌀농가가 경쟁력을 갖게 됩니다.

◇ 농가와 브랜드 경영체는 품종통일 등 계약재배를 내실화하여 품질균일성이 확보된 대표브랜드를 육성

○ '07년부터 '10년까지 시·군단위 대표브랜드 100개 육성

■ 대표 쌀 브랜드 경영체가 우리쌀의 30%를 생산하게 됩니다.

○ 쌀 브랜드 수는 총 1,873개이나 개별브랜드가 전체의 96%를 차지하고 농가조직화·규모화 및 품질관리가 미흡한 상황입니다.

○ '07년도 시설현대화 자금 및 교육·홍보·컨설팅 비용을 8개소에 지원하고 '08년 32개, '10년까지 총 100개 브랜드경영체에 지원되어 대표브랜드쌀 취급비율이 '07년 10%에서 '10년 30%로 늘어납니다.

* 시설현대화 : 개소당 20억원(국고 40%), 교육·홍보 비용 : 개소당 2억원(국고 50%)

■ 소비자단체 주관의 브랜드쌀 평가를 통해 소비자가 신뢰하고 선호하는 쌀을 생산하게 되었습니다.

○ '03년부터 매년 평가를 통해 12개 우수브랜드가 선정되고 있으며 '07년에는 평가내용이 개선·보완됩니다.

* 평가방법 : 품위, 식미, 품종순도, 소비자만족도 대해 연중 3회 실시

* 평가내용 개선 : 추천업체 매출액강화, 판매가격 기준상향조정, 품종순도 하한선 설정 등

■ '07년부터 쌀 품종표시제가 실시되어 소비자의 알권리가 존중되고 정직한 쌀농가가 보호받게 됩니다.

* 품종표시 방법 : “품종명”(품종순도가 80%이상 이어야 함), “계통명”(국내산은 일반계나 다수계로 표시), “혼합”(품종이나 계통이 혼합된 경우)

⇒ 위반시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다. 쌀 전업농의 규모화가 진전되고 소득도 크게 늘었습니다.

◇ 쌀 전업농에 대한 영농규모화사업 지원으로 전업농가의 평균 경작규모가 '02년 2.8ha에서 '06년 4.4ha로 증가

○ '06년 농지구입자금 금리 인하(3→2%)로 이자부담 경감

■ 쌀 전업농이 도시근로자 보다 높은 소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 쌀 전업농 평균소득은 '02년 3,713만원에서 '06년 4,444만원으로 20% 증가, '07년 4,600만원, '13년에는 5,900만원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 '06년 기준 쌀 전업농 평균 농가소득은 전체농가 평균소득보다 51% 높고 도시가구 소득보다 8% 높은 수준

■ 쌀 전업농이 규모화되면서 생산비중도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 전업농의 평균 경작규모는 '02년 2.8ha에서 '06년 4.4ha로 늘어났고, '07년 4.6ha, '13년에는 6.0ha로 늘어나게 됩니다.
- 전업농의 생산비중은 '02년 23%에서 '06년에는 32%로 증가하였고, '07년 34%, '13년에는 50%로 늘어나게 됩니다.

■ 쌀 전업농의 농지구입자금 금리 부담이 줄었습니다.

- 농지구입자금 지원금리가 '02년 3%에서 '06년에는 2%로 낮아졌습니다.
- 쌀 전업농의 연간 이자부담이 '06년에 179억원 줄었으며 '07년에는 187억원이 줄어들게 됩니다.
- * 1ha 농지를 매매사업으로 지원받은 농가는 이자상환액이 연간 39만원, 20년 분할 상환기간 동안 774만원 경감

라. RPC가 농업인의 쌀 판로확보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 RPC가 수확기에 벼를 많이 매입하고 저장할 수 있도록 벼 매입자금 및 건조·저장시설 확충 지원

* 건조저장시설 예산 : ('02) 157억원 → ('06) 249 → ('07) 258 → ('13) 408

■ RPC의 벼 매입이 늘어나 수확기 판매여건이 좋아졌습니다.

○ 수확기에 농가벼 매입 확대를 위해 매년 RPC가 벼 매입자금 9,184억원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 '04년에 RPC 경영평가 제도를 도입, 수확기 벼 매입실적 등을 평가하여 우수업체에게 벼 매입자금을 우대지원하고 있습니다

* A등급 27.5억원(0%), B·C등급 25~17.5억원(1%), D·E등급 15~7.5억원(2%)

○ 벼 매입이 부진하거나 매입을 기피하는 업체에게는 지원이 중단됨에 따라 RPC의 통·폐합이 촉진되고 있습니다.

* RPC통·폐합 실적 : ('04) 8개소→ 3(△5) ('05) 17→4(△13), ('06) 7→3(△4)

■ RPC시설 확충으로 쌀 품질이 더욱 좋아지게 되었습니다.

○ '02년에는 건조·저장시설 81개소가 설치되었으나, '06년에는 110개소로 확대되었고 지원단가도 인상(4.5억원→5.5)되었습니다.

○ '07년에는 고품질 브랜드쌀 유통에 필요한 저온저장시설 10개를 포함하여 110개소가 신규 설치됩니다.

* 건조·저장시설 지원개소 : ('02) 81개→ ('06) 110→ ('07) 110→ ('13) 210

가. 목표가격의 85%까지 보장받게 됩니다.

◇ 논농업직불제와 추곡수매제 등 쌀농가 소득안정장치를 '05년 목표가격과 산지쌀값의 85%를 보전하는 쌀소득보전직불제로 개편

- 농업인들의 편의를 위하여 신청절차를 간소화 하였고, 직불금 지급시기도 앞당겨 조정(고정 : 11월→ 10, 변동 : 4월→ 3)

* 예산 : ('02) 3,983억원 → ('04) 4,760 → ('06) 16,175 → ('07) 16,672 → ('13) 17,240

■ 더 많은 쌀 농업인이 직접직불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 '05년부터 지원면적 제한(4ha)이 있는 논농업직불제와 소득지지 기능을 상실한 추곡수매제(전체생산량의 17%수매)를 폐지하고 모든 쌀 농가를 지원하는 쌀소득보전직불제를 도입하였습니다.

- '02년 논농업직불금으로 평균 467천원/ha을 지급받았으나, '05년 쌀소득보전 직불금으로 평균 1,558천원/ha, '06년에는 평균 1,160천원/ha을 지급받았습니다.

* 쌀 수입(직불금 포함시) : ('05) 165,574원/80kg → ('06) 166,727원(1,153원 증가)

- '07년에도 목표가격과 수확기 쌀값의 차액의 85%를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으로 지급 받게 됩니다.

■ 쌀값이 떨어져도 쌀농가의 소득감소는 크지 않습니다.

- '05년에 수확기 쌀값이 '04년 대비 13.4% 감소하였지만 고정 직불금과 변동직불금 지급으로 95.9%가 보전되어 쌀 소득은 4.1% 감소하는데 그쳤습니다.

* 수확기쌀값 : ('04) 161,630원/80kg → ('05) 140,028 (△13.4%)

* 쌀농가소득 : ('04) 172,686원/80kg → ('05) 165,574 (△4.1%)

- '06년에는 직불금으로 목표가격의 98% 수준까지 보전 받게 되었고, '07년에도 쌀값 하락시 직불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 수확기쌀값(147,715원/80kg) + 직불금(19,012) = 166,727(목표가격의 98%)

■ 직불금 신청절차가 간소화되고 더 빨리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 '02년 논농업직불제는 영농일지를 비치토록 하였으나 '05년에 폐지되었고, 신청도 행정기관에서 출력한 내용을 농업인이 확인 하는 것으로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 '05년산 변동직불금은 당초 '06.4월에 지급될 예정이었으나 3월로 앞당겨 지급되었습니다.

- '06년도 고정직불금도 당초 11월에서 10월로 앞당겨 지급받아 수확기 부족한 자금 마련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나. 공공비축제 도입으로 시장기능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 '05.7월부터 대표적 가격지지 정책인 추곡수매제를 폐지하고 시장가격으로 매입·판매하는 공공비축제 도입

○ 양곡연도말 정부재고를 864천톤(600만석) 수준으로 비축·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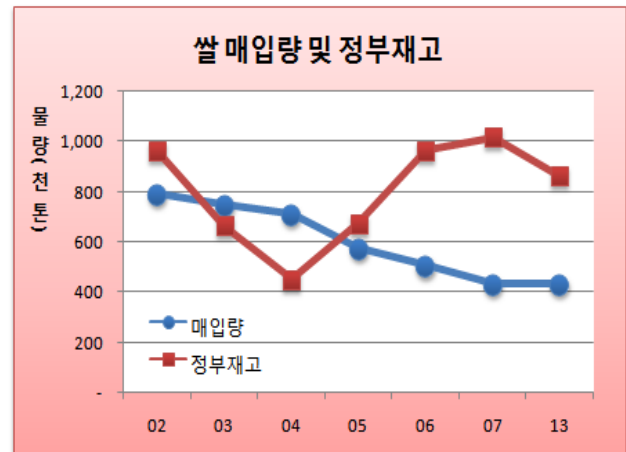
* FAO는 국내 식용소비량의 17~18%수준을 적정재고량으로 권장

■ 공공비축 매입물량을 단계적으로 감축하여 농가의 부담이 최소화되었습니다.

○ '05년 공공비축제를 도입하면서 농가 불안 최소화를 위해 공공비축 물량으로 576천톤(400만석) 매입했습니다.

- 매년 72천톤(50만석)씩 감축하여 '06년 504천톤(350만석), '07년에는 432천톤(300만석)매입

* 매입량 : ('02) 791천톤(549만석) → ('05) 576(400) → ('06) 504(350) → ('07P) 432(300)



■ 산물 벼를 포대 벼로 전환할 수 있고 매입시기도 앞당겨져 산물벼의 조기 출하가 가능해졌습니다.

○ '06년부터 매입시기도 '05년보다 10일 빠른 9.20일로 앞당겨졌습니다.

* 매입시기 : 산물벼(9.20~11.15), 포대벼(10.25~12.31)

■ 흉년이나 기상이변 등 비상시를 대비하여 약 2개월분의 국민 식량이 안정적으로 비축되고 있습니다.

○ 정부재고는 '06년말 966천톤(671만석), '07년말 1,017천톤(706만석)이 유지됩니다.

1

품질 좋은 농산물로 세계시장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가. 고품질 브랜드 채소 생산으로 경쟁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 **시장개방 확대와 대형매장 증가 등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시설채소 전문생산단지가 확대되고 우수 브랜드경영체 육성 추진**

■ **시설채소 전문생산단지가 확대되어 고품질의 채소 생산을 통해 농가가 더욱 쉽게 수출판로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 '02년 17개소(506ha)의 시설채소 전문생산단지가 '06년에는 42개소(842ha)로 늘어났습니다.

- 채소류 수출실적도 '02년 89백만불에서 '06년 134백만불로 증가

* 채소 주요수출품 : 파프리카 48백만불, 채소종자 18, 딸기 6, 토마토 6

* 한국산 파프리카의 일본시장 점유율 : ('02) 55% → ('06) 64%

■ **우수 농산물 브랜드 경영체로 선정되면 생산에서 유통까지 패키지로 지원받게 됩니다.**

○ '07년에 브랜드경영체 2개소, '13년까지 50개소를 육성하여 우수 브랜드농산물 유통비율을 21%까지 확대

○ 채소류 우수브랜드 유통비율이 '07년 2%에서 '13년에는 21%까지 늘어나 유통환경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합니다.

- '07년 선정되는 브랜드 경영체 2개소에는 비가림시설 등 고품질 생산시설지원, 공정육묘장이나 종합처리시설, 조직결성과 브랜드 개발·관리 등에 총 200억원이 지원됩니다.

나. 과수농가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 ◇ '04년에 과수산업종합대책을 수립하여 고품질생산 및 차별화된 유통체계 정착에 필요한 사업을 집중 지원

■ 규모화된 과수 전업농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 '02년 1.5ha이상 규모화된 전업농가 18천호가 과실 생산량의 39%를 생산하였으나, '06년에는 전업농가 19천호가 42%를 생산했습니다.
- 전업농가는 '07년 19.5천호, '13년에는 22천호로 늘어나 과실 총 생산량의 50%를 담당하게 됩니다.
- '07년부터 규모화 지원 융자금 이자율은 '04년 3%에서 2%로 낮아져 연간 17억원의 농가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 과원현대화로 과수농가가 더 적은 생산비를 부담하게 됩니다.

- 과원 현대화사업으로 '04~'06년까지 15천ha에 키낮은 사과원, 비가림 시설, 지주시설, 관배수시설 등 고품질생산시설이 지원되었습니다.
- '07년에 4천ha, '08~'10년까지 13천ha가 추가로 지원됩니다.
 - * 키낮은사과원 효과 : 노동력절감(162 → 110시간/10a), 생산비절감(890 → 400원/kg)
 - * 비가림재배 효과(포도) : 약제살포(13 → 5회), 당도(13.7 → 14.4°brix)

■ 명품 과실브랜드 육성으로 더 높은 소득을 올리게 됩니다.

- '07년부터 과실공동브랜드 경영체 8개소를 지원하여 고품질 생산과 공동출하·공동계산 체제를 구축하고 '13년까지 총 21개소로 늘려 과실 유통량의 30%를 브랜드과실로 출하하게 됩니다.
 - * ('07) 8개소 / 22억원 → ('08) 5 / 46 → ('09) 4 / 52 → ('10년이후) 4 / 66

다. 인삼계열화사업으로 고품질 청정인삼 생산이 늘어나고 경영비 부담이 줄었습니다.

◇ 고품질 청정인삼 생산과 재배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인삼계열화 사업이 '04년 500^{ha}를 시작으로 '06년 1,450^{ha}로 확대

- 사업주체(농협, 제조업체)와 농가간의 계약재배를 통해 생산이력 관리 및 안전성을 확보하고, 수확된 인삼은 전량 수매·가공·판매

■ 안전성이 확보된 고품질 청정인삼을 생산하게 되었습니다.

- 계열화 사업 확대로 재배단계부터 농약 안전사용기준 준수 등 안전성이 확보되고 있습니다.
- 고품질 청정 원료삼 수매가 '04년 800톤에서 '06년 1,150톤으로 늘어났고 '13년에는 2,660여톤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 계약재배 확대로 안정적으로 판로를 확보하고 소득도 안정됩니다.

- 계열화사업에 참여하는 농업인은 ha당 27백만원의 경영비를 무이자로 지원받게 됩니다.
- 계약재배 면적이 '04년 500ha에서 '06년 1,450ha까지 확대되었고, '07년에는 1,850ha, '13년에는 3,540ha까지 확대되어 많은 인삼 재배 농가들이 경영비를 무이자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라. 화훼농가가 품종개발, 시설 현대화, 유통혁신 등에 힘입어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 **고품질 화훼류의 안정적 생산 및 유통을 위해 전문화, 집단화된 화훼전문 생산단지를 선정·관리**

○ 전문생산단지 중심으로 수출컨설팅, 전담지도사 배치, 재배지 검역 서비스 등 운영지원을 통해 화훼류 수출을 지속적 확대

* 생산단지 수출실적(비중) : ('03) 24백만\$(52%) → ('04) 28(57)→ ('05) 31(60)

■ **국내산 신품종이 지속적으로 확대 개발·보급되고 화훼류 소비도 증가하여 화훼농가의 판로개척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 장미, 국화, 백합 등 국내산 신품종의 개발·보급이 확대되었습니다.

* 신품종 : ('02) 319품종 → ('05) 541→ ('06) 633 → ('07) 710→ ('13) 1,300

○ 국민의 생활수준 향상과 고품질 제품의 생산·공급에 힘입어 화훼류 소비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 1인당 화훼소비액 : ('02) 16천원→ ('05) 21→ ('06) 23→ ('07) 25→ ('13) 44

■ **화훼생산단지 조성으로 소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 유통구조가 개선되면서 공영도매시장 출하가 확대되고, 거래가격 공개로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가 실현되고 있습니다.

* 거래물량 : ('02) 65백만본 → ('05) 73 → ('06) 76 → ('07) 80 → ('13) 110

○ 화훼전문생산단지를 중심으로 농가를 조직화하여 품질이 우수한 꽃을 생산·판매함으로써 농가 수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 농가 조수입 : ('02) 58백만원→ ('05) 79→ ('06) 85→ ('07) 91→ ('13) 138

가. 유통협약 · 유통명령이 수급조절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 농업인, 유통인, 소비자 등이 자율적으로 농산물 수급과 가격을 안정시켜 나가기 위해 유통협약 제도를 운용

○ '03년에는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유통명령 제도 도입

■ 유통명령 제도로 생산과잉 시 수급조절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생산과잉에 의한 가격하락으로 농가 소득감소 및 판로걱정이 많았으나 '03년 유통명령 제도 도입으로 소득불안이 크게 줄었습니다.

※ 감귤의 경우 유통명령제 시행으로 제도가 도입되지 않았던 '02년을 기준으로 '03년 963억원, '04년 1,983억원, '05년 2,117억원의 농가 조수입 증대 효과

■ 생산자 자율적인 유통협약으로 품질 나쁜 농산물의 출하와 유통을 제한함으로써 수급조절과 품질향상을 이루었습니다.

○ '07년 이후에도 수급불안이 우려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유통협약과 유통명령을 통하여 공급과잉으로 인한 가격하락과 수급불안을 해소하여 농가는 안심하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게 됩니다.

* 유통협약 : ('98) 2회(양파, 무·배추) → ('02) 2회(대파, 양파) → ('04) 2회(감귤, 심비디움) → ('05) 2회(대파, 양파)

나. 생산자 자율적인 수급안정이 가능하게 됩니다.

◇ 생산자조직 중심의 자율적 수급안정체계 구축을 위해 생산자 단체가 조성한 자조금만큼 정부가 매칭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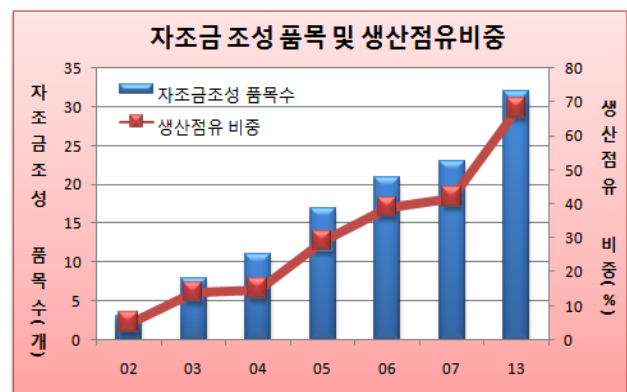
- '00년 2개 자조금 단체로 시작하여, '06년 21개 자조금 단체로 확대

■ 생산자단체의 자조금 조성 확대로 소비촉진 등 수급안정사업을 실시하는 품목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 자조금 단체 결성 품목이 '02년 파프리카, 참다래 등 3개에서 '06년에는 21개 품목으로 늘어났습니다.
 - '07년 인삼 등 2개 품목이 자조금 단체를 결성하고 '13년 주요 원예 농산물의 대부분 품목(32개)에서 자조금 단체가 결성
- '05년부터 생산자의 자조금 조성 한도가 출하액의 1%에서 3% 이내로 확대되었고 정부가 지원하는 규모도 커졌습니다.
 - '07년에는 자조금을 적립이 가능하도록 목적기금화하여 사업의 자율성을 높이고, '10년에는 의무자조금 제도를 도입

■ 자조금 사업 참여가 늘어나 수급조절능력이 향상됩니다.

- 자조금 단체 소속 농업인의 생산량이 '02년 주요 원예 농산물 (32개 품목)의 5%에서 '06년에는 39%로 늘어났습니다.
- '07년에는 40%를 넘어서고, '13년에는 70% 정도를 차지하여 생산자단체 스스로 수급 조절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다.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으로 자연재해 위험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 자연재해로부터 농가를 보호하기 위한 농작물 재해보험은 대상 품목이 '02년 2개 품목에서 '06년 7개 품목으로 확대

○ 보험료지원율은 '02년 59%에서 '06년 69%로 확대

■ 농업인의 보험료 부담이 '02년 41%에서 '06년 31%로 줄었습니다.

○ '07년 보험료 부담율은 전년대비 3% 증가하였으나, 보험료율이 전년대비 약 10% 인하되어 농가의 실질적인 부담은 줄었습니다.

* 농가 보험료 부담율 : ('02) 41% → ('04) 38 → ('06) 31 → ('07) 34

※ 경남 진주에서 배 1.4ha를 재배하며 연평균 8,000만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 A씨는 '06년 태풍 등으로 87%의 피해를 입고 5,626만원 보험금 수령 - '02년 A씨는 보험료 605만원 중 302만원 부담(303만원 정부부담), '06년에는 보험료 1494만원 중 538만원만 부담(956만원 정부부담)

■ 보험 대상 농작물과 보장 대상 재해가 늘어나 더 많은 농가가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02년에는 주산지에서 재배되는 사과·배만 보험가입이 가능하였지만, '06년에는 전국의 사과·배·포도·복숭아·단감·감귤 및 뽕은감(주산지)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대상재해도 '02년 태풍·우박·동상해에서 '06년 집중호우·과수보상 등으로 재해 범위가 확대

○ '07년에는 주산지의 참다래, 자두, 밤 등으로 품목을 확대되며, '13년까지 식량작물·채소류 등 약 30개 농작물로 확대됩니다.

1

세계 수준의 품질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가. 고품질 브랜드 축산물 생산으로 소득이 높아졌습니다.

◇ '03년부터 우수 축산물 브랜드 육성사업을 추진하여 위생·안전성을 갖춘 고품질 축산물을 공급

- 축산물 브랜드 경진대회('03), 우수브랜드 인증('04), 경영컨설팅사업('05) 등을 실시, '06년까지 우수 브랜드 73개소(한우44, 돼지29) 육성 지원

■ 고품질 브랜드 축산물을 더 많이 생산하게 되었습니다.

- '03~'06년 4년간 브랜드 유통비율이 한우는 17.4%에서 32.2%로, 돼지는 41.4%에서 50.9%로 증가하였습니다.

- '13년까지 브랜드 유통비율은 한우 50%, 돼지 70%로 확대

- 브랜드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 브랜드 축산물 소비자 인지도 : ('04) 18% → ('05) 20.8 → ('06) 34.4

■ 고품질 브랜드 축산물로 더 높은 가격을 받고 있습니다.

- '06년 브랜드 한우(1등급이상)의 가격이 kg당 19,299원으로 일반 한우(1등급이상)와 비교하여 5%이상 더 높은 가격을 받고 있습니다.

■ 브랜드 인증 및 경진대회를 통해 소비자 신뢰를 높이고 있습니다.

- 소비자단체인 ‘소비자시민모임’에서 사육·도축·가공·유통·판매 단계까지 전 과정의 관리가 우수한 브랜드를 인증함으로써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고 시장교섭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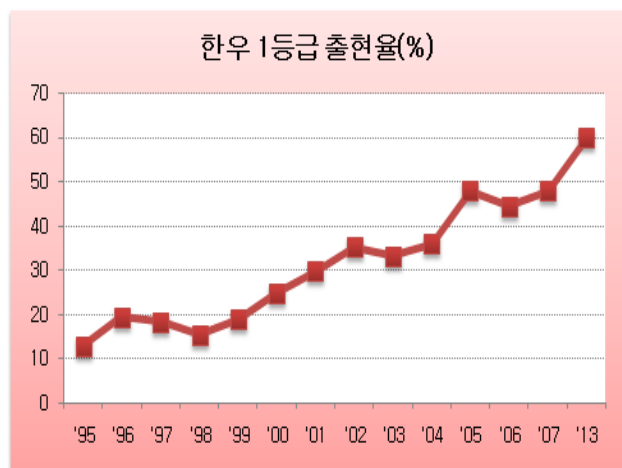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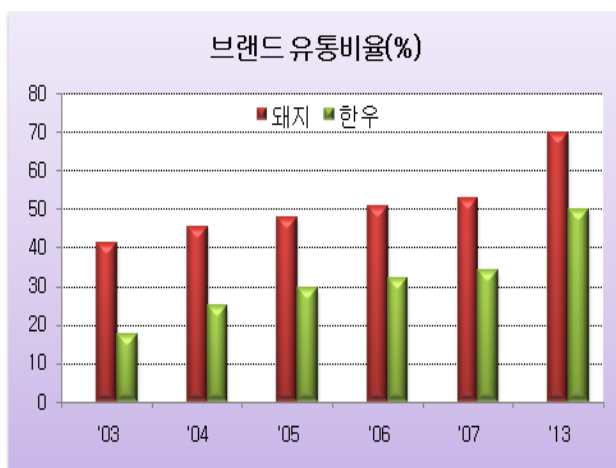
* 인증브랜드 : ('04) 18개(한우 8, 돼지 10) → ('05) 25개(한우 13, 돼지12) → ('06) 36개(한우15, 돼지14, 육우2, 육계5)

■ 규모화된 광역브랜드가 늘어나 경쟁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 '04년까지 전국에 1개소뿐인 광역브랜드가 '06년말 도별 1개소 이상, 총 15개소로 확대 되었습니다.
- '07년에는 광역브랜드 운영을 위한 브랜드 사업 신청 시 우선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가 강화됩니다.

※ 전남 동부권 7개 시·군 축협이 통합하여 구성한 연합사업단은 '03년 “순한한우” 광역브랜드를 출범하고('05년 “지리산 순한한우”로 변경) 420농가 25천두를 사육, 연간 4천여두를 단일 브랜드로 출하·판매

- '05.12월부터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을 도입, 롯데쇼핑(64개소)에 판매
- 광역브랜드 출하두수 : ('04) 1,083두 → ('05) 3,050 → ('06) 3,709



나. 체계적인 가축개량을 통해 생산성과 품질이 높아졌습니다.

◇ 유전능력이 뛰어난 종축을 통해 우수 정액을 생산, 농가에 공급하여 생산성 제고 및 품질 고급화 도모

- '05년부터 보증씨수소의 검정방식을 부계 혈통 중심에서 모계 혈통까지 확대하여 효과 배가

■ 가축개량으로 한우의 체중이 증가하고 육질이 고급화되는 등 한우사육농가의 생산성이 높아졌습니다.

- 한우 18개월령 수소 평균체중이 '02년에 522kg에서 '06년에는 567kg (8.6%)으로 크게 향상되고, 같은 기간중 육질 1등급 출현율은 35.2%에서 44.5%로 높아져 마리당 수취액이 높아졌습니다.
 - 인공수정에 의하여 생산된 송아지는 자연교배로 생산된 송아지 보다 10~20%이상 높은 가격에 거래
- '07년에는 체중을 580kg, 1등급 출현율을 48%로 높이고 '13년까지 비육기간을 6개월 더 늘려 체중 700kg과 1등급 출현율 60%가 달성됩니다.

■ 젖소의 산유량이 많이 늘어나서 낙농가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02년에 두당 평균산유량이 7,962kg이었으나 '06년에는 8,362kg로 늘어났고, '07년에는 8,400kg, '13년에는 8,650kg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다. 사료작물 생산 확대로 고품질 축산물을 생산하게 되었습니다.

◇ 조사료 생산 확충사업을 통해 양질의 국내산 조사료를 공급하여 고품질 축산물 생산기반 강화

- '06년부터 주 조사료 생산지역인 남부지방의 조사료를 주로 수입에 의존하는 중부지역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유통 지원

■ 더 많은 조사료 생산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 '02년에는 종자 및 볏짚처리용 가스·비닐 구입, 초지조성 비용을 지원 받았으나, '06년에는 총체보리 제조비, 기계·장비 구입비, 장거리 운송비를 추가 지원받고 있습니다.
- '07년에는 조사료를 이용한 사료가공시설 설치시 개소당 9억원씩 용자로 지원받게 됩니다.

■ 조사료 급여량 확대로 한우 1등급 출현율이 크게 증가하는 등 고품질 한우를 생산하게 되었습니다.

- 한우의 조사료 두당 급여량이 '02년 1.5톤에서 '06년 1.9톤으로 높아져 1등급 출현율이 상승하는 등 축산물 품질이 높아졌습니다.
- 조사료 두당 급여량이 '07년에는 2.0톤, '13년에는 2.5톤으로 늘어나고 1등급 출현율은 '07년에는 48%, '13년에는 60%로 높아져 한우 품질고급화가 더욱 촉진될 것입니다.

* 한우1등급 출현율 : ('02) 35.2% → ('04) 35.9 → ('06) 44.5 → ('07) 48 → ('13) 60

가. 가축공제로 재해·질병위험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 재해 및 질병 등으로부터 농가를 보호하기 위한 가축공제는 매년 확대되어 '06년 9개 축종에 대해 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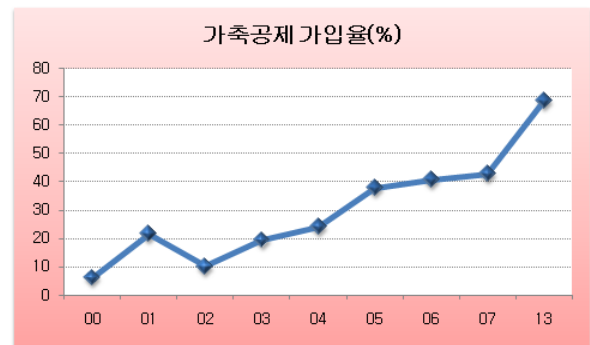
○ '07년부터 공제로 지원대상을 가축이외에 축사까지 포함

■ 가입 축종과 보장범위 확대로 더 많은 농가가 혜택을 받게 됩니다

○ '02년에는 가축공제에 가입 가능한 축종이 4개였으나, '06년 에는 9개 축종으로 늘어났습니다.

○ '07년에는 2개 축종이 추가되고, 가금류에 대한 보장범위가 설해

피해까지 확대되며, '13년까지 가입대상이 15개 축종으로 확대됩니다.



※ 강원 평창에서 77만원을 납부(공제로 154만원 중 77만원은 정부 부담)하고, 가축공제에 가입('06.3)한 A양돈농가는 '06.7월 집중호우로 돼지 350여두가 폐사하는 피해를 입었으나, 5,338만원의 공제금을 지급받아 경영위기 극복

■ 가축공제로 납부 부담이 줄어들었습니다.

○ 축산농가는 '02년에 가축공제료의 50%, 축사 공제료는 전액을 부담했으나, '07년부터 축사공제료의 경우 70%만 부담하게 됩니다.

○ 또한, '02년에는 가축공제료를 일시금으로 납부하였으나, '06.8월부터 공제료가 100만원 이상일 경우 2회 분납이 가능해졌습니다.

나. 축산자조금 확대로 농가의 자율적 대응능력이 향상되었습니다.

- ◇ 임의적으로 운용되오던 자조금이 '04년 양돈을 시작으로 '06년 한우·낙농까지 의무자조금으로 개편되고, 자조금 조성품목도 확대

■ 자조금 조성 품목이 3개에서 6개로 늘어났습니다.

- 축산자조금 품목이 '02년 양돈, 양계, 낙농 등 3개 품목에서 '06년 한우, 양돈, 낙농, 산란계, 육계, 양육 등 6개 품목으로 늘어났습니다.
- '07년 이후에는 오리, 양봉 등으로 자조금 조성 품목이 확대됩니다.

■ 의무자조금 제도로 인해 농가의 수급조절 능력이 확대되었습니다.

- 양돈('04), 한우('05), 낙농('06)의 의무자조금 도입으로 재원이 대폭 확대되어 '02년 38억원이던 축산자조금 조성액이 '06년 250억원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 확대된 재원으로 우리 축산물의 우수성을 적극 홍보하고 농업인 교육 및 정보제공 등을 통해 농가의 자구노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양돈자조금의 경우 '02년 3.6억원의 재원으로 사업을 시행하였으나, 의무자조금이 도입되어 '06년에는 104억원을 조성하여 소비홍보 (81억원), 교육 및 정보제공(10억원), 조사연구 (3억원) 실시

다. 우유공급 과잉 최소화로 낙농가 경영이 안정되고 있습니다.

◇ 우유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생산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수급 조절사업을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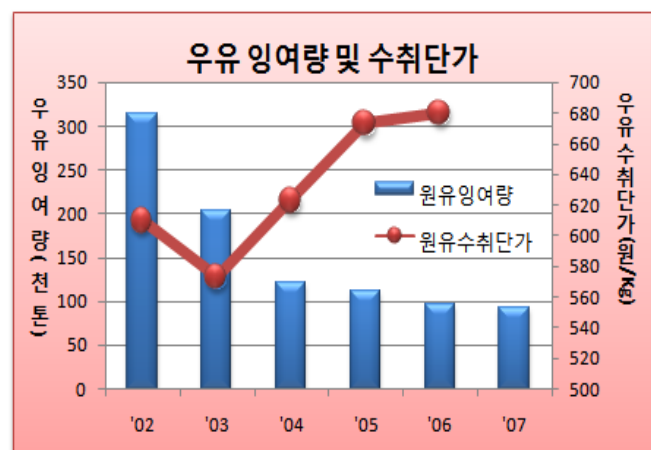
- 잉여우유 차등가격제와 우유생산 감축대책 시행으로 수급 안정도모('02 : 861톤/일 → '06 : 266)

■ 우유 생산조절시스템 구축으로 낙농가의 경영이 안정되었습니다.

- '03년부터 농가별로 생산쿼터를 할당함에 따라 '02년에 314천톤이었던 잉여량이 '06년에는 97천톤으로 감소되었습니다.
- 잉여 우유량이 '07년에 93천톤으로 줄어들고, '13년에는 74천톤으로 감소될 경우 우유수급 불안정 문제가 해소됩니다.

■ 우유수급 안정화로 더 높은 가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 잉여우유 감소와 우유 품질향상 등으로 농가 평균 우유 수취단가는 '02년 610원/kg에서 '06년 680원/kg으로 상승하였습니다.
- '07년 이후에도 우유 수급 불균형 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면 낙농가의 소득이 안정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라. 가축방역 강화로 고품질·안전 축산물을 생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효율적인 가축방역을 위해 '04년 6개 관련부처 합동으로 「가축방역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 가축질병 무료 예방접종을 '02년 13종에서 '07년 15종으로 확대

■ 해외 악성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 방지 노력 강화로 농가의 걱정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 '00년 이후 빈발하고 있는 구제역·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광우병 등 해외 악성가축전염병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해외 여행객에 대한 발판소독조 운영이 강화되었습니다.

* 공·항만 발판소독조 : ('02) 358개 → ('04) 395개 → ('06) 405개

○ 여행객이 소지한 축산물 등 불법휴대품 검색을 위한 검역탐지견이 '02년 2두에서 '06년 20두로 확대·운용되고 있습니다.

* 검역탐지견 : ('02) 2두 → ('04) 12두 → ('06) 20두

* 휴대품 적발건수 : ('02) 7,740건 → ('04) 19,963건 → ('06) 29,225건

■ '05년부터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에 따라 범정부 차원의 방역대책이 추진되어 농가가 더욱 안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가축질병도 국가 위기관리 대상에 포함되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주관으로 관련부처가 합동으로 신속한 방역을 실시하게 되어 피해를 신속히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대상질병 :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 관련부처 : 중앙 안전관리 위원회, 행자부, 외교부, 국방부, 보건복지부 등

■ 가축질병 예방접종 대상 가축이 확대되어 질병 발생이 감소하고 농가피해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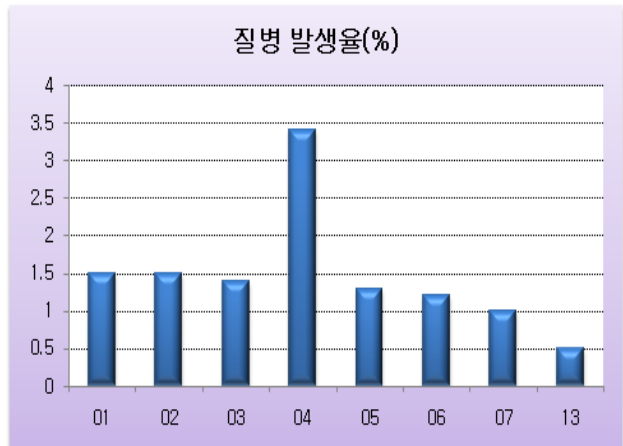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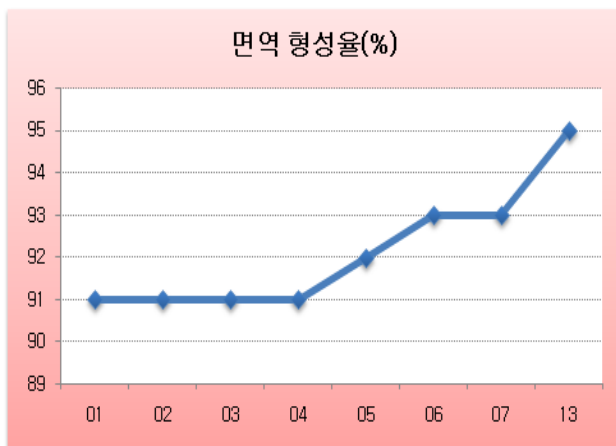
- 가축질병 무상 예방접종 대상이 '02년 13종에서 '07년에는 15종으로 '13년에는 17종으로 늘어나 농가의 부담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 예방접종 : 소(탄저 등 6종), 돼지(콜레라 등 5종), 닭(뉴캐슬 등 2종), 개(광견병 등 2종)

- 질병발생율은 '02년 1.5%에서 '06년 1.2%까지 낮아졌고, '07년 1.1%, '13년에는 0.5%까지 낮아져 축산농가의 피해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 '07년부터는 공익수의사가 배치되어 가축 질병관리가 용이해 집니다.

- 일선 보건소에 근무하는 공중보건과의와 같이 '07년부터 현장에서 가축방역업무를 수행할 “공익수의사”가 시·군에 배치됩니다.
- '07년에 150명으로 시작해서 '09년까지 시·군·구 등 지자체에 2명의 공익수의사(450명)가 근무하게 되면 보다 편리하게 가축 방역에 관하여 상담하거나 진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구 분	2002년	2006년	2007년
□□ 의료·복지			
○ 건강보험료 경감율	22%	50%	50%
-가구당 지원액	94천원	420천원	426천원
○ 연금보험료 지원 기준	최저등급(1등급) 보험료의 1/3	최대 13등급 보험료의 1/2	최대 14등급 보험료의 1/2
-1인당 지원액(최대)	62천원	259천원	572천원
○ 건강관리실(누계)	604개소	1,150개소	1,342개소
□□ 농촌생활환경			
○ 상수도 보급률(급수인구)	31%(1,860천명)	42%(2,191천명)	48%(2,505천명)
○ 하수도 보급률	24.5%	40%	44%
○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률	82%	99%	100%
○ 농촌주택개량자금 금리	5.5%	3~4%	3.4%
□□ 도농 교류			
○ 1사1촌 자매결연	-	14,498건	15,000건
-교류 금액	-	1,400억원	1,930억원
○ 농촌체험마을 개소수	31개	291개	409개
□□ 교육 여건			
○ 영유아 양육비 지원(1인당)	-	1,333천원	1,763천원
○ 고교생 학자금 지원	632천원	866천원	926천원
○ 대학생 학자금 융자(학기당)	150만원	271만원	287만원
○ 대학특별전형 모집대학/인원	181개/10,149명	192개/13,460명	193개/13,568명

가. 의료시설 이용에 대한 부담과 불편이 줄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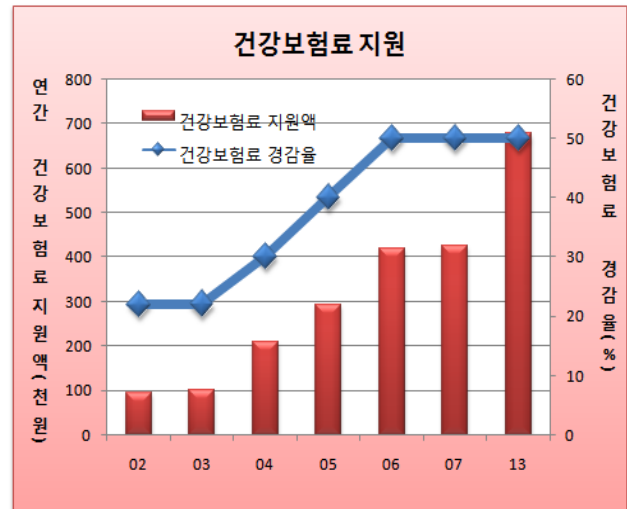
- ◇ 의료시설이 부족한 농어촌에 거주하는 농어업인의 부담 경감을 위해 농어업인이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의 50%를 국고에서 지원
 - 보험료 지원율이 '02년 22%에서 매년 늘어나 '06년 50%로 확대
- ◇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군 지역을 대상으로 군지역당 1개 의료기관을 선정하여 응급의료 인프라 구축을 지원

■ 농어업인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크게 줄었습니다.

- '02년에는 건강보험료의 78%를 부담하였으나, '06년부터 50%만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농가의 월평균보험료는 '04년 58,510원에서 '06년 69,910원으로 상승하였으나 동시에 보험료 경감률도 매년 높아져 실제 부담하는 보험료는 '04년 40,957원에서 '06년 34,955원으로 하락
 - * 농가 보험료 부담률 : ('02) 78% → ('04) 70% → ('05) 60% → ('06) 50%
- '07년 중에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08년부터 농업인의 소득 또는 재산 등에 따라 건강보험료 경감률이 최소 0%부터 최대 50%까지 차등화됩니다.

■ 농어업인이 더 많은 보험료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 농어업인 가구당 평균 보험료 수급액이 '02년 연간 94천원에서 '06년 420천원으로 늘어났습니다.
- '07년에는 426천원으로 늘어나고, '13년에는 677천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 농어촌 군 지역에 24시간 응급의료서비스 확대로 농촌에서 더욱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06년에는 농어촌지역 28개 응급의료기관이 인력과 장비를 지원 받았고 '07년에는 33개 기관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 '09년까지 농어촌지역 응급의료기관의 인력과 장비가 확충되어 지역응급의료체계가 확립됩니다.

■ 농어촌지역의 공공보건기관의 시설과 장비가 현대화되고 있습니다.

- '06년 보건소 14개소, 보건지소 100개소, 보건진료소 100개소에 시설·장비가 지원되었고, '07년 보건소 23개소, 보건지소 94개소, 보건진료소 133개소에 시설·장비가 지원됩니다.
- '13년 보건소 86개소, 보건지소 513개소, 보건진료소 1,151개소로 늘어납니다.

나. 농촌에서 건강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게 됩니다.

◇ 농어업인의 국민연금 보험료의 최대 50%까지 정부가 지원

- 보험료 지원 기준을 '02년 1등급에서 '06년 13등급으로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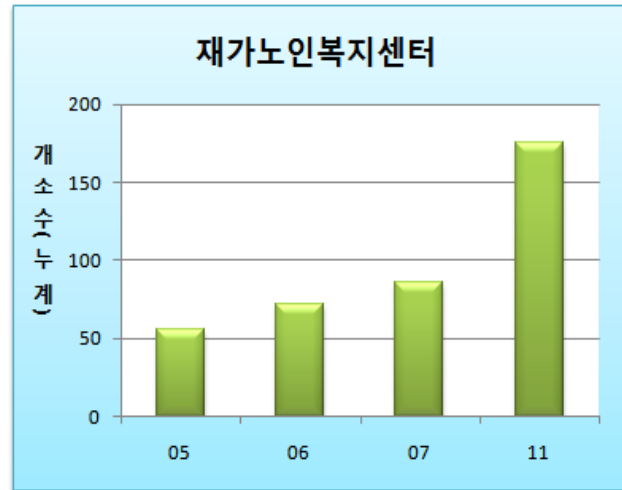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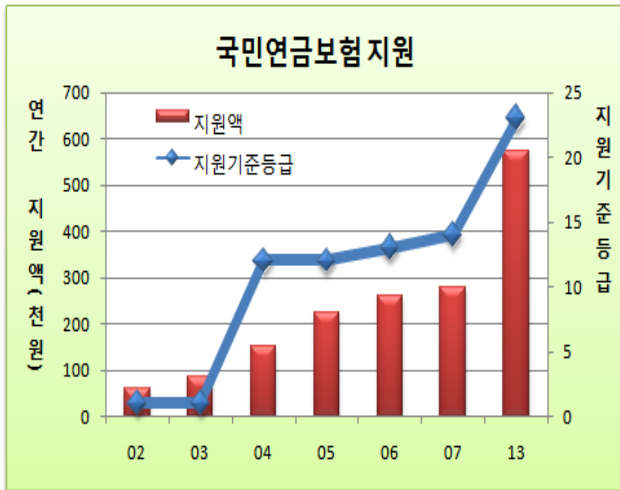
◇ '05년부터 농어촌지역 노인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해 재가노인 복지센터를 설치

■ 농어업인의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이 크게 줄었습니다.

- '02년에는 최저등급(1등급) 보험료의 1/3(연간 최대 62천원)을 지원받았으나, '06년에는 최대 13등급 보험료의 1/2(259천원)로 지원액이 늘어났습니다.
- '07년에는 최대 지원 등급이 확대되어 최대 14등급 보험료의 1/2(280천원)을 지원받게 되고, '13년에는 23등급(572천원)으로 상향 조정될 계획입니다.

■ 노인들이 가정에서 신체수발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복지시설 이용이 곤란한 농촌노인이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주간보호, 단기보호, 가정봉사원을 파견하는 재가노인 복지센터가 설치되고 있습니다.
- '05년에는 56개소의 재가노인복지센터가 설치되었고, '06년에는 추가로 16개소가 늘어났습니다.
- '07년 14개소, '08~'11년까지 89개소가 설치되어 '11년까지 농어촌 지역에 재가노인복지시설이 175개소로 늘어나게 됩니다.



■ 건강장수마을에서 다양한 장수 프로그램을 누릴 수 있습니다.

- 건강장수마을은 '05년 100개소를 시작으로 '06년 300개소로 늘어났고 '07년에는 350개소, '11년까지 800개소로 늘어나게 됩니다.
- 1병원-1마을 결연(36마을), 보건소 연계 건강검진(100개소) 등 지역 의료기관과의 건강관리 협조체계가 구축되고 소공예품 등 생활용품 개발과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됩니다.
- 마을 환경개선 등을 통해 장수여건을 만들고, 마을단위 자생적 노인보호 체계도 구축될 것입니다.

※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안골마을의 경우 주2회 생활건강체조, 게이트볼 육성, 시보건소와 협조한 연 2회 건강검진 등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노년층의 건강은 물론, 마을주민간의 화합 및 교류를 증진

다. 농촌현장에서 필요한 도우미를 때 맞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사고발생농가의 지속적인 영농활동과 고령가구의 안정적인 농촌 생활 영위를 위해 '06년부터 영농·가사도우미 지원**

○ '06년 82개 시군에서 시범실시 후 '07년 전국으로 확대

■ **농업인이 뜻밖의 사고를 당할 경우 영농도우미를 이용하여 농사를 계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농업인이 농작업·교통사고 등이 발생시 농촌평균 임금의 30%만 부담하면 영농을 대행할 도우미를 10일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06년 82개 시·군의 만65세 미만, 농지소유 3ha미만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07년에는 전국의 만69세 이하, 농지소유 5ha미만 농업인, '13년에는 전농가가 30일간, 질병 및 교육시에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 지원액/1인 : ('06)남자 399천원, 여자 266천원 → ('07)350천원(남녀 공통)

■ **고령 농가가 힘든 가사일을 도움받게 되었습니다.**

○ '06년 처음 82개 시·군의 65세이상 고령농가가 청소·빨래 등을 도와줄 도우미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07년에는 전 농어촌의 65세이상 고령가구가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라. 건강·체육시설이 늘어나 건강유지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 ◇ 농촌마을에 건강기구실, 샤워실, 찜질시설, 건강정보실 등을 설치하는 건강관리실 설치사업이 추진
- ◇ 농어촌 복합 체육시설, 운동장 체육시설, 마을단위 체육시설, 농구대 등 농어촌에 부족한 체육시설 설치 확대

■ 마을 사랑방 역할을 하는 건강관리실이 늘어나 농촌주민들이 더욱 활력있는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 농업 노동부담을 덜고 농촌주민간 화합과 활력있는 농촌마을 조성을 위한 건강관리실이 '02년 120개소, '06년 158개소가 설치되었고 '07년 192개소를 설치, 총 1,342개소로 늘어나게 됩니다.
- '08년부터 마을별로 건강생활습관 실천을 위한 개인별 건강력 측정과 맞춤형 건강운동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 다양한 체육시설 설치로 더욱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농촌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 '02년 마을단위체육시설 등 205개소, '06년에는 282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 '07년에는 농촌복합체육시설 등 262개소를 지원할 계획이며, '15년까지 2,000개소 이상의 농촌 지역 체육시설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가. 영유아 보육부담은 줄어듦고 보육시설은 늘었습니다.

◇ 저소득층에게 지원하는 정부보육료를 받지 못하는 농업인에게 '04년부터 영유아 양육비를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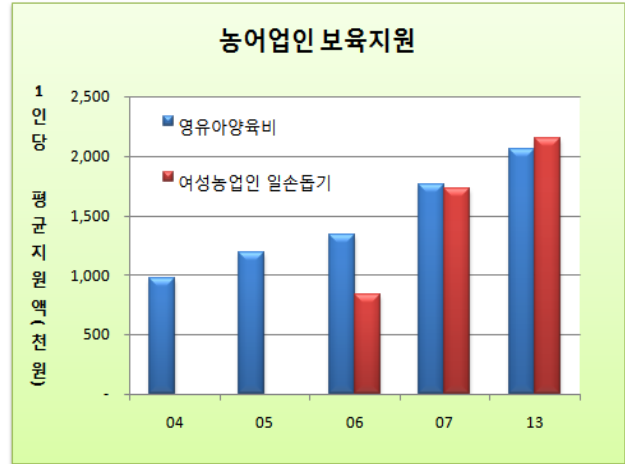
- '06년부터 보육여건상 영유아를 보육시설 등에 보내지 못하는 경우 '여성농업인 일손돕기'로 가정육아비용 일부 지원

■ 대부분의 농업인이 영유아 양육비를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 '04년부터 농어촌에 거주하는 1.5ha미만 농지소유 농업인이 만 5세이하 자녀를 보육시설에 보낼 경우 정부보육료의 50%(연평균 973천원)를 지원 받았습니다.
 - '06년에는 대상농가가 5ha미만 농지소유 농업인까지로 확대(연평균 1,333천원)되었습니다.
- '07년부터 정부보육료의 70%(연평균 1,763천원)를 지원받고, 준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과 취학 유예 만 6세아도 지원받게 됩니다.
 - * 만0세의 자녀의 경우 '06년 연간총액 210만원에서 '07년 252만7천원 지원
 - * 만3세의 자녀의 경우 '06년 연간총액 94만8천원에서 '07년 151만2천원 지원
- '13년에는 영유아를 양육하는 모든 농업인이 정부보육료 75%(연평균 2,053천원) 수준의 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자녀를 보육시설에 보내지 못하는 경우에도 가정육아비용의 일부를 지원 받게 되었습니다.

- '06년부터 농업인이 만5세이하 영유아를 보육시설에 보내지 못하는 경우 '여성농업인 일손돕기'를 통해 연평균 83만 6천원의 가정육아비용을 받게 되었습니다.



* 보육시설이 없는 읍·면지역 :
('05) 476개 읍·면

- '07년에는 연평균 172만6천원을 지원받게 되며, '13년에는 연평균 215만원의 가정육아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 농촌에 국공립 보육시설이 늘어나서 아이를 키우는데 어려움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 농촌 지역의 국공립 보육시설이 '02년 216개소에서 '06년 282개소로 늘어났습니다.
- '07년에는 농촌지역에 37개소의 국공립보육시설이 추가 설치되어 총 319개소로 늘어나게 되고, '13년에는 600여개소로 늘어나게 되어 보육여건이 더욱 개선됩니다.

* 국공립시설 설치계획 : ('02) 13개소 → ('04) 16 → ('07) 37 → ('09) 50

나. 도시민보다 농촌주민의 교육비 부담이 크게 낮아졌습니다.

◇ 경제적 여건이 불리하고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비 부담이 큰 농업인에게 학자금, 장학금, 급식비 지원을 확대

- 농어촌의 고교생 자녀에 대한 학자금 및 급식비 지원은 '02년 714억원에서 '06년 1,611억원으로 확대
- 농어촌 출신 대학생에게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을 무이자로 '02년에 233억원, '06년에는 677억원을 융자

■ 농업인의 고등학생 자녀의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 농업인이 자녀 1인당 지원받는 금액이 '02년 632천원에서 '06년 866천원으로 늘어났으며, '07년에는 926천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 대학생 자녀 학자금이 무이자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 학기당 학자금 융자액이 '02년에는 150만원에서, '06년에는 271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 '07년에는 학기당 287만원, '13년에는 381만원으로 늘어납니다.
- '02년에는 농촌출신 대학생 16천명이 학자금 융자 지원을 받았고, '06년에는 25천명이 받았습니다.
 - '07년에는 26천명, '13년에는 32천명으로 늘어납니다.

■ **농수산계열 대학 졸업후 영농(어)에 종사할 대학생은 학기당 120만원의 영농(어) 장학금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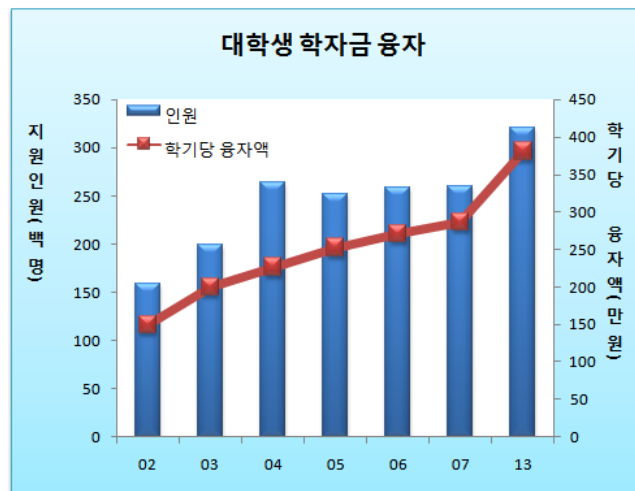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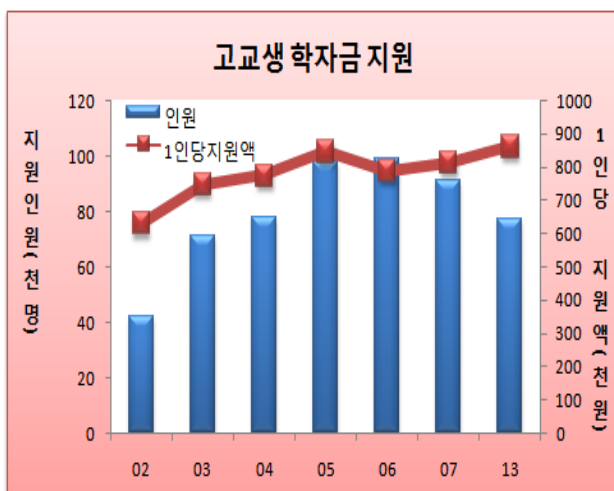
- '06년에 1,998명의 장학생이 19억원의 장학금을 받았으며, '07년에는 2,500명의 장학생이 30억원의 장학금을 받게 됩니다.

■ **농업인의 자녀 중 성적이 우수한 대학생은 학기당 100만원의 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06년에 3,708명의 성적우수 장학생이 37억원의 장학금을 받았으며, '07년부터 매년 4,000명이 40억원의 장학금을 받게 됩니다.

■ **학교급식 지원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 농산어촌 및 도서벽지 학교 학생의 급식비로 '02년 449억원을 지원받고 매년 지원규모가 확대되어 '06년 747억원, '07년 768억원, '11년도에는 1,063억원을 지원 받게 됩니다.



다. 농촌에서 대학에 진학할 기회가 훨씬 넓어졌습니다.

◇ '04년부터 전국 군지역에 1개 이상 우수고교를 육성하고 '06년부터 농어촌지역 학생의 대학특별전형 비율을 상향 조정

■ 농촌에서도 우수 고등학교에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군지역 1개교 이상의 우수고교를 선정하고 교육시설 현대화 등을 위한 재정지원과 교육과정 운영 및 학생선발 자율성 보장 등의 행정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04년 7개소를 시작으로 '06년까지 44개소, '07년도에는 전국의 88개 모든 군지역에 1개 이상의 우수 고교가 선정됩니다.
- 선정후 4년제 대학 진학률이 증가(선정전 : 69.4% → '06 : 73.2%)하고 학부모, 교사, 학생의 만족도가 높아졌습니다.

* 만족도 평균 : ('05) 53% → ('06) 59.7%(6.7% 상승)

■ 농어촌학생 대학특별전형 비율이 '02년 3%에서 '06년 4%로 늘어나 더 많은 대학진학 기회가 생겼습니다.

- '02년 181개 대학에서 10,149명을 모집인원으로 선발하던 것이 '06년에는 192개교 13,460명으로 증가되었습니다.
- '07년에는 193개교 13,568명으로 늘어납니다.



라. 농어촌 학교에서도 알찬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06년부터 농어촌 소규모 학교의 교원, 교육과정, 시설을 공동 운영하는 학교군 조성 추진

- '06년부터 다양한 교육기회 제공을 위해 방과 후 학교 운영을 지원

■ **소규모학교 운영 정상화로 농촌에서도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06년도 20개 학교군에 30억원 지원을 시작하여 '07년도에도 동일한 조건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성공적인 모델로 정착되고 있습니다.
- 학교군 구성·운영 결과 학부모들의 만족도도 83.8%로 높습니다.

■ **다양한 방과 후 프로그램으로 농어촌학생들도 도시학생 못지 않게 배우고 싶은 것을 마음껏 배울 수 있습니다.**

- '06년 19개 군에 정규교육 외에 초등보육, 특기·적성, 교과 프로그램, 평생학습 프로그램, 다문화가정 학부모 및 자녀를 위한 한글 교육·문화이해 교육 프로그램 등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 영어·중국어 등 원어민 외국어 프로그램, 수학·논술 등의 무학년 수준별 프로그램, 예·체능 특기적성 프로그램 등

- '07년에는 88개 시·군으로 확대하고, '09년에는 139개 시·군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 초등학생과 소규모 실업계고등학교의 기초·기본 실습 원격교육 콘텐츠 등이 보급되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06년에 초등 3학년용(국어, 사회, 수학, 과학) 200주제의 교재와 개발교재 적용방안이 보급되고 실업계고등학교의 계열별 기초·기본 실습 교재가 보급되어 현장 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
- '07년에는 초등학교 2학년용 교재 등이 개발·보급되고, 복식수업 교재가 개발되어 교육과정의 질이 개선됩니다..

■ 농어촌 학생들도 원어민 선생님과 수업으로 영어에 자신감이 생기고 있습니다.

- '06년부터 농어촌지역에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가 680명이 배치되어 학원에 가지 않아도 학교에서 영어를 제대로 배울수 있게 되었습니다.

* 원어민 영어교사 자격 :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영어 상용 사용 7개국의 국적 소유자로 학사 학위 이상 학력

- '07년에는 1,300명의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배치하고 '10년까지 소규모·농어촌 학교를 포함해서 모든 중학교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 ('07) 1,300명 → ('08) 1,850명
→ ('09) 2,400명 → ('10) 2,900명



가. 지역주민이 참여하여 쾌적하고 활력이 넘치는 농·산촌마을로
가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 농산촌 마을을 쾌적하고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하여 '04년
부터 농산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을 시행

○ 발전가능성이 있고 생활권이 같은 권역을 대상으로 생활환경정비,
경관개선, 소득기반확충, 지역혁신을 위한 S/W사업 등 종합지원

■ 마을주민이 살기 좋은 농산촌마을을 가꾸기 위해 계획수립부터
사업시행까지 전 과정에 스스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 '04년부터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 도입으로 주민이 참여하는
상향식 농촌지역개발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 지역주민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마을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사업
제안을 위한 예비계획서를 작성, 기본계획·세부설계시 의견을 제시,
사업시행 및 운영·관리 등 사업추진 전과정에 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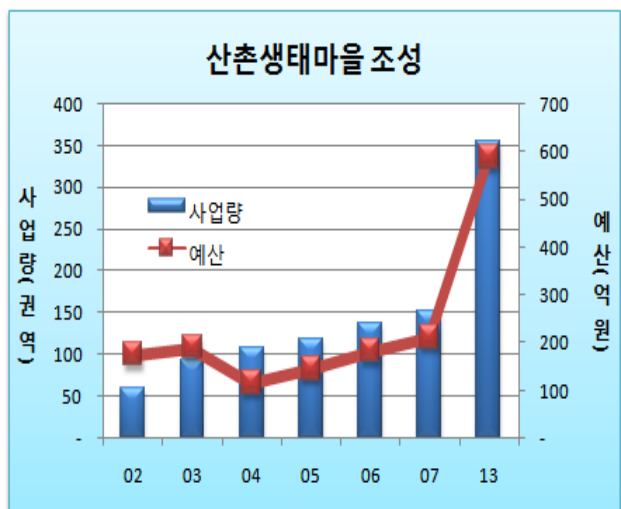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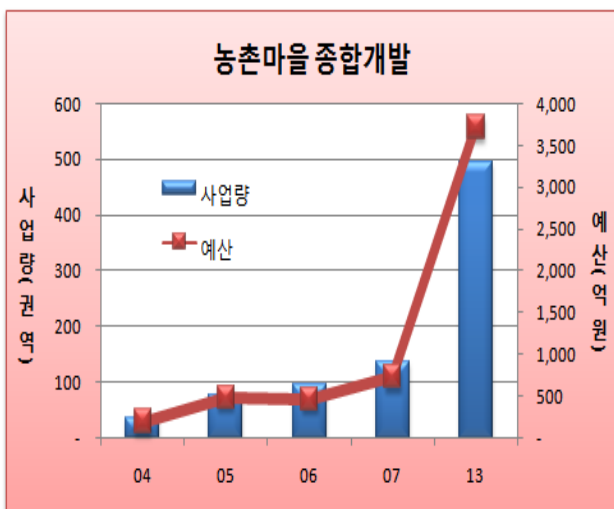
○ 주민들 스스로 지역 발전문제에 적극 참여하고, 마을간 대화가
활발해지는 등 주민참여의식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 농촌마을 종합개발과 산촌 생태마을 조성사업이 전국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농촌에서 더욱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게 됩니다.

-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04년도에 시작하여 현재 56개 권역이 추진 중입니다.
 - 40개 권역은 사업시행을 위해 시행계획이 수립중이며, 40개 권역은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있으며, '13년까지 496개 권역이 추진
- 산촌생태마을조성사업은 '06년까지 138개소를 조성하였고 '07년에는 33개소의 마을조성사업이 추진 중입니다.
 - 33개소는 사업추진을 위한 사전 설계가 추진되고 있으며, '13년까지 354개소가 조성

■ 규제완화로 산촌생태마을 조성이 더욱 용이해졌습니다.

- 산촌생태마을 조성시 농지전용 허가를 신고로 변경하고 체험시설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을 50% 감면, 임업용 산지에 조성할 수 있으며 산촌개발 사업시 국유림 대부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나. 생활여건이 개선되어 삶의 질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 ◇ 농촌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면당 3~5년간 25~30억원을 지원하여 농촌정주기반확충, 오지종합개발 등 추진
- ◇ 농촌지역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촌주택 개량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금리인하 및 대출한도 상향조정

■ 전국 1,146개 면지역에 마을안길, 상·하수도, 복지회관 등 기초생활환경 정비로 생활이 더욱 편리하게 되었습니다.

- '04년까지 농촌정주기반확충 1차('90~'04)사업으로 770개면, 오지종합개발 2차('90~'04)사업으로 399개면에 대한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 '05년부터는 정주기반 확충 2차('05~'14)사업(800개면) 및 오지종합개발 3차('05~'09)사업(361개면)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 '08년부터 오지개발사업과 농촌정주기반확충사업이 '농촌정주여건 개선사업'으로 통합되어 생활여건개선에 집중 투자되고, 소득 기반사업은 기존 사업들과 연계하여 체계화될 계획입니다.

■ 농촌주택 개량에 따른 비용부담이 줄어들었습니다.

- 대출한도가 확대되고 이자율이 5.5%에서 3.4%로 인하되어 연간 84만원(4,000만원 기준)의 이자부담이 경감되었습니다.
 - * 융자금리/한도 : ('02) 5.5%/20백만원 → ('05) 3~4/30~40 → ('07) 3.4/40
- '13년까지 금리 3%, 대출한도 80백만원까지 지원조건이 지속적으로 개선됩니다.

다. 읍·면소재지의 생활서비스 제공기능이 강화되어 농촌생활이 더욱 편리해 집니다.

◇ '03년부터 읍지역을 경제·사회·문화적 거점기능을 갖춘 중추 도시로 육성하는 소도읍 육성사업 추진

- '07년부터 거점면 소재지를 농촌지역 주민의 생활서비스를 충족할 수 있는 거점공간으로 육성

■ 읍소재지 개발로 농촌생활에 활력이 생기고 있습니다.

- 읍소재지를 지역경제의 활력과 도시기능의 확충, 주민생활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지원하여 자족적 생산능력을 갖춘 농어촌 지역의 중추 소도시로 육성됩니다.
- '03년 14개읍을 시작으로 '06년까지 66개 읍을 개발, '07년에는 72개, '12년까지 194개 모든 읍에 대한 개발이 추진됩니다.
 - * 주말시장 현대화(전남 장흥읍), 도심공원화사업(경북 봉화읍), 황토 테마랜드 조성(충북 보은읍), 역사문화거리 조성(충남 홍성읍) 등

■ 거점면 소재지 중심마을의 생활서비스 기능 강화로 농촌마을 생활이 편리해 집니다.

- 면소재지 중심마을의 생활편의·문화·복지시설 등이 종합적으로 정비·확충됩니다.
- '07년부터 4개면에 대해 시범사업이 추진되며, '13년까지 70개면이 농촌지역 생활서비스 거점공간으로 육성되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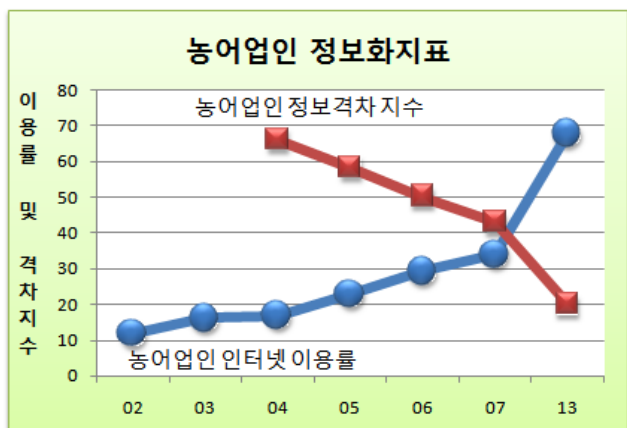
라. 도시 수준의 정보이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도농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농촌지역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

- 농촌지역의 마을단위로 가구별 PC 무료보급, 마을정보센터 신축, 마을 홈페이지 구축 등 정보화마을 조성을 추진

■ 농어촌에서도 초고속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02년까지 농어촌 지역의 82%인 308만 가구에 초고속 인터넷망이 구축, '06년까지 373만 가구(99%)가 초고속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07년까지 인터넷을 희망하는 모든 농어촌 지역에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이 완료됩니다.

* 농어민 인터넷 이용률 : ('02) 11.9% → ('04) 16.9 → ('06) 29.4 → ('07) 34 → ('13) 68

■ 정보화 교육을 통해 인터넷이용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 내 고향 IT봉사단과 정보화교육 강사지원단이 파견되어 '02년 115천명에서 '06년까지 349천명이 정보화 교육을 받았습니다.
- '07년 이후에도 매년 3만여명이 정보화교육을 받게 되며, '13년 농어업인의 인터넷이용률이 68%까지 높아지게 됩니다.

■ 도시와 같은 수준의 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 '02년까지 103개 마을이 정보화마을로 선정되었으나 '06년까지 306개 마을로 확대, '07년에는 32개 마을을 추가하는 등 '14년까지 787개 정보화마을이 조성됩니다.

마. 문화공간조성 및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통하여 농촌주민의 문화향수권이 신장되었습니다.

◇ 농촌주민의 문화향수권 신장을 위하여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 운영 및 소규모 생활친화적 문화공간 조성

- 지방문화원에서 다양한 문화프로그램 운영으로 문화향유기회 제공
- 폐교 등을 활용하여 소규모 생활친화형 문화공간 조성

■ 지방문화원에서 다양한 문화생활 체험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공예교실, 인형 극단 등 실버 문화 프로그램과 역사문화 탐방, 예술체험, 전통문화체험 등 체험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 지방문화원 : ('04) 876개 → ('05) 696 → ('06) 191 → ('07) 200

■ 농촌지역의 유휴공간이 주민친화형으로 문화공간으로 조성되어 주민의 문화향수권이 신장되었습니다.

- 농촌지역 폐교 등 유휴공간이 문화공간으로 조성되어 공연, 박물관, 창작 스튜디오 등 주민들이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향유하게 되었습니다.

* 생활친화적 문화공간 조성 : ('04) 28개 → ('05) 39 → ('06) 51 → ('07) 66

가. 1사1촌 자매결연으로 찾아오는 도시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 기업(단체)과 농촌마을이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자매결연을 맺고 지속적인 교류를 도모하기 위해 '04년부터 1사1촌 운동 추진

○ 1사1촌 자매결연은 '04년 2,404건에서 '06년 14,498건으로 확대

■ 재계, 사회·종교단체, 학교 등의 1사1촌 운동 적극 참여로
도농교류가 확산되어 농촌에 활력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 '04년에는 자매결연을 체결한 기업·단체의 마을방문실적이 평균 1회 미만이었으나, '06년에는 3~4회로 확대되었습니다.

- 기업(단체)가 자매결연을 체결한 마을을 방문하여 마을발전을 위한 컨설팅, 애로사항해소 등을 추진하는 사례가 증가

■ 농산물직거래, 농촌체험관광 확대로 소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 '04년 36억원에 불과했던 교류금액이 '06년에는 1,400억 원으로 39배나 증가하였습니다.

※ ○○○연구소는 강원 정선군 ○○마을과 자매결연 후 ○○마을의 주력 작목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 생산작목 대체(고랭지배추 → 메론, 피망) 및 신기술 지원을 통해 매출액을 3.9~5.4배 증가

※ ○○○회사는 전북 김제시 ○○마을과 '04.9.13 자매결연을 시작으로 '06년까지 214개 마을과 자매결연을 맺고 건강봉사대 운영, 농촌환경 보호, 일손돕기 등 6억 2천여 만원을 농촌에 지원

나.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및 생태·녹색관광 거점개발로 농촌의 활력이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 ◇ 농외소득증대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농촌 체험관광사업이 '02년 31개 마을에서 '06년 291개 마을로 확대
- ◇ 농촌의 주요관광자원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생태·녹색관광거점육성, 문화관광축제 활성화 추진

■ 농촌체험마을을 방문하는 도시민이 늘어나서 농가 소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 '06년 기준으로 농촌체험마을은 체험관광을 통해서 평균적으로 약 1억원의 농외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 체험마을(전체) 매출액 : ('02) 28억원 → ('04) 124 → ('06) 252 → ('07) 302

* 체험마을(전체) 방문자수 : ('02) 170천명 → ('04) 1,061 → ('06) 1,882 → ('07) 2,214

■ 마을주민 공동으로 농촌체험관광사업을 추진할 경우 체험시설 설치비용, 교육훈련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농촌체험관광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마을당 2억원의 체험시설 설치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13년까지 834개의 농촌체험마을 조성을 지원합니다.

* 농촌체험마을지원(누계) : ('02) 31개소 → ('04) 125 → ('06) 291 → ('07) 409 → ('13) 834

- '05년부터 농촌체험관광사업 등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마을경영, 마케팅, 회계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교육훈련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교육훈련과정 및 인원 : ('05) 14개, 1,707명 → ('06) 21, 2,258 → ('07) 21, 2,300

■ 농촌체험마을 보험가입지원으로 관광사업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농가의 부담이 줄었습니다.

○ 도시민이 체험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농촌체험마을의 보험가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체험마을에서 납입하는 보험료의 50%를 정부에서 지원합니다.

* 보험가입마을 : ('05) 20개소 → ('06) 65 → ('07) 65

■ 마을사무장지원 확대로 체험마을의 사업 운영이 쉬워졌습니다.

○ 마을에서 농촌체험관광사업의 운영, 프로그램 개발 등을 전담하는 마을사무장을 채용할 경우, 인건비(월 100만원)를 지원합니다.

* 사무장 인건비 지원조건 : 국비 50%, 지방비 40%, 마을부담 10%

* 마을사무장 채용지원 마을 : ('06) 100개 → ('07) 150 → ('13) 350

○ 마을사무장 채용이 농촌체험마을의 방문객과 매출액 증가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 전년 동기 대비 마을방문객수 35.7%, 농촌관광매출액 17.2% 증가('06.6)

■ 「도농교류촉진법」 제정으로 도농교류가 더욱 활성화됩니다.

○ 체험·휴양마을의 음식제공, 공동숙박 등 특례마련과 도시민 현장 체험, 학생들의 농촌체험교육 근거, 농촌체험지도사 등 도농교류 전문인력 양성 근거 등이 마련됩니다.

■ 숲, 습지, 갯벌, 동굴 등 생태·녹색관광자원이 관광명소화 되고 자연휴양림 방문객이 증가하여 농촌 경제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 생태·녹색관광자원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공공기반시설(진입로, 관광시설 등) 설치를 위해서 필요한 비용이 지원됩니다.

* 지원규모 : ('02) 11개 사업/43억원 → ('06) 26/132 → ('07) 26/133

- 자연휴양림이 '02년 90개에서 '06년 107개로 늘어났으며, 방문객은 '02년 4,076천명에서 '06년 5810천명으로 늘어났습니다.

* 자연휴양림 개소/방문객 : ('02) 90개/4,076천명 → ('06) 107/5,8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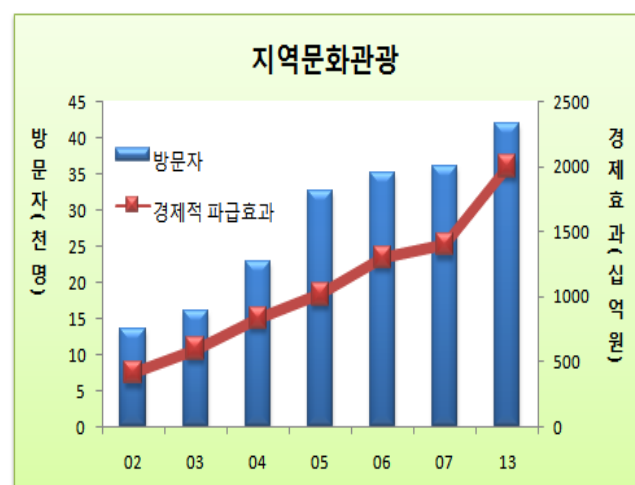
■ 문화관광축제를 보러 오는 방문객이 증가하여 농촌 지역경제가 더욱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 지역 축제 중 상품성 높은 축제가 선정되어 집중 육성되고 있습니다.

* 문화관광축제 육성현황 : ('02) 29개 → ('06) 52 → ('07) 52

- 방문객이 증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 방문객/파급효과 : ('02) 13.5백만명/4,132억원 → ('06) 35.2백만명/13,000억원
→ ('07P) 36백만명/14,000억원



다. 도시민의 농촌 정착으로 농촌에 활력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 도시민 농촌유입을 위해 '04년부터 도시민 농촌정주공간조성을 지원하는 전원마을조성사업 등 추진

- '05년 「농어촌 복합생활공간조성방안」을 마련, 도시민의 농촌 이주·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세부정책수단 및 추진체계 구축
- '06년 「전원마을페스티벌」을 개최, 농촌이주 도시민이 기존주민과 공동체를 형성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실현 모델 발굴·지원

■ 농촌전원생활을 희망하는 도시민이 기존농촌주민과 협력하면서 살아가는 농촌 정주공간이 조성됩니다.

- '04~'06년 기간 중 전원마을 55개소가 조성되었고, '07년에는 15개소를 추가 조성, '13년까지 전원마을 300개소가 조성됩니다.
 - 전원마을 조성과정에서 인근에 있는 기존농촌마을의 상하수도 등 기초생활여건도 함께 개선
 - * 조성되는 전원마을 규모에 따라 10~30억원 지원(국고 80% 지방비 20%)
- 전원마을에 입주하는 도시민이 인근 농촌주민과 공동체를 형성하여 보람되게 살 수 있도록 전원마을운영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 전원마을내 편의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하고, 전원마을과 기존 마을간 다양한 교류프로그램을 운영
- 전원마을조성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예정입니다.
 - 시·군, 한국농촌공사 등 공공기관의 역할을 강화
 - * 중대규모(50호 이상) 전원마을은 시·군, 한국농촌공사가 사업시행

■ 도시민이 농촌에 이주·정착하기 위해서 필요한 각종 정보를 손쉽게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농어촌종합정보포탈(www.nongchon.or.kr)을 통해 전원생활, 농지, 농촌주택 등 다양한 농촌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 '06.12월말 기준, 포탈회원 104천명, 일일평균 3천명이상 방문

- 전화상담(1577-1417), 전원생활교육에도 참여

- '09년까지 농어촌종합정보포탈에서 농촌의 교육·복지·문화·인프라 등 각종생활정보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전원생활, 주택건축 등 분야별로 전문적인 전화상담, 현장안내 등이 가능하도록 오프라인 서비스도 지속적으로 개선합니다.

■ 농촌에 이주한 도시민이 성공적으로 정착하여 농촌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게 됩니다.

- 시·군에서 도시민 유치홍보, 정착지원 및 이주한 도시민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 프로그램은 지자체가 중심되어 마을, 지역사회단체(NGO) 등을 적극적으로 참여시켜 운영하도록 할 계획

- '07년부터 '09년까지 10개 시·군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지원 대상 시·군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가. 지역 대표 특화품목으로 소득을 늘려나갑니다.

◇ 농촌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의 지역특화품목 육성을 지원

- '05년부터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전환
- '07년부터는 무형의 기술·문화 등을 포함하여 1·2·3차 산업이 융합된 지역 향토산업 육성 지원

■ 시·군별로 4~5개의 경제성있는 특화품목이 육성되어 지역브랜드 이미지가 높아지고 소득원도 확충되고 있습니다.

- '06년말 현재 157개 시·군에서 686개의 지역특화품목을 지정하여 육성하고 있습니다.
- 지역특화 품목당 사업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 단위사업(품목)당 지원규모 : ('05) 90백만원 → ('06) 126 → ('07) 178

■ 향토자원으로 지역을 대표하는 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제품 개발부터 사업화까지 3년간 최대 10억원이 지원됩니다.

- '07년에 19개 향토자원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추진 후 '08년부터 매년 30개 향토자원을 대상으로 본 사업이 추진됩니다.

나. 기업체 유치를 통해 농촌에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 농촌소득원 다양화를 위해 농공단지 조성을 추진

- '04년 농공단지 입주업체의 경영안정을 통한 농공단지 운영 활성화를 위해 입주업체에 대한 자금지원 등 인센티브 확대

■ 농촌지역의 취업기회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 농촌에 공장이 들어올 수 있도록 부지조성,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및 기업체 유치·운영이 지원됩니다.

* 농림부(부지조성), 산업자원부(공장유치 및 운영지원), 건설교통부(단지지정), 환경부(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등)가 공동으로 추진

■ '06까지 322개소의 농공단지가 만들어졌으며, '13년까지 400개의 농공단지가 조성되어 더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 농공단지 일자리는 '02년보다 8천개가 늘어났습니다.

- 연간 28조 7,299억원 생산, 61억불 수출성과 달성

* 농공단지 취업인원 : ('02) 109천명 → ('04) 112 → ('05) 115 → ('06) 117

- 농공단지 입주업체에 시설·운전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특화산업단지 지정기준인 지역특화업종비율이 75%에서 50%로 완화되었습니다.

* 운전자금 : ('02) 10억원 → ('04) 10억원 → ('06) 25억원

* 농공단지 추계 : ('02) 295개소 → ('06) 322 → ('07) 328 → ('13) 400

구 분	2002년	2006년	2007년
□□ 농식품 안전성			
○ GAP 인증농가	—	3,659농가	10,000농가
○ 이력추적제도			
- 이력추적 등록농가	—	8,808농가	10,000농가
- 쇠고기 이력추적 등록소(비중)	—	21만두(9%)	65만두(28%)
○ HACCP 적용작업장	107개소	572개소	600개소
○ 안전성 조사대상 농산물	56천건	66천건	68천건
○ 원산지 표시제			
- 표시 대상품목	442개	531개	531개
- 표시 이행율	95.9%	97.1%	97.2%
- 원산지 명예감시원	2,600명	25,353명	25,000명
- 위반건수	6,427건	3,634건	
□□ 품질인증 등			
○ 가공식품 KS인증 공장	80개소	116개소	118개소
○ 전통식품 품질인증 공장	175개소	269개소	301개소
○ 생산자 단체의 농산물판매장	57개소	150개소	175개소
○ 농산물종합유통센터	9개소	14개소	15개소

가. 까다로운 주부들이 GAP 농산물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 생산단계부터 수확 후 포장단계까지 농약, 중금속, 미생물 등 위해요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우수농산물관리(GAP)제도 도입

○ '03년부터 시범추진(9농가)하여 '06년부터 본격추진(3,659농가)

■ '03년부터 GAP 도입으로 재배과정은 물론 수확 후 포장단계까지 더욱 안전한 농산물을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GAP은 농장에서 식탁까지 일관된 농식품 안전관리 체계로 FAO, Codex 등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선진제도입니다.

○ GAP 인증은 이마트·롯데마트 등 민간인증기관 주도로 운영되어 인증활성화를 통한 우수한 농산물 공급 확대가 기대됩니다.

* GAP인증기관 : ('06) 21개 기관 → ('07) 25 → ('13) 50

■ GAP 인증 농산물이 다양화되고 늘어나 우리 농산물을 더욱 안심하고 살 수 있습니다.

○ '03년 9농가를 시작으로 '06년에 3,659농가가 GAP인증을 받았고, '07년 1만 농가, '13년에는 10만 농가가 인증을 받게 됩니다.

* GAP인증농가 : ('04)357농가 → ('06)3,659 → ('07)10,000 → ('13)100,000

○ GAP인증 대상품목이 '05년 89품목에서 '06년에는 96품목, '07년에는 100개 품목으로 확대되어 소비자들이 구입할 수 있는 GAP 인증농산물이 다양해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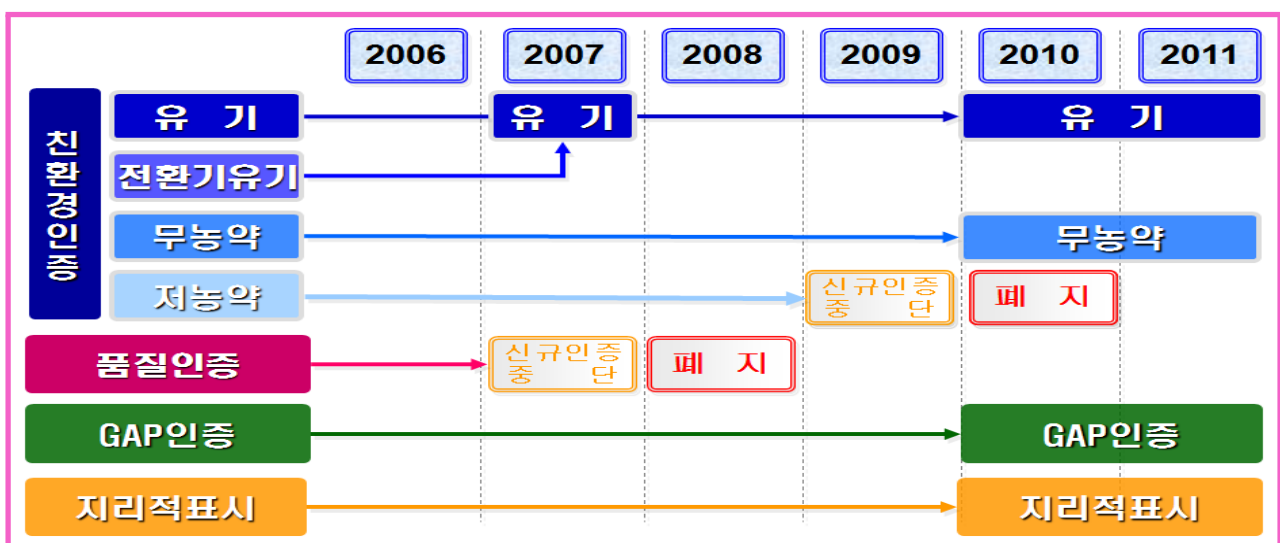
■ 수확 후 관리시설의 위생기준 강화로 더욱 안전한 먹거리를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05년부터 GAP위생 시설을 보완하고 있으며 '07년부터 신축되는 농산물 산지유통 센터는 위생관리기준에 적합하도록 건축됩니다.

* GAP위생시설 : ('06) 183개소 → ('07) 200 → ('13) 500

■ 농산물 인증제도가 알기 쉽게 간소화되어 소비자가 인증농산물을 더욱 쉽게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 농산물 인증제도가 '10년까지 국제기준에 부합되도록 연차별로 통합·폐지되어 인증농산물의 선택이 쉬워집니다.
 - '07년에는 '전환기유기인증'이 '유기인증'에 통합되고, '08년에는 '품질인증', '10년에는 '저농약인증'이 폐지됩니다.
 - '10년 이후에는 'GAP인증', '무농약인증', '유기인증'만 남게되어 소비자들이 쉽게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나. 구매하는 농산물의 이력을 알 수 있습니다.

- ◇ 농산물 안전성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농산물을 추적하여 원인규명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이력추적제도를 '06년 도입
- ◇ 유통경로의 투명성과 거래 공정성을 높이고 둔갑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04년부터 쇠고기 이력추적제 도입

■ 농산물에 안전성 문제 발생시 원인을 알 수 있게 됩니다.

- '03년 이력추적관리제도를 시범사업으로 도입하고, '06년부터 본격 시행하여 등록농산물에 대한 이력정보가 관리되고 있습니다
 - 이력추적 등록 농산물이 '06년 전체 농산물의 0.3%에서 '07년 1%, '13년 10%까지 확대됩니다.
- 안전성 등에 문제가 있을 경우 해당 농산물에 대해 용도전환 · 폐기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이력추적관리 대상품목 : 96품목(식량작물 12, 약용 29, 채소 28, 과수 14, 버섯 9)

■ 농산물 이력추적관리 정보시스템이 구축되어 인터넷을 통해 소비자가 생산부터 판매에 이르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농산물 이력추적 정보시스템(www.agros.go.kr)에 등록된 농가는 '06년에는 8,808호로 증가하였습니다. 2013년에는 10만 농가가 등록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 등록농가 : ('03) 9농가 → ('05) 965 → ('06) 8,808 → ('07) 10,000 → ('13) 100,000

■ 쇠고기 이력추적제 등록이 늘어나 소비자가 더욱 안심하고 쇠고기를 먹을 수 있게 됩니다.

- 쇠고기 이력추적제도에 등록한 소가 '04년말 4만두(2%)에서 '06년말 21만두(9%)로 증가하였습니다
- '07년에는 등록소가 65만두(28%)로 대폭 확대되고, '08년부터 모든 한우와 육우에 대한 이력추적이 가능하게 됩니다.

■ 돼지 등으로 이력추적이 확대되어 소비자의 편의가 더욱 증대됩니다.

- '08년부터 돼지고기에 대해서도 시범적으로 이력추적제가 도입되어 육류에 대한 이력추적제도가 한층 확대됩니다.



다. 위해요소 중점관리 제도(HACCP) 강화로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생산하게 되었습니다.

◇ **위해요소를 사전 차단하여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위해요소 중점관리 제도를 단계적으로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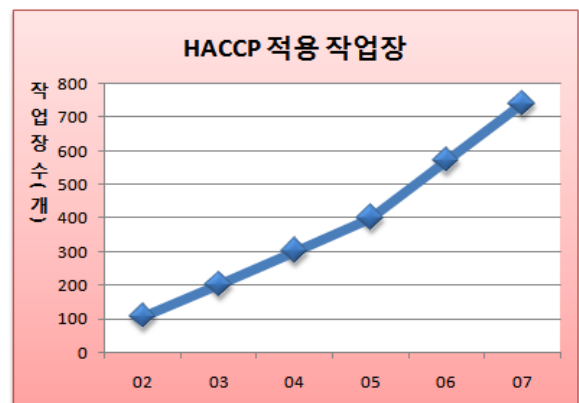
- '03.7월부터 모든 도축장에 의무적용, '07년부터 농장에서 판매까지 전 단계로 확대

■ **농장부터 판매단계까지 HACCP 적용범위가 확대되어 소비자가 축산물을 더욱 안전하게 먹을 수 있게 됩니다.**

- '02년에는 일부 도축장 및 가공장에 대해서만 적용되었으나 '03.7월부터 모든 도축장에 HACCP 제도가 의무적용 되었고, '04년 보관·운반·집유·판매 등 유통단계에도 도입하였습니다.
- '06년 돼지, '07년 소, '08년 닭의 모든 사육 단계로 적용이 확대됩니다.

■ **HACCP 적용 작업장 증가로 더욱 안전한 축산물을 먹게 됩니다.**

- HACCP 적용 작업장이 '02년 107개소에서 '06년 572개소로 확대되었습니다.
- '07년에는 600여개, '13년까지 2,500여개로 적용 작업장이 확대되어 축산물의 안전성이 더욱 강화됩니다.



라. 안전하지 않은 농산물의 시중유통이 방지되어 소비자가 더욱 안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공급을 위하여 출하 전에 안전성조사를 실시하여 기준 초과 농산물의 시중 유통을 사전에 차단

- 잔류허용기준에 적합한 농산물의 비중이 '01년 96.9%에서 '06년 97.7%로 개선

■ 국내산 농산물의 안전성 조사가 농약에서 중금속으로 확대되어 소비자들이 더욱 안심할 수 있게 됩니다.

- 안전성 조사 농산물이 '02년 56천건에서 '06년 66천건으로 늘어났고, '07년에는 6만8천건으로 늘어나며, '13년까지 9만건으로 확대됩니다.
- 안전성이 우려되는 품목위주로 조사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 깻잎, 상추 등 안전성이 우려되는 30개 품목을 중점관리대상 품목으로 선정하고, 수출농산물·인삼 등도 조사를 확대해 나갑니다.
- 조사성분도 농약위주에서 중금속으로 확대되고, 중금속을 '07년부터 '09년까지 매년 1만건씩 조사해 나가겠습니다.

■ 안전성 조사 인프라가 확충되고 교육도 강화됩니다.

- 안전성조사를 위한 시·군 단위 정밀분석실을 '10년까지 38개소로 확대해 나가고, 안전성 교육도 새기술 실용화 교육(1~2월) 등을 활용하여 매년 30만명 이상 실시됩니다.

마. 농산물 원산지확인이 더욱 편리해졌습니다.

◇ 수입 농산물의 원산지 둔갑판매로 인한 유통질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농산물 원산지 표시제 추진

- '06년에 표시대상 품목을 531개, 표시이행율을 97.1%로 확대

■ 농산물 원산지표시가 가공·포장단계에서 최종 소비단계인 음식점 단계로 확대되어 소비자의 원산지 확인범위가 더 넓어졌습니다.

- 원산지 표시의무화 품목이 '02년 442개 품목에서 '06년에는 531개 품목으로 확대되었으며, '13년까지 580개 품목으로 계속 확대됩니다.
- 음식점에서도 원산지를 표시토록 하여 쇠고기는 '07년부터, 쌀은 '08년부터 시행됩니다.

■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인한 피해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 '02년 2,600명이었던 명예감시원이 '06년 25,000여명으로 늘어나 사회적 감시기능이 강화되었습니다.
- 원산지표시 이행율은 '02년 95.9%에서 '06년 97.1%로 상승하였으며, '13년에는 98%까지 제고됩니다.
- 위반건수도 '02년 6,427건에서 '06년 3,634건으로 줄어드는 등 원산지위반으로 인한 소비자와 농업인의 피해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바. 포장 유통 확대로 더욱 위생적인 식품을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 그동안 수확 후 관행적으로 포장되지 않은 산물형태로 유통되던 배추·무에 대해서도 '07년부터 포장유통으로 전환
- ◇ 유통 중에 수입산의 국내산 둔갑 및 미생물 오염방지를 위해 '07년부터 닭·오리고기 포장유통을 의무화

■ 배추·무가 산지에서 깨끗이 다듬어져 표준규격으로 포장판매되어 소비자가 더욱 편리해졌습니다.

- 배추·무가 비포장 산물로 도매시장에 반입되어 중도매인이 다듬고 선별하여 판매하였으나, '06.9월부터 수도권 도매시장 8개소에서 배추 포장유통이 시범 실시되었습니다.
- '07년 1월부터 전국 32개 공영도매시장(전체 유통물량의 70% 수준)에 의무적으로 시행되어 소비자는 깨끗하고 품질 좋은 배추·무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 공영도매시장에서 배추·무 포장유통이 정착되면 앞으로 재래시장 및 유사 도매시장까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닭·오리고기 포장 유통 시행으로 수입산과 국내산이 구별 표시되어 둔갑판매를 사전에 막을 수 있고, 깨끗하고 안전한 고기를 구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07년부터 1일 8만수 이상 도축작업장의 닭, 오리 도축장에 대한 포장유통이 의무화되고, '08년부터 단계적으로 닭·오리 도축장, 가공장, 식육포장처리장, 판매업 등으로 점차 확대됩니다.

가. 식품·외식산업의 성장으로 다양한 먹거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고품질 먹거리 제공을 위해 식품의 품질인증, 전통식품 개발 등을 추진

- KS·전통식품·유기가공식품 등의 품질인증 도입·확대 시행
- '06년 전통식품 조리법 표준화사업을 추진하고, '07년부터는 전통식품의 우수성 홍보 등의 세계화 본격추진

■ 품질인증 확대로 식품을 믿고 구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KS인증, 품질인증 등을 획득한 식품이 '03년 이후 급격하게 늘어나 고품질의 식품을 보다 많이 접할 수 있습니다.
- * 가공식품 KS인증/가공식품 품질인증 : ('02) 80개/175개 → ('06) 116/269
- '07년에는 유기가공식품 인증제가 도입되어 유기 농산물을 원료로 만든 유기식품을 믿고 찾을 수 있게 됩니다.

■ 우리의 고유한 전통식품을 보다 많이 접할 수 있습니다.

- '06년부터 까다로운 전통식품 조리법이 표준화되고 전통식품 명인 확대 등 전통식품이 대중화되어 이용 기회가 늘어났습니다.
- * 전통식품 명인지정(24명), 전통식품 조리법 표준화('06 : 100종 → '08 : 300)
- '07년부터 전통식품·향토식품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우리 음식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등 우리 음식이 세계시장으로 뻗어나갑니다.

나. 고품질 농산물을 값싸고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생산자단체를 중심으로 농산물종합유통센터, 농산물직판장 등 규모화된 소비지 농산물 유통망을 확충

* 농산물종합유통센터 : ('02) 9개소 → ('06) 13 → ('07) 15 → ('13) 40

* 농산물판매장 : ('02) 57개소 → ('06) 150 → ('07) 175 → ('13) 410

■ 소비지의 농산물종합유통센터, 직판장 등을 통해 소비자가 고품질 농산물을 값싸고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농산물종합유통센터는 산지와 직거래를 통해 고품질 농산물을 싸값으로 신속하게 공급하여 소비자의 후생이 증가하였습니다.

* 종합유통센터를 통해 농산물을 구입하는 경우 일반유통경로보다 농산물 소비자 구매가격이 8.8% 낮음('05 농산물유통실태조사)

■ 산지와 연계한 소비지의 농산물판매장이 크게 늘어나 소비자가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 '15년까지 산지와 연계한 생산자단체의 소비지 중·대형 농산물 판매장이 550개소로 늘어나게 되어 소비자는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 소요예산 : 총 6.5조원(대형마트 3.7조, 중·대형농산물판매장 2.8)

○ 생산자 단체가 통합 구매하여 도매하는 품목을 계속 확대시켜 소비자가 신선하고 안전한 우리 농산물을 살 수 있게 됩니다.

* 통합구매품목 : ('06) 19개 품목 → ('07) 24개 품목 → ('10) 전품목

* 통합구매물량 : ('06) 2,702억원 → ('07) 4,670억원 → ('13) 14,470억원

2007년 업무추진 계획

Ⅲ

1. 2007년 농정여건 전망

2. 2007년 농정추진체계 및 중점 추진과제

■ FTA, DDA 등 포괄적이고 강도 높은 개방협상이 추진될 전망입니다.

○ FTA 협상은 '06년 개시된 미국을 비롯, EU 등 거대경제권과의 협상 논의가 본격화될 예정

○ 주요 쟁점에 대한 이해대립으로 중단('06.7)되었던 DDA 협상은 다보스 포럼('07.1)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추진이 예상

⇒ 소득비중이 높은 민감품목을 중심으로 충분한 보완대책 요구 가중

■ 국내적으로는 AI 등 가축질병 발생, 식품안전 사고 등에 따라 농식품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눈높이는 더 높아질 것입니다.

⇒ 생산에서 유통에 이르기까지 국내산 농산물의 안전성 관리와 함께 수입 농식품에 대한 원산지 단속 및 철저한 검역이 요구

■ 농가 고령화 및 소득양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 농가 고령화에 따른 농가구조변화 및 농가유형별 성장가능성 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수단 강구 필요

■ 농촌 고령화 및 인구감소 추세는 지속되는 반면 도시민의 농촌 휴양자원에 대한 수요는 더욱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 농촌을 생산·정주·휴양을 연계한 복합생활공간으로 확대 조성 필요

〈 임무 〉

국민에게 안전한 농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농업경쟁력을 강화하며, 농촌을 풍요로운
산업·생활·휴식공간으로 조성한다

〈 비전 〉

농식품 세계일류, 농촌 Global Top 10



- ◇ FTA·DDA협상 등에 적극 대응, 개방 피해를 최소화하고 협상에 대한 국민공감대 형성 노력
- ◇ '04년 2월 수립한 농업·농촌종합대책과 119조원 투융자계획을 3년간의 실적 평가와 한미 FTA등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보완

가 한미 FTA 협상

■ '07년 3월 협상타결을 목표로 양국간 입장차이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 민감품목은 품목별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양허방식과 농산물 세이프가드 적용 등을 통하여 타협안 마련

우 리 측	미 국 측
○ 쌀은 양허에서 제외	○ 쌀을 포함한 모든 품목이 협상대상
○ 민감 품목은 양허제외, 장기간 관세철폐, 세이프가드, 수입 쿼타 설정 등 예외적 취급	○ 민감 품목이라도 축산물, 과일 등 미국측 관심 품목은 전향적으로 양허방향 검토
○ 쇠고기 검역문제는 협상과 분리하여 대응	○ 쇠고기 검역문제도 협상과 연계하여 협상 타결시까지 합의 추진

■ 협상 타결까지 단계별로 예상되는 다양한 협상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상황별 전략을 마련하여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 협상전략 수립과정에서 품목단체 등 농업인들의 참여확대와 의견수렴을 통하여 협상에 대한 피해의식, 불안감을 경감
- 협상결과로 불가피하게 피해가 발생하는 품목은 농업계와 협의하여 범정부적 국내 보완대책 마련

■ 협상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 여러분과 공감대를 형성하겠습니다.

- 협상 전에 농민단체 등과 워크숍, 협상 후에 설명회를 개최하여 협상 진행상황에 대한 이해당사자 이해제고
- 국회 한미 FTA특위, 상임위에 수시로 협상내용 보고
- 언론 브리핑, 기고, 인터뷰를 통하여 협상정보 전파

나	기타 FTA 협상
---	-----------

■ 현재 진행 중인 FTA 협상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 아세안 : '06. 4월 상품분야 협상이 타결, '07년 상반기 중 국회 비준동의 후 상품분야의 조기 자유화
- 캐나다 : '07년말 타결 목표, 축산물 등 민감 품목에 대한 예외적인 조치 확보
- 인도 : '07년말 타결 목표, 쌀 등 민감 품목 양허 제외노력

■ 향후 예정된 FTA에도 철저하게 준비하여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 EU : '07년 협상개시 예정, 축산물 등 민감 품목은 양허에서 제외 되도록 노력
- 중국·호주·뉴질랜드 : '07년 산·관·학 공동연구 개시, 농업의 상당 부분 제외 등 실익 확보 노력

■ **관세와 보조금 감축폭 등 협상쟁점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협상이 극적으로 진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06.7월 협상 중단 이후 '06.11월 협상이 재개되었으나, 관세·보조금 감축폭 등에 대한 주요국간 입장차는 지속
- '07.6월말로 종료되는 미국 무역촉진권한(TPA)과 연계하여 3월말까지 협상 논의가 집중될 전망
 - 3월까지 핵심사항에 대한 진전이 있을 경우, '07년말 최종 타결 가능성

■ **우리나라가 속한 G10(수입국 그룹), G33(수입개도국 그룹)의 입장이 집중 공격받을 가능성에 대비하여 주도면밀한 전략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 핵심쟁점별로 우리와 입장이 유사한 나라들과의 공조를 강화하는 한편, 개도국 지위 확보를 위해 협상력 집중
 - 관세 상한 도입 저지 및 관세감축 최소화 쟁점은 G10 국가 그룹과, 개도국 특별품목 확보 문제는 G33과 공조체제 유지
- 최종 양자협상 과정에서 개도국 지위 확보를 위해 주요국 관심사항 사전 파악 및 대응전략 마련

■ **시장개방 가속화에 대응하여 농업정책의 근본적 변화와 함께
농식품 정책·농촌 정책이 대폭 강화됩니다.**

- 농업구조개선 촉진을 위해 농가유형별로 선택·집중 지원하는 「맞춤형농정」 제도 도입
- 국민의 안전한 식생활 보장을 위해 농식품 안전성 관리를 강화하고, 고품질 브랜드·이력추적제도 등 소비자 중심 대책 강화
- 주5일제 실시에 따른 도시민 농촌체험 수요 증가에 맞추어 농촌 관광·전원마을 조성 및 농촌지역개발사업 강화

■ **새로운 농정방향에 맞게 119조원 투융자계획을 조정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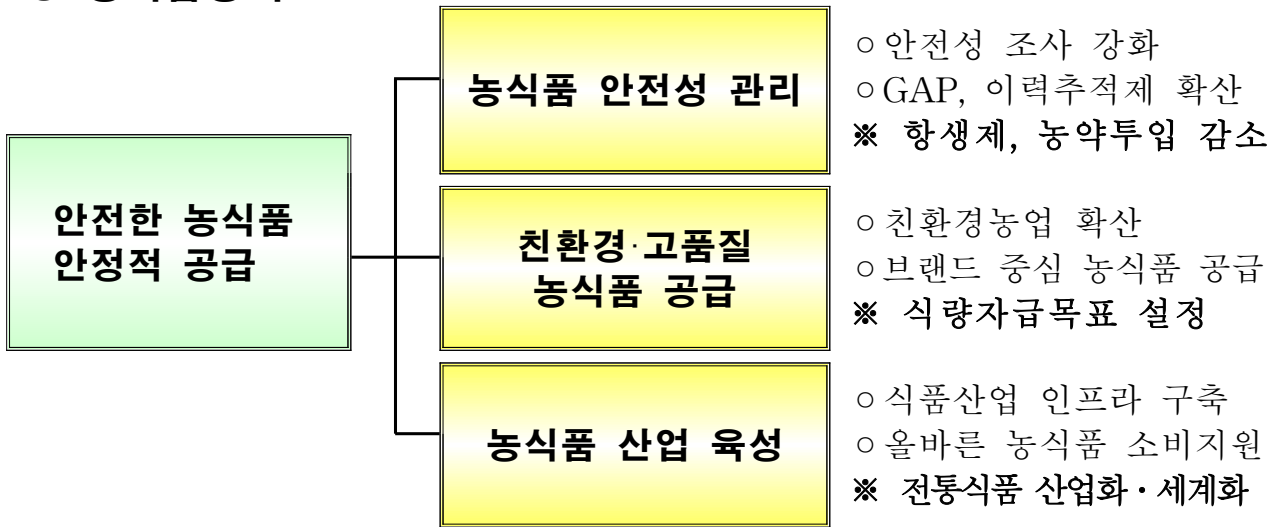
- 집행성과 분석에 따라 투자효율성이 낮은 사업은 과감히 정비, 투융자 시기도 정책단계에 맞춰 대폭 조정
- 농업구조개선 촉진, 농식품 산업 육성, 농촌 활성화 사업에 집중투자

■ **농업·농촌 종합대책 및 투융자 계획 조정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이 추진됩니다.**

- 「농업·농촌기본법」을 「식품·농업·농촌기본법」으로 개정하고, 농업과 식품산업의 균형발전을 위해 「식품산업진흥법」도 제정
 - 「FTA이행특별법」을 개정하여 한미 FTA 등 여러 나라와의 FTA 추진으로 인한 농가 피해 보전 등 보완대책 근거 마련
- ※ 농림사업 전반을 재검토하여 현장 적용에 문제가 있거나 투융자 효율성을 저해하는 사업 등을 발굴하여 법규 개정 등 ‘농림정책 리모델링’을 추진

《 농업·농촌 종합대책 정책과제 》

① 농식품정책



② 농업정책



③ 농촌정책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 **농가 소득문제 해결을 위해 농정을 맞춤형 패러다임으로 전환**

- 농업인력 육성을 전업농 집중 체제로 전환, 도시가구 이상 소득 실현
- 농가 등록제 등 맞춤형농정 추진을 위한 기반 마련

■ **농가유형을 구분, 정책대상을 명확히 하고 유형별 정책수단을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맞춤형 농정 기본 틀이 마련됩니다.**

- 농업의 주업 여부, 경쟁력 정도에 따라 농가를 4개 유형으로 구분
 - 전업농, 중소농, 고령농, 취미·부업농으로 분류
- 전업농과 중소농에 농업정책 지원을 집중
 - 규모화 촉진, 직불제 확충 등을 통해 실질적 소득안정 도모
- 고령농에게는 생계비 걱정 없이 은퇴할 수 있도록 별도의 지원방안 마련(조기은퇴직불, 농촌형역모기지론 등)
- 취미·부업농은 농업정책 지원 대상에서 제외

■ **각계 의견 수렴을 통해 금년 상반기중에 맞춤형 농정의 핵심 추진정책이 확정됩니다.**

- 농가유형별로 차별화된 구체적 정책지원 방안을 마련해서, 농업인 단체, 전문가 토론 등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

- 직불제 개편, 농촌형 역모기지론 등 맞춤형농정의 주요정책을 구체화
 - 농업인 단체, 전문가 의견 수렴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대상자, 지급조건, 지급수준 등 세부시행 방안 마련

■ 맞춤형 농정 추진의 핵심이 되는 농가 등록제가 금년 하반기에 시범 실시됩니다.

- 등록여부는 농업인이 선택, 미등록 시 정부지원 대상에서 제외
-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Agrix)과 연계, 등록프로그램 개발(6월)
- 다양한 농가형태의 현장적용을 위해 '07~'08년 시범사업을 거쳐 '09년 본 사업 실시

'07년 상반기	'07년 하반기~'08년	'09년
농가 등록 프로그램 개발	시범사업 실시	본사업 실시

■ 맞춤형 농정 추진을 위한 제도·조직이 정비됩니다

- 농가 등록제 등 농가유형별 지원 차등화를 위한 근거법률 마련
- 농가 등록제 추진을 위한 관련조직 정비(농산물품질관리원)
- 농업통계 조사 기준과 방식을 모든 농가대상 평균 개념에서 전업농과 중소농 위주로 개편

- ◇ 식품산업 육성으로 농산물의 생산과 소비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13년까지 식품·외식산업 매출액 110조원 달성
- ◇ 농식품 수출지원 및 시장개척 활동으로 '13년 농식품 수출 40억불 달성

가 식품산업 육성

■ 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및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 기술개발, 경영개선 지원 등 식품산업 발전 종합대책 수립
 - 농산물 수급에서 식품 가공·소비까지 통계정비를 위한 현황도 조사
- 식품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해 ‘(가칭)식품산업진흥법’ 제정
 - 식품산업 전반에 대한 육성 지원 및 전통식품·유기식품산업을 특화산업으로 육성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 구축
- 식품규격 제정 및 지리적 표시 등록 확대·내실화
 - 가공식품 및 전통식품 표준규격을 확대(제개정 40건)하는 한편, 지리적 표시의 지속적 확대(10개) 및 권리보호 강화

■ ‘韓 브랜드, 한식 세계화 지원 계획’ 이 수립·추진됩니다.

- 해외 한식당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주요 권역별 실태조사 추진
 - 실태조사를 토대로 해외 한식당 국가인증제 단계적 도입 추진('08년 이후)
- 우리 음식 및 식문화의 해외 인지도 제고를 위하여 외교관·언론인 등 오피니언 리더 대상 해외 식문화 홍보행사(6회) 추진

■ 전통주의 저변을 확대하고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를 도입하겠습니다.

- 전통주의 체계적 분류·표준화 및 소비촉진홍보를 통한 저변확대
 - 전통주 실태조사('07 상반기), 주종별 표준규격 설정(30종) 및 소비촉진 캠페인('07 하반기)을 통해 인식전환 및 저변확대 유도
- 유기가공식품 인증제 도입을 위한 인증기준 마련

■ 식품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농업과의 연계 강화를 지원하겠습니다.

- 식품외식업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설·경영자금 지원
 - 위생시설(HACCP, ISO 22000 등) 확충을 위한 자금 및 원료 구매에 소요되는 운영자금 지원
- 생산자와 식품외식업체 및 중간 유통업체간 네트워크 구축 지원
 - 생산자 조직과 식품유통, 식품외식업체와의 수직계열화 유도를 위한 표준거래 모델 개발 및 시범사업 추진

■ 어린이, 주부 등 홍보대상별 맞춤형 소비촉진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 TV·인터넷 등 홍보효과가 큰 영상매체 활용 및 계층별 맞춤홍보 추진
 - 애니메이션 방영, 캐릭터 활용 등 어린이·청소년 대상 소비촉진 홍보, 직장인 대상 건강프로그램 제작 등
- 쌀 등의 소비촉진 홍보를 위해 연령별 차별화된 홍보 추진
 - 아동·청소년(학습능력), 주부(다이어트 및 웰빙), 직장인(웰빙) 등
 - 지자체·품목단체별 특색있는 프로그램 추진 및 전문가 그룹 활용 홍보

■ 품목별·지역별 농식품 수출 확대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고 수출지원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 고품질 농산물 공급을 위한 수출전문 원예생산단지 지정을 확대 ('06 : 149개 → '07 : 155)하고 단지간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 수출물류비가 실질적인 수출증대로 연계되도록 지원방식 개선
 - 신규시장 개척에 대한 인센티브 상향조정(10%→30)

■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수출 유망품목을 발굴·육성하겠습니다.

- 멜론, 토마토, 딸기 등 수출 확대 가능성이 있는 농산물과 가공식품을 적극 발굴·육성
- 현지 마켓테스트, 상품개발비, 홍보비 등 해외시장 개척비용을 특별지원
- 안정적인 현지 정착을 위한 지원기간 조정(1년 → 3년)

■ 농식품 수출업체의 해외 마케팅 지원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 신규시장 개척 가능성이 높은 동남아, 인도 등 박람회 참가지원(24회)
 - * 자카르타 식품박람회(3월), 상파울로 식품박람회(7월), 인도 식품박람회(12월)
- 해외대형유통업체 입점을 위한 판촉행사 개최
 - 동남아 지역 입점시 인센티브 지원제도 시범도입
- 시장개척 가능성이 높은 지역의 해외 마케팅 전담 인력보강
 - * 싱가포르·상하이·도쿄·모스크바 상주인력 증원, 두바이 시장조사요원 파견

◇ **농축산물 브랜드화로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규격화·표준화를
통해 물류효율화 추진**

○ 산지-소비를 연결하는 농산물 판매체계를 구축

* '13년 브랜드 육성 목표 : 쌀 100개, 채소류 50개, 과실류 21개, 축산물 80개

가 고품질 브랜드 농산물 공급

■ **쌀 : 전문가평가를 거쳐 브랜드 경영체 8개소를 선정·지원합니다.**

- 시장·군수가 주도하여 시·군단위 공동브랜드를 활성화
 - 계약재배 내실화를 위해 마을 단위로 농가를 조직화하고 쌀
품질별 구분 관리를 위해 품종통일 등 실시
 - 브랜드 매뉴얼을 제작하여 RPC·지자체·지역농협 등에 배부 및 교육
- 우수 브랜드 경영체에 대해 개소당 20억원 기준의 시설현대화
자금, 개소당 2억원 기준의 교육·홍보비를 지원
- 소비자단체 주관 「시중유통 브랜드 쌀 평가」를 계속 실시하고,
12개 우수브랜드를 선정하여 홍보 실시

■ **채소류 : 주산지를 중심으로 우수브랜드 경영체 2개소를 선정·지원합니다**

- 생산에서 유통단계까지 계열화, 브랜드화 할 수 있도록 교육·
컨설팅, 종합처리시설, 공정육묘장 등 지원
- 개소당 200억원(국고 38억원, 지방비 43, 융자 105 등)을 3년간 분할 지원

- 지자체는 지역여건에 맞는 원예산업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브랜드 경영체는 상품화·브랜드화를 위한 생산관리 프로그램 개발 수행

■ 과실류 : 전국·광역 공동 브랜드경영체 8개소를 선정·지원합니다.

- 브랜드 경영체에 대해 생산에서 유통단계까지 브랜드 품질관리, 마케팅 운영, 홍보비 등 지원
 - 사업량 : 8개소, 총 22억원(품질관리 5억원, 마케팅 6, 홍보 11)
- 거점산지유통센터 중심의 과실 브랜드화 및 계열화를 위해 운영 상황을 지속 점검·평가하고, 경영안정화를 위한 컨설팅 추진

■ 축산물 : '04~'06년까지 선정된 73개 축산물 브랜드 경영체를 집중 지원하여 규모화·내실화를 추진하겠습니다.

- 브랜드 관리 및 사업평가 결과 우수한 경영체에 대하여 무이자 인센티브자금(200억원) 지원
 - 브랜드경진대회 입상 경영체 20개소, 개소당 10억원 내외 지원
 - 브랜드 경영체를 대상으로 「축산물브랜드컨설팅」을 실시하여 브랜드 경영체의 체질 강화 및 경영마인드 개선(10개소, 5억원)
 - 기존 브랜드경영체 상호간 통합 및 인근 일반농가 참여를 통한 브랜드 광역화로 시장 교섭력 강화 유도
 - 한우의 경우 도별 1~2개 광역브랜드 육성
 - 브랜드 기반 확충 및 역량 강화를 위해 「브랜드 경진대회」·「브랜드 인증」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 품질, 위생·안전, 브랜드관리 등을 평가하는 브랜드경진대회 개최(9월)
- * 연도별 브랜드 인증 : '04년 18개(한우8, 돼지 10) → '05년 25개(한우 13, 돼지12) → '06년 36개(한우15, 돼지14, 육우 2, 육계5)

■ 규격화·표준화를 통한 물류효율화를 위해 농축산물 포장유통을 추진합니다.

- 산물 유통관행 개선을 위해 전국 32개 공영도매시장에서 배추·무 포장유통 전면 시행
 - 포장출하로 인한 추가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적정 수준의 포장재비 지원
 - * 그물망, 골판지상자 등 포장재 가격의 60~90%수준 지원('07예산 : 170억원)
- 유통과정에서 미생물 등에 의한 재오염 방지를 위해 닭·오리 고기의 포장유통 의무화 시행
 - 금년에는 1일 평균 도축수 8만 이상인 도축업자에 대해 시행하고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의무화 대상 확대 추진

■산지에서 소비지까지 저온유통체계 구축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 예냉·저온저장 시설 확충과 저온수송 장비 보급 확대 등
 - * 생산자단체에 농산물 수송용 적재함(탑) 차량 개조 우선 지원(100대)

■ '09년 차세대 물류표준으로 정착될 RFID 도입을 준비하겠습니다.

- 농산물 분야 표준을 마련('07)하고, 표준코드 사용을 활성화 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 체계 정비('08)
 - * RFID : 포장단위로 물류흐름, 생산이력 등을 무선주파수를 통해 관리

■ 32개 도매시장별 거래품목 및 거래특성을 반영한 운영 제도개선 및 시설현대화 계획 수립을 위한 가이드 라인을 설정하겠습니다.

■ 협동조합이 산지유통의 핵심이 될 수 있도록 농산물 판매사업을 대폭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일선조합 합병·공동사업법인 설립 등 조합의 규모화·전문화 추진
 - 정부와 중앙회의 자금 지원, 부실액 보전 등을 통한 일선조합 구조조정 가속화('07 : 50개 합병 등)
 - 연간 300억원 이상의 농산물을 판매하는 조합공동사업법인 5개소 신규 설립 및 과수·축산 등 품목조합 10개소 육성
- 일선조합 경제사업 평가 및 리스크관리체계 구축 등 중앙회의 일선조합 경제사업 지원 방식을 체계화
 - 경제사업 매출액, 출하협약 체결 비율 등을 기준으로 산지조합 경제사업 평가시스템 마련, 차등하여 인센티브 지원

■ 중앙회는 소비지 마케팅 기능을 강화하여 일선조합의 판매 사업을 지원하게 됩니다.

- 도시조합의 중대형 농산물판매장(3,300㎡미만) 25개 신설(누계 175)
 - 정부의 시설자금 융자 지원규모 확대('06 : 50억원 → '07 : 440)
- 중앙회 자체 자금 2,000억원을 투자, 대형판매장 2개소 신설(누계 17)
- NH 식품 등을 설립('07), 신규 수요를 창출하고 부가가치 제고

* 소비지 유통 점유비 : ('05) 6.7% → ('07) 8.0 → ('13) 13

◇ 소비자에게 안전한 농축산물 공급을 위해 농식품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및 해외 악성 가축질병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고 초동방역 실시

- 비위생적 수입농산물의 국내 시장접근을 차단하고 부정유통 방지

가 농식품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 농산물 안전성 관리 >

■ 우수 농산물 관리제도(GAP)를 확산하고 및 이력추적 제도의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 참여농가를 1만호 수준('06 : 3,600호)으로 확대, GAP 유통비율 1% 확보('13년까지 10만호, 유통비율 10% 목표)
- 대형유통업체의 GAP 민간인증기관 지정을 25개 기관으로 확대 하고, 인증대상품목도 100개로 확대('06 : 21개 기관, 96개 품목)
- 이력추적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 보강 등 인프라 구축 추진

* 농림부·해수부 합동으로 농식품안전정보시스템 확충

■ 농산물 안전성조사를 강화하고 검사시설 설치를 확대하겠습니다.

- 생산단계를 중심으로 농약·중금속·미생물 등 안전성 조사 확대
 - 깻잎, 상추 등 30개 품목 중점 관리, 조사건수 확대('06 : 66천건 → '07 : 68)
 - 농약위주 조사에서 중금속(1만건, 125개 폐광산)으로 확대
- 농약 정밀 분석을 위한 거점분석실을 5개소 설치('07 누계 : 15개소)

< 축산물 안전성 관리 >

■ 잔류물질 검사 및 수거검사 등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겠습니다.

- 식육 중 잔류물질 규제검사 물량 확대
 - 잔류검사 120천건 중 규제검사 물량 확대 : ('06) 10.8% → ('07) 13.5
 - * 규제검사 대상 : 위반농가 출하기축, 긴급도살·주사자국 등 위반가능성이 높은 축산물 등
- 축산물(식육, 가공품 등)에 대한 수거검사 물량 확대
 - 검사물량 : ('06) 6,720건 → ('07) 7,500
- 포장육 및 판매지육 등 유통중 식육에 대한 미생물 권장기준 설정

■ 쇠고기 이력추적제를 확대하고 법적 근거도 마련하겠습니다.

- 시범사업 범위를 한우 위주에서 육우까지 확대하고, 시·군 단위에서 도 단위까지 사업 추진방식 다양화
 - 이력추적제 참여 규모 : ('06) 210천두 → ('07) 650
- '08년 본사업 시행에 대비하여 법적근거 마련

■ HACCP을 확대 적용하고 도축장 운용수준 평가도 추진합니다.

- 소 사육단계, 축산물 보관·운반·집유단계 HACCP 지침 및 모델 개발
 - 지침 및 모델 개발 후 농가·관련기관에 배포하고 평가기준을 마련·적용
- 도축장 HACCP 운용수준 향상을 위한 평가 사업 추진
 - 평가위원회와 실무평가단에 의한 평가를 실시하여 우수 도축장에 운영자금 차등 지원('07 : 638억원)

■ **시는 기발생 지역에 대한 방역조치를 마무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상시 방역대책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 조기 검색·경보발령, 현장조치 및 부처 협조체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NSC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 및 SOP 보완
- 유입경로별 차단검역과 소독·예찰 등 상시 방역대책 추진
 - 해외 발생정보 수집(매일), 발생국 가금류 수입중단, 여행객 검색 등
 - 전국 가금류 농장의 소독·예찰(주1회), 종오리 농장(66개소) 및 도축장 출하오리에 대한 혈청검사(10천건), 농가 교육·홍보 등
- 국내 유입 위험성이 높은 11~2월에는 특별방역 추진
 - 철새 도래시기에 가금류의 철새 접촉 차단, 철새 포획검사, 전국 종오리 일제 분변검사 등 더욱 강화된 예방·경보체계 가동

■ **구제역은 3~5월을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해 국경검역 및 국내방역을 추진하여 비발생 상황을 계속 유지하겠습니다.**

- 수입 건초의 소독·정밀검사, 모든 입국자의 신발 소독(발판 소독조 232개소), 여행객의 휴대 육류 검색 등 실시
- ‘일제소독의 날’(매주 수요일)에 공동방제단(3,880개반)을 동원하여 소독, 시·군별 가상훈련(CPX), 예찰활동 및 교육·홍보

■ **소부루세라병은 단기간 내 근절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검사대상을 확대하고 사람 감염 예방대책을 강화하겠습니다.**

- 거래 수소 및 농장에서 사육중인 1세 이상 모든 소까지 검사대상 확대
 - * 현재는 거래 암소, 10두 이상 농장 및 다발지역의 사육소에 대해 검사
- 발생농장 인근 지역(500m이내) 및 역학관련 농장에 대한 검사 의무화
- 사람 감염 실태조사 확대 및 감염자 치료 지원방안 강구
 - 질병관리본부와 협의하여 사람 감염실태 조사 대상 확대 및 감염자 치료 지원방안 등 강구
- 농장 감염율이 크게 상승하는 등 상황 악화시 예방접종 검토
 - * '07년 농장 감염율은 '06년(2.2%)보다 감소한 2% 이내 달성 목표

■ **돼지콜레라는 예방약 100% 공급 및 혈청검사 실시, 예방접종 미실시 농가에게 과태료 부과 등 방역대책으로 청정화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 예방약 40백만두(34억원) 공급 및 혈청검사 210천두 실시
 - * 발생건수 : ('03) 72건 → ('04) 10건 → ('05) 5건 → ('06) 2건

■ **'07년부터 매년 150명의 공익수의사가 지자체·가축위생시험소·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배치되어 가축방역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 군사·직무교육(3~4월)을 거쳐 현장 배치(5월), 3년 복무
- '09년부터 연간 450명의 공익수의사 운영

■ **농산물 원산지 표시제도를 가공·포장단계에서 최종 소비단계인 음식점 단계까지 확대하고 민관 합동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 '07년 구이용 쇠고기(음식점 300m²이상), '08년부터 쌀에 적용하는 등 음식점원산지 표시제 확대 추진
- 원산지 단속을 위한 명예감시원 정예화 및 합동단속 강화
 - 명예감시원을 정예감시원(3천명), 신고감시원(22천명)으로 구분·운용하고 감시능력 향상을 위한 전문교육과정을 신설

■ **쌀 의무수입물량 도입에 따른 수입쌀 부정유통 방지에 노력하겠습니다.**

- 부정유통 예방을 위해 수입쌀 단속 상황실을 설치·운영하고 수입쌀 입찰정보를 활용하여 전 유통과정을 집중 추적 감시
- 수입쌀 식별능력 제고를 위해 중국산 벼 DNA 마커 51점 개발(상반기)
- Non-GMO 쌀 도입을 위해 3단계 원칙을 마련하여 운영
 - 선적전 수출국 정부기관 확인, 국제검정기관 검사, 국내도착시 식약청 검사 실시 의뢰 등

■ **식물 해외병해충 유입 방지 등 수입농산물 검역을 강화하겠습니다.**

- 유전자합성시스템, 세균검사기 등 첨단 검역장비(61종 525대)를 구입하고 전문 검역인력 확충(18명)

◇ **친환경농산물 유통활성화, 가축분뇨 퇴·액비의 경종작물 시비 확대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농축산업으로 발전**

- '13년까지 친환경농산물 생산비중 10%, 가축분뇨 자원화율 90% 달성

■ **친환경농업 기반을 조성하고 친환경농자재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 시·군 단위로 생산·유통 및 관광을 연계한 1,000ha 규모의 광역 친환경농업단지 조성('06 : 3개소 → '07 : 6개소 추가)
 - 읍·면 단위는 10ha 규모의 친환경농업지구 조성('07 : 59개소)
- 유기질비료 지원 확대로 화학비료 대체 유도(135만톤, 473억원)

■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를 내실화하여 소비자 신뢰를 제고하겠습니다.**

- 무항생제축산물인증제 신설 및 인증품 재포장에 대한 인증제 도입
- 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 위반행위 행정처분 기준 신설 등
-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의 이력추적제 참여 확대 유도
- 자재선택 편의 제공을 위한 친환경농자재 목록공시제도 도입

■ **친환경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 농업의 다원적 기능, 친환경농업 중요성 등 초등학생용 친환경 농업 부교재를 제작, 초등학교에 제공(4만부)하고 교육 실시
- 자조금 사업으로 소비촉진 홍보, 품질관리, 시장개척 등(8억원) 추진

■ 가축분뇨 자원화 효율성을 증진시켜 해양배출 물량을 감축하겠습니다.

- 우수 자원화 시스템 정보 제공 및 공동자원화 시설 설치 확대
 - '07년 5개소를 시범 설치하고 '08년부터 연간 10개소로 확대
- '12년 가축분뇨 해양배출 금지에 대비하여 '07년부터 연간 40만톤 이상 감축하여 전량 육상처리 추진
 - 지자체 감축노력을 평가하여 가축분뇨 처리지원사업 자금 차등 지원

■ 가축분뇨 퇴·액비 생산·유통 우수 조직을 중점 육성하겠습니다.

- 농·축협 등 자연순환농업 협약('07 : 30개소)을 추진하고 자연순환농업 활성화 자금 지원('07 : 160억원, 3년거치 일시상환)
- 살포실적 우수 액비유통센터에 장비 추가 지원('07 : 6개소, 개소당 1억원)

■ ‘가축분뇨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에 대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 가축분뇨 퇴·액비 이용이 용이하도록 하위법령 제정
 - 축산농가에 액비화 시설 설치시 전문 유통조직과 살포계약을 체결하면 농경지 확보 의무 면제
- 시·군별 양분 정보 파악을 위한 기초자료 조사 및 정보제공 등을 통한 지역단위 양분총량제 시범사업 계획 수립

■ 농지법 개정에 따라 경종농가와 연계된 친환경축산 표준 모델을 개발하여 보급하겠습니다.

- 축종, 사육규모, 지역여건 등을 고려한 표준화된 설계도 제작·보급

- ◇ 재해에 안전한 영농기반 구축을 바탕으로 직불제, 재해보험, 자조금 조성 등 가격, 재해, 수급불안에 대응한 소득안정장치 마련

가 직접지불제 확충

■ 농업구조개선 촉진 및 농가소득안정을 위해 현행 품목별 가격차 보전방식을 보완하는 중장기 직불제 개편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 밭농업, 과수, 축산까지 포괄하는 직불제 체계화 방안 검토
- 외국 사례 및 농가소득 현황분석 등을 통해 모델 개발('07)
 - 농가소득 파악을 위한 등록 방안 마련후 '09년 시범사업 실시 목표
 - * 농가등록제 시행후 취미·부업농 등을 쌀소득보전직불제 지원대상에서 제외 검토

■ 조건불리 직불제 및 경관보전 직불제 등 기존 직불제가 확대됩니다.

- 조건불리지역 직불은 도서지역 지급대상을 전 도서(제주도 포함)로 확대
 - * 대상지역/예산규모 : ('06) 119천ha / 331억원 → ('07) 188 / 523
- 경관보전직불은 대상품목과 대상면적을 확대
 - * 대상품목 : ('06) 유채, 메밀, 코스모스, 해바라기, 목화, 야생화 → ('07) 연, 자운영 추가
 - * 대상 면적 : ('06) 470ha(6억원) → ('07) 800ha(10억원)
- 친환경농업직불 지속 확대('06 : 27천ha/141억원 → '07 : 43/175)

■ 바람직한 농업구조 실현을 위해 고령농 은퇴촉진을 위한 조기은퇴 직불제 도입 등 구조조정형 직불제 강화대책도 마련하겠습니다.

■ **농지은행을 통한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지원대상이 확대됩니다.**

- 지원요건을 완화(연체금액 5천만원 이상→부채금액 5천만원 이상)
- 경영위기 농가 농지매입 확대('06 : 311ha/422억원 → '07 : 372/566)

■ **'07년 상환도래 예정인 상호금융 저리대체자금(3,389억원)에 대해서도 추가연장 조치를 실시합니다.**

- 원금 10%상환시 5년 분할상환(3%), 그 외는 3년 분할상환(5%)
 - * '06.12.31 기준, 순지원대상 3조8,438억원 중 3조7,046억원(96%) 신청
 - * '07.1~6월 신청접수, 12월말까지 대출 실시

■ **농업관련 정책보험(공제)의 대상품목 및 축종을 지속 확대하고, 제도개선을 통해 국가 보장범위도 확대하겠습니다.**

- 대상 품목/축종 : ('06) 7개/9개 → ('07) 10개/11개
- 품목확대의 제약요건인 기초자료 미비와 민간보험사 참여 기피를 해소하기 위해 시범사업 추진 품목의 국가재보험 보장범위를 확대
- '08년에 시범사업으로 추진 가능한 품목(예 : 콩, 감자, 고추 등)에 대한 표준수확량 및 손해평가방식 연구용역 등 실시

■ **농작물, 가축, 농업시설 등으로 분산되어 있는 정책보험을 「농업재해 보험」으로 개편, 운영 효율성과 위험관리 능력을 극대화하겠습니다.**

- 금년부터 농업시설 부문을 포함한 농업 재해보험 확충방안 마련

■ 저수지, 양·배수장 등 주요 수리시설을 재해대비 위주로 보수·보강을 추진하겠습니다.(개보수 예산의 60%이상 주요시설 집중지원)

- 홍수량 증가로 인한 재해 예방을 위해 아산만 배수갑문 확장(120m→290m) 등 하구둑 구조개선 추진('07 세부설계)

■ 상습침수 농경지 119지구(31천ha)에 배수개선 사업을 추진하여 그중 20지구(3.3천ha)를 준공하겠습니다.(배수개선을 '06 : 71%→'07 : 73%)

- 논에서의 원예작물 침수방지를 위한 배수개선 4개지구 시범 추진

■ 시중은행이 취급할 수 있는 정책자금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 자금규모, 용자조건, 대출취급의 전문성, 수혜자의 범위 등을 종합 고려하여 개방대상 정책자금 선정
 - * ('04~'06) RPC운영자금, 농기계구입자금, 축발기금 → ('07~'08) 농축산 경영자금 등 용자사업의 50%이상 → ('10) 전면개방
- 시중은행 취급 확대에 대응하여 정책자금 관리단의 관리범위 확대 추진
 - 관리범위 확대 : (현행) 농특회계 용자금 → (추가) 이차보전자금

■ 정책자금의 원활한 대출을 위해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건전화를 추진하겠습니다.

- 농신보 건전성 제고를 위해 정부출연을 7,357억원('06 : 5,780억원)으로 확대하고, 일선조합이 심사하는 위탁보증 비율 축소
 - * 직접보증 점유율(건수 기준) : ('05) 2.8% → ('06) 3.3 → ('07P) 10.6

■ '08년부터 채소류 「최저보장가격제도」를 가격하락에 따른 손실을 공동으로 부담토록 하여 자율적인 생산 조정을 유도하는 「계약 재배안정화사업」으로 전환합니다.

- 시범사업('06 : 무·배추 등 4품목 → '07 : 양파·대파 등 8품목) 결과를 바탕으로 본사업 계획 확정

■ 자조금 조성 품목을 확대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 원예는 인삼 등 2개 품목에 대한 신규 자조금단체 결성을 추진, 축산분야는 오리 등 기타 가축의 임의자조금 도입방안 마련
 - 육계 임의자조금을 의무자조금으로 전환('08년 목표)하기 위해 의무자조금 준비 대의원회 개최 및 관리위원 선출
- 영세한 원예자조금의 규모화를 위해 현행 '당해년도 거출, 당해년도 소진 원칙'을 적립이 가능한 목적기금으로 제도 개선
 - 자조금 단체 및 전문가 의견 수렴, 농안법 시행령 개정
 - * 원예자조금 발전로드맵: ('07) 자조금의 목적기금화 → ('08) 차등지원체계 구축 → ('10) 회원범위 확대 및 의무자조금 도입
 - * 원예품목 자조금단체 생산점유비중 : ('04) 15% → ('06) 33 → ('07) 38 → ('13) 68
- 축산자조금은 수납기관 수수료 인상 및 대의원 총수 하향 조정 등 자조금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안을 마련, 관계기관·단체의견 수렴
 - * 축산품목 자조금 거출율 : ('04) 68% → ('06) 75 → ('07) 77 → ('13) 89

- ◇ 마을-권역-면소재지 등 정주체계에 따라 농촌지역개발 사업 체계를 정비하여 삶의질 및 지역개발 계획에 따라 추진
- ◇ 농업인 및 농촌주민에 대한 의료·교육·복지 등 지원을 강화

가 체계적인 농촌지역개발 추진

■ 면소재지 및 배후 중심마을에 대해 농촌마을종합개발 136개 권역(사업시행 56, 시행계획 40, 기본계획 40)이 추진됩니다.

- 기본계획 40개 권역 중 4개 권역은 거점면 기능강화를 위한 면소재지 중심마을개발 시범 추진('07 기본계획, '08~'10 사업시행)

■ 농촌 노후 불량주택(5,600동)에 대한 신개축이 지원됩니다.

- 농촌의 특수성을 고려한 다양한 농촌표준주택 설계도 개발·보급, 농촌주택 사이버 컨설팅 센터 운영 등을 추진

■ 농촌지역개발사업 체계화를 위한 세부추진계획이 마련됩니다.

- 오지종합개발과 농촌정주기반확충, 신활력지원과 지역특화사업 등 유사사업을 통합하여 단일사업으로 '08년 예산에 반영
-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과 농촌주택정비사업은 '07년에 지원조건을 단일화, '08년 이후 지원한도 확대 및 금리 추가인하 검토
 - 지원한도/대출금리 : ('06) 30, 40백만원/3~4% → ('07) 40/3.4%
- 농어촌정비법 개정 등 사업이관에 따른 관련법령 정비 추진

■ 건강보험료 지원을 차등화하고 연금보험료 지원을 확대합니다.

- 농업인 가구에 대해 건강보험료 지원을 소득별 차등(22~50%) 또는 배제하여 형평성 제고('07년중 관계 법령 개정)

* 건강보험료 50% 지원시 연간 평균 경감액 : ('06) 420천원 → ('07) 426

- 연금보험료 지원 기준등급 상향 조정('06 : 13등급 → '07 : 14등급)

* 연금보험료 연간 1인당 최대 지원액 : ('06) 259천원 → ('07) 280

■ 여성농업인의 보육여건 개선과 취약농가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 영유아 양육비 및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액 인상

- 만 6세 취학유예아동 및 준농어촌지역 거주 농업인 자녀 신규 지원

* 영유아 양육비 지원 : ('06) 정부보육료의 50%(128천원/월) → ('07) 70%(176.5천원/월)

- 농업인이 농작업 및 교통사고시 농사일을 대행해 주는 '영농도우미' 지원 대상 확대('06 : 13억원 → '07 : 28억원)

* 지원조건 : ('06) 65세미만, 3ha미만 → ('07) 69세이하, 5ha 미만

- 자원봉사자 활용, '가사도우미' 지원대상 확대('06 : 7억원 → '07 : 11억원)

* 지원조건 : ('06) 65세이상 단독·편조손 농가 → ('07) 65세이상 고령가구

■ 농촌 여성결혼이민자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지원하겠습니다.

-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우리말 교육과 상담을 실시하는 방문교육도우미 제도 운영('07년 30개 시군 시범 실시, 국고 19억원)

- 방문 교육도우미 300명 선발, 이주여성 1,800명에게 교육

- 부부교실, 가족캠프, 모범가정 모국방문 지원 및 정착사례집 발간 등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의 통합 지원

- ◇ 도농교류 및 도시민의 농촌유입을 촉진하여 농촌활력 증진을 도모
- ◇ 농촌지역의 향토자원을 생산, 가공, 유통, 관광 등과 연계하여 1·2·3차 산업의 융복합화 추진

가 도농교류 촉진 및 도시민 농촌유치

■ 1사1촌 운동을 내실화하여 국민적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 자매결연 사례별 교류 실태를 전수 조사하여(상반기) 실적이 미흡한 사례는 자매결연 사례에서 제외
- 1사1촌 자매결연 시범마을 육성('07년 15개) 및 홍보 추진

■ ‘[가칭]도농교류촉진법’ 제정을 추진하겠습니다.[4월 국회제출]

- 체험·휴양마을의 음식 제공, 공동숙박 등 특례 마련
- 도시민 현장체험, 초·중등학생들의 농촌체험교육 근거 마련
- 농촌체험 지도사 등 도농교류 전문인력 양성 근거 마련 등

■ 전원마을조성사업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 추진중인 55개소는 실태조사 후 추진방식 등 재조정
 - 15개소 추가 착수하고 '08년 사업지구는 지자체 공모방식으로 선정
- 입주자 형태, 지역특성에 맞게 다양한 방식으로 제도개선
 - 전원마을조성주체를 시·군, 한국농촌공사에서 민간으로 확대

■ 시·군의 도시민 농촌유치 프로그램을 신규 지원합니다.

- 도시민 유치를 희망하는 시·군이 ‘도시민 유치대책’을 수립하고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경우 재원의 일부를 중앙정부가 지원

* 지원프로그램(안) : 도시민 유치홍보, 농촌이주 도시민이 참여하는 지역사회 봉사프로그램 운영, 전문가 컨설팅 비용 보조 등

- 10개 시·군을 선정(6월)하여 최대 3년간 10억원 내에서 도시민 유치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시범사업 실시

- 시범사업 대상지역은 이미 도시민 유치사업을 부분적으로 추진 중인 시·군, 인구 과소화 시·군 등을 대상으로 선정

■ 도시민의 농촌정주지원 토털서비스를 지속 보완·발전시키겠습니다.

- 농촌의 교육·복지·문화·인프라 등 생활정보서비스 강화

- 행정리 단위로 교육·복지·문화, 기초생활시설 정보로 온라인상으로 제공하는 (가칭)『삶의질 서비스맵』 구축(하반기 시범서비스)

- 포탈이용자가 정보 콘텐츠를 구성·발전시키는 ‘이용자 참여형 (UCC, User Created Contents)’서비스 체계 구축

- 전원생활, 주택건축 등 분야별로 전문적인 전화상담, 현장안내 등 오프라인 서비스 개선

- 농촌정주의향 도시민을 대상으로 한 전원생활교육 지속

- 바람직한 농촌주택모델 및 농촌마을정비모델 등 홍보·안내를 위해 『미래농촌전원마을 홍보관』 조성·운영

■ 신활력사업, 지역농업클러스터 등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겠습니다.

- 1단계 신활력사업 마무리 및 2단계('08~'10) 사업 준비
 - * 신활력사업 등 지역개발사업의 심사·컨설팅을 위한 “농촌활력지원센터” 설립 검토
- 지역농업클러스터 시범사업의 사업성과 제고를 위한 방안 강구
 - 20개 사업단 추진 성과를 평가, 우수 사업단에 인센티브(21억원) 부여
 - 지역농업클러스터를 포함한 지역농산업 혁신방안 마련
- 향토자원의 발굴·산업화 및 농공단지 조성 지속 추진
 - 19개 자원(기본계획 기수립) 사업시행 및 30개 자원('06 선정) 기본계획 수립
 - 금년중 향토자원 관련 제도개선 및 향토자원 30건 추가 발굴
 - 농촌일자리 창출을 위한 농공단지 조성 지원('07 : 6개소)

■ 농촌체험마을 도시 방문객의 전년대비 15% 증가(1,544천명)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 녹색농촌체험마을(84개소), 농업·농촌 테마공원 조성(4개소) 및 마을사무장 채용 지원(150명) 확대
- 농촌체험활동 중 사고발생에 대비한 보험가입(65개), 전문 컨설팅이 필요한 마을에 전문가 지원(50개) 지속 추진
 - * 도농교류페스티벌(5.3~6), 초등교사 농촌체험(7~8월), 여름휴가 캠페인(7~8월)
- 농로, 임도 등을 활용한 농촌형 승마모델 정립·보급(상반기)
 - * 농촌 승마장 설치 지원 : ('06) 4개소 → ('07) 10개소

■ 「**농촌경관지표 적용 → 경관맵 작성 → 경관보전협약 체결**
후 농촌개발사업을 시행하는 ‘先농촌경관계획-後사업시행’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 농촌경관지표, 경관맵 및 경관보전협약체결 활용 매뉴얼 개발
- 매뉴얼을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등에 시범적용 후 확정
 -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3곳, 전원마을조성사업 1곳에 시범적용
- 지자체에서 일정지역단위로 종합적·계획적인 농촌경관개선이 가능하도록 「농촌경관계획 수립기준」 제정

■ **환경부와 공동으로 최근 5개년 평균 수질기준 초과 72개 농업용 저수지·담수호에 대한 사업 계획을 수립·추진하겠습니다.**

- 농업용수 수질관리 지침을 제정하고, 지구별 상류부 대책과 호소내 대책의 공동 수질개선계획 수립
- 주요 농업용 저수지·담수호 500지점의 수질조사를 실시(분기별) 하고, 수질기준 초과 저수지는 수질개선 사업추진

■ **산성화된 농경지에 살포가 편리한 입상(알갱이)화 된 토양개량제 공급을 확대하고 중금속 오염방지 노력도 강화하겠습니다.**

- 가루형태의 개량제를 입상으로 전환 확대('06 : 47% → '07 : 62)
 - * '07 토양개량제 공급계획 : 401억원(규산 294천톤, 석회 253천톤)
- 중금속 오염우려가 높은 산업단지, 쓰레기매립장 주변 농경지 오염도 조사를 실시, 중금속잔류허용 기준초과 농산물 수매·폐기
 - * '07 토양오염조사 계획 : 10억원(31개 산업단지, 쓰레기 매립장 주변 농경지)

2030년 우리 농업 · 농촌의 모습 **IV**

1. 비전 2030 추진체계

2. 미래 우리 농업 · 농촌의 모습

비·전

농식품 세계일류, 농촌 Global Top 10

목·표

경쟁력을 갖춘
전문화된 농업소비자가
신뢰하는 농식품활력 있고
쾌적한 농촌세
부
과
제

□□ 농업 생산·유통
구조혁신

□□ 농가의 소득 및
경영안정

□□ 새로운 성장동력
확충 및 수출확대

□□ 농식품
안전성 강화

□□ 농식품 친환경·
고품질화

□□ 한국식문화의
세계화

□□ 농촌의
생활인프라 확충

□□ 농촌의 경관·
환경 개선

□□ 교육·복지·문화
여건 개선

농 업

농식품

농 촌

■ 규모화·전문화된 농업경영체 중심의 경쟁력있는 농업을 실현하겠습니다.

- 농가인구가 총인구의 3%수준인 선진국형 농업경영구조로 개편
 - * 총인구 중 농가인구 비율 : ('05) 7.1% → ('10) 6 → ('20) 4 → ('30) 3
- 농업생산은 전문경영체 중심으로 이루어져 경쟁력있는 농업 실현
 - * 쌀 전업농 생산 비중 : ('05) 30% → ('10) 41 → ('20) 60 → ('30) 79
- 농가소득은 규모 확대와 직불제 확충 등으로 도시가구소득과 균형 달성
 - * 1인당 도농간 소득격차 : ('05) 95.2% → ('10) 98 → ('20) 102 → ('30) 105

■ 안전하고 다양한 농식품 생산·공급과 건강한 식생활을 유도하여 세계 일류의 한국 식문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 농식품의 친환경·고품질화로 소비자가 믿고 찾는 우리 농식품
 - * 농산물 잔류농약 허용기준 적합률 : ('05) 97.7% → ('10) 97.9 → ('20) 98.2 → ('30) 98.5
- 바람직한 식생활 지침개발 및 올바른 식문화 운동 전개를 통한 건강한 식생활 형성으로 국민건강에 기여
- 한국 식품의 해외시장 개척을 통한 농산물 수출 확대
 - * 농산식품 수출액 : ('05) 20.7억불 → ('10) 40 → ('20) 70 → ('30) 100

■ 도시수준의 교육·복지·문화 서비스를 누릴 수 있고 전통과 문화가 보전되는 살고싶은 농촌을 구현하겠습니다.

- 양질의 교육환경 조성, 공공의료 시설 및 생활인프라 확충
 - * 상수도 보급률 : ('05) 34.3% → ('10) 60 → ('20) 90 → ('30) 100
 - * 농촌주민의 삶의질 만족도 : ('05) 37.4% → ('10) 49 → ('20) 55 → ('30) 60
- 농촌경관개선, 농촌체험마을 확대 등을 통해 단순한 도농교류활동이 체류형 농촌관광으로 발전
 - * 국내관광에서 농촌관광 비중 : ('05) 15% → ('10) 20 → ('20) 40 → ('30) 45

2007년 국민과 함께하는 업무보고

